

세미나자료집 16-S11

2015년도 고유과제 연구 성과 발표회(2차) 청소년 활동 강화와 복지 지원

일시 _ 2016년 4월 4일(월) 14:00~17:00

장소 _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컨퍼런스홀



인 사 말 ■ ■ ■

모든 만물이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다시 힘찬 도약을 준비하는 생명의 계절을 맞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수행했던 연구 성과들을 널리 공유하고 확산시키고자 2015년도 고유과제 연구 성과 발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발표회에서는「청소년 역량 개발과 자립 지원」이라는 주제로 4개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년들의 사회적 역량에 대한 국제비교를 위한 연구인 ‘청소년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를 살펴보고, 동북아 국가들의 청소년정책 현황과 시사점 도출을 위한 연구인 ‘동북아 청소년정책 국제비교 연구’ 그리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들에 대한 실태와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인 ‘대학비진학 청소년 역량개발 정책사업 추진방안 연구’, 마지막으로 후기 청소년 대상 아르바이트 실태와 정책적 수요를 검토하고자 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등에 대해 현장·학계·정부부처의 의견을 모아 정책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제2차 발표회에서는「청소년 활동 강화와 복지 지원」이라는 주제로 4개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년의 사회공동체성 강화를 위한 연구인 ‘청소년 나눔활동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실태와 인권상황에 대한 시계열적 자료를 축적해 온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그리고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정책의 체계화를 위한 연구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마지막으로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한민족 구성원으로써 공동체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한 연구인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의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등의 과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지난해 수행된 연구들이 향후 보다 내실 있고 발전적인 청소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바쁘신 중에도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전문가 분들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이번 성과발표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4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한기

세 부 일 정

시 간	진 행 내 용
사회 : 최인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예산기획실장)	
14:00~14:10	▣ 개회식 - 개회사 : 노 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좌장 : 황진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14:10~14:40 (발표 20분, 토론 10분)	▶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및 개선방안 - 발표자 : 이경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지정토론 : 전명기(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진흥본부장)
14:40~15:10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V - 발표자 : 김영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지정토론 : 구정화(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15:10~15:20	COFFEE BREAK
15:20~15:50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 발표자 : 백혜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지정토론 : 김성기(협성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15:50~16:20	▶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의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I - 발표자 : 김경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지정토론 : 김석병(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사무처장)
16:20~17:00	▣ 종합토론
17:00	▣ 폐회

목 차

발 표

-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및 개선방안 1
이 경 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V 53
김 영 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87
백 혜 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I 123
김 경 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 1

.....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및 개선방안

이 경 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및 개선방안¹⁾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수년간 한국사회에서 가족구조의 다양화,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 등의 트렌드들이 나타나고 있다(이경상, 최향섭, 그레이스정, 2013). 이러한 트렌드들은 한국사회 청소년들의 사회공동체성을 약화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들이다. 따라서 한국사회 청소년들의 사회공동체성을 향상시키고 강화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 정책 중에서 청소년들의 사회공동체성을 향상시키거나 강화하는데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은 봉사, 기부 등 나눔활동 관련정책이다. 기존 연구가 거의 수행되지 않은 기부외에 기존 연구가 다수 수행된 봉사활동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봉사활동은 사회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개인의 건강한 성장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위이다(권현수, 2010; 박성복, 김규희, 2008; 박완성, 김기수, 2012; 최향순, 정태자, 2010).

한국에서는 이미 1994년 자원봉사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사회적인 차원에서 자원봉사의 틀을 만들고, 1995년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에서 5.31 교육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중고등학생 종합생활기록부에 자원봉사활동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청소년 자원봉사 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김한구 외, 1997; 여성가족부, 2013). 이후 1996년에서 1999년까지 3년에 걸쳐 전국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여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시작하였고, 2006년에 들어 전국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청소년활동진흥원과 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지금까지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여성가족부, 2013). 2009년에 이르러 교육과정 이 개정됨에 따라,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의 하위 영역으로 봉사활동 체험학습이 편제되고 교교 진학과 입학사정관제, 봉사전형 등 대학진학의 자료로 활용되도록 제도화되어 봉사활동이 봉사학습으

1) 이 글은 2015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고서인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를 발췌·요약한 것임.

로 더욱 강화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다(크레존넷, 2015.04.15.; 김숙정,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청소년들의 자원봉사는, 입시위주 학생 생활문화의 한계와 봉사학습 강화에 따른 봉사활동 자발성의 부족, 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부족, 봉사동아리 활동의 부족, 지역사회 연계부족 등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자원봉사 원래의 동기부여하에 진정한 의미의 자원봉사 형태로 전개되기보다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내신성적 획득을 목적으로 다소 형식적으로 전개되는 등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이경상, 2014).

또한 봉사활동과 함께 청소년 나눔활동의 다른 한 축인 한국 청소년들의 물질기부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실태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최근 수년간 한국사회에서 물질기부 등이 많이 증가하여 기부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나눔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에서 나눔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을 생각하면²⁾(보건복지부, 2015), 향후 성장해서 미래 성인기에 한국 시민사회의 기부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할 한국 청소년들의 기부에 대해 실태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분명히 문제가 많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자원봉사에 비해 청소년 기부활동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청소년들에게 기부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좋은지, 하는 것이 좋다면 어떤 형태로 실시하는 것이 좋은지, 기부교육의 필요성은 어떠한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사회공동체성의 강화와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하여 현재 실시 중인 봉사활동, 물질기부 등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참여요인 및 참여효과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국내 청소년 나눔활동의 제도적 지원현황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청소년 나눔활동의 정책적 개선방안을 탐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봉사, 물질기부 등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를 진단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국내 청소년 나눔활동의 주요 정책적 지원현황, 나눔활동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청소년들이 나눔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참여요인 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부터 살펴보고, 둘째, 앞의 논의를 바탕으로 청소년에 대한 양적조사, 청소년과 관련 전문가에 대한

2) 2013년 말 초안으로 작성된 나눔기본법 제정안에는 나눔 적용대상에 기부 외에 자원봉사를 포함하고 있었으나, 2년이 지난 시점인 2015년 말 현재 수정검토 중인 나눔기본법 조정안에는 자원봉사단체의 의견을 반영(2015년 4월)하여 나눔 적용대상에서 자원봉사를 제외하였음(보건복지부, 2015). 따라서 정책적 용어로서 정착 중이던 나눔의 개념이 애초 자원봉사, 기부를 포함하는 큰 개념에서 현재 기부를 중심으로 하는 상대적으로 작은 개념으로 외연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향후 수년간에 나눔이라는 정책적 용어의 개념이 어떻게 최종 정착될 지는 모르겠지만, 이 연구에서는, 나눔 개념안에 자원봉사와 기부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애초의 연구계획대로 청소년 나눔활동의 개념을 자원봉사, 기부 모두를 포괄하는 것으로 상정하였음. 이후 나눔 개념의 외연은, 자원봉사, 기부 등 하위 개념의 외연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므로, 향후 수년간의 추이를 봐서 탄력적으로 정의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됨.

질적 조사, 정책적 개선방안 관련 전문가 FGI, 정책협의회, 전문가 워크숍 등을 거쳐 청소년 나눔활동의 최종적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청소년 나눔활동에 대한 국내 정책은 물질기부보다는 자원봉사 위주로 진행되어 왔다. 물질기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 지금까지의 청소년 나눔활동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주로 자원봉사에 국한되어 있었다.

한국에서 청소년 봉사활동은, 1994년 자원봉사지원법의 제정 발표이후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던 차에, 1995년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에서 5.31 교육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을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김한구 외, 1997; 여성가족부, 2013; 이경상, 2014).

이후 2009년부터 교육부 2009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해 봉사활동 체험학습이 더욱 강화되었다. 2009 교육과정 개편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초중고에서 기존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하여 체험학습을 더욱 강화한 창의적 체험활동이 단계적으로 시행되었다(크레존넷, 2015. 04.15.; 김숙정, 2009; 김영채, 2010; 이경상, 2014). 창의적 체험활동은 창의적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교과중심의 수업 외에 체험학습을 강화한 프로그램을 지칭하고, 자율활동(적응활동, 자치활동, 행사활동, 창의적 특색활동 등), 동아리활동(학술활동, 문화예술활동, 스포츠활동, 실습노작활동, 청소년단체활동 등), 봉사활동(교내봉사활동, 지역사회봉사활동, 자연환경보호활동, 캠페인활동 등), 진로활동(자기이해활동, 진로정보탐색활동, 진로계획활동, 진로체험활동 등)의 4개 하위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봉사활동 체험학습인 것이다(크레존넷, 2015.04.15.; 김숙정, 2009; 김영채, 2010; 이경상, 2014).

현재 이러한 청소년 봉사활동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적 지원은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나눔정책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 수행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3; 보건복지부, 2013; 안전행정부, 2013).

우선 여성가족부는 1995년 청소년 봉사활동이 청소년정책으로 시행되면서부터 청소년 봉사활동을 지원해왔다. 청소년 봉사활동이 정책적으로 시행된 직후인 1996년에서 1999년까지 3개년 동안

이러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뒷받침하기 위해 전국에 걸쳐 중앙 및 16개시도에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였다(여성가족부, 2013).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전국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진작을 지역사회에서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이후 1996년에서 1999년까지 전국에 걸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는 이후 7년 정도 업무를 지속하다가, 2006년에 이르러 청소년 자원봉사를 포함해서 청소년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청소년활동진흥원(중앙)과 청소년활동진흥센터(전국 16개시도)로 개편되었다. 2006년이후 전국의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지원은 중앙의 청소년활동진흥원과 16개시도의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업무를 맡아 지원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는 것이다(여성가족부, 2013). 그리고 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는 청소년들이 봉사터전을 쉽게 검색하여 찾고 등록할 수 있도록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을 갖춰 놓고 있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5.07.03.)

다음으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시스템은 아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2001년부터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시스템(VMS)을 구축하고, 사회복지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를 지정하여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3; 보건복지부, 2015.07.03).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는 2013년 12월 현재 전국에 걸쳐 10,724개소에 설치되어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3).

또한 행정자치부에서도 1365자원봉사포털을 구축하고, 전국 시도와 시군구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여 자원봉사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안전행정부, 2013; 행정자치부, 2015.07.03.). 자원봉사센터는 2013년 현재 전국 246개 지역에 걸쳐 설치되어 자원봉사활동을 뒷받침해오고 있다(안전행정부, 2013).

그럼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물질기부 등을 핵심개념으로 하는 청소년 나눔행위, 나눔활동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청소년 나눔행위, 나눔활동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일부 연구가 물질기부 등에 관심을 가지고 진행되어 왔고 나머지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로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자원봉사, 물질기부 등 나눔행위, 나눔활동 참여의 영향요인들은 크게 개인적 요인, 상황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나뉘 볼 수 있다(전신현, 2011, 2015; 김성준, 2003; 박종철, 이용운, 2012; 구지윤, 2013; 이정해, 김현주, 2014; 이수애, 이성태, 2009; 강철희, 유재윤, 박소현, 2012).

대체로 개인적 요인은 성, 연령, 교육, 수입, 종교, 참여동기 등의 개인 특성과 관련된 요인을 지칭한다(Drollinger and Johnson, 1995; Chapman, Zahn-Waxler, Cooperman, & Iannotti, 1987; 김성준, 2003; 전신현, 2011, 2015; 황창순, 강철희, 2002; 박태규, 윤병호, 정진욱, 2008;

홍은진, 2006; 구지윤, 2013). 성에 따라 도움행위의 차이가 나타나고,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는 사람일수록, 수입이 높을수록 도움행위에 더 많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전신현, 2011, 2015; 구지윤, 2013). 또한 나눔활동에 참여했을 때의 손실보다는 보상이 높다고 생각하는 이기적 동기를 가진 사람일수록, 타자지향적 감정이입과 배려를 가진 이타적 동기를 가진 사람일수록, 남을 돕는 것이 옳은 행동이라는 개인 규범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리고 남을 돕는 자아정체성을 가진 사람일수록 나눔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전신현, 2011, 2015).

상황적 요인은 주변인 효과, 도움의 기회, 수혜자의 특성 등과 같은 상황적 특성과 관련된 요인을 지칭한다(Brown and Ferris, 2007; 김연, 김정우, 2014; 전신현, 2011, 2015; 이수애, 이성태, 2009; 김연수, 이광석, 2011). 우선 주변인 효과라는 것은 내가 아니어도 주위에 수혜자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할수록 나눔활동에 잘 참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도움의 기회는 평소에 자원봉사, 물질기부 등 나눔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얼마나 많이 갖느냐를 의미한다. 그리고 수혜자의 특성은 도움을 요청하는 수혜자의 도움요청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를 의미한다(이수애, 이성태, 2009; 전신현, 2011, 2015; 김연수, 이광석, 2011).

그리고 사회적 요인은 나눔활동에 참여하는 조직의 특성과 같은 사회적 특성과 관련된 요인을 지칭한다(Brown and Ferris, 2007; 전신현, 2011, 2015; 김숙경, 2005). 평소에 자원봉사, 물질기부 등 나눔활동과 관련된 조직(동아리, 단체, 시설 등)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조직에서 내가 중심적 위치에서 활동했는지, 그 조직의 구성원들은 친밀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지, 그 조직의 일원이었다는 것이 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 등에 따라 나눔활동에 참여하는 정도가 달리 나타난다는 것이다(전신현, 2011, 2015; 김숙경, 2005).

그리고 자원봉사, 물질기부 등 청소년 나눔행위, 나눔활동은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청소년 나눔행위, 나눔활동에의 참여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물질기부 등에 관심을 갖고 진행된 연구는 거의 없고, 대부분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주로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여러 경험적 연구결과 및 문헌자료를 살펴보면, 청소년 나눔활동 참여의 효과는 크게 사회적 효과와 개인적 효과의 두 가지로 분류된다.

자원봉사 등 청소년 나눔활동이 참여 청소년에게 미치는 사회적 영향에는 민주적인 시민성의 강화, 사회정의 및 사회공동체성의 강화, 사회문제의 해결에 대한 기여 등을 들 수 있다(Hamilton & Fenzel, 1988; Janoski, Musick, & Wilson, 1998; Scales, Blyth, Berkas, & Kielsmeier, 2000; Metz, McLellan, & Youniss, 2003; 박선향, 2010; 조호운, 조성환, 김영희, 2012; 구재관

외, 2013; 원미숙, 박혜숙, 2010; 박혜준, 김윤경, 2010; 황여정, 김경근, 2013; 김선숙, 안재진, 2013; Nenga, 2012; 이경상, 2014).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를 계획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민주적인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성을 갖추게 되고, 자원봉사활동 과정에서 사회적인 소외집단을 경험적으로 접함으로써 사회정의란 것이 과연 무엇인가? 사회공동체성이란게 과연 무엇인가? 등과 같은 사회정의 및 사회공동체성에 대한 의식을 강화시키게 되며, 이후 사회문제를 접할 때마다 사회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며 사회문제의 해결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정자(2012)는 경험적 연구결과에서 청소년들이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을 받을수록 청소년의 사회적 연계망이 높아지고, 자원봉사 참여기간도 사회적 연계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나타내고 있다. 원미숙, 박혜숙(2010)은 경험적 연구결과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높은 시민의식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우정자, 2012; 원미숙, 박혜숙, 2010; 이경상, 2014).

자원봉사 등 청소년 나눔활동이 참여 청소년에게 미치는 개인적 영향에는 자아존중감 강화, 자아효능감 강화, 사회성 강화, 진로성숙도 강화, 리더십 개발, 학교생활적응도 향상 등을 들 수 있다(Johnson, Beebe, Mortimer, & Snyder, 1998; Thoits & Hewitt, 2001; 박성복, 김규희, 2008; 이순자, 2009; 김덕주, 2009; 박완성, 김기수, 2012; 최항순, 정태자, 2010; 장덕희, 이명옥, 양점도, 2011; 박재숙, 2013; 이경상, 2014). 자원봉사활동은 기본적으로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원봉사활동 참여과정의 타인과의 상호작용 등을 통해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사회성 등이 강화되는 긍정적 경험을 획득하게 되고, 자원봉사활동 참여계획, 자원봉사활동 참여과정 등의 수행을 통해 자기와 사회에 대해 더욱 더 많은 사고를 하게 되어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 중의 하나인 진로성숙도가 강화되고, 자원봉사활동 참여과정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리더십 향상을 경험하게 되며, 자원봉사활동의 여러 체험의 결과 학교생활적응도도 향상되는 긍정적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박성복, 김규희(2008)는 경험적 연구결과에서, 고등학생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참여태도는 직접적으로 혹은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간접적으로도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나타내고 있다. 이순자(2009)는 청소년기의 봉사활동 참여는 참여의식, 성취감 등을 통해 개인적 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고, 사회적 대인관계,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등을 통해 사회적 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논의하고 있다. 김덕주(2009)는 청소년기의 봉사활동 참여가 타인과의 협력과정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논의하고 있다. 박완성, 김기수(2012)는

경험적 연구결과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진로성숙도가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고 보여주고 있다. 최항순, 정태자(2010)는 경험적 연구결과에서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참여만족도가 높을수록 리더십이 더 개발된다고 나타내고 있다. 박재숙(2013)은 경험적 연구결과에서 청소년 봉사활동이 공동체의식을 매개하여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논의하고 있다(박성복, 김규희, 2008; 이순자, 2009; 김덕주, 2009; 박완성, 김기수, 2012; 최항순, 정태자, 2010; 박재숙, 2013; 이경상, 2014).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보면, 기존의 경험적 연구결과들은, 청소년 나눔활동의 참여요인에 대한 일부 연구결과들을 제외하면, 주로 나눔활동의 한 축인 기부활동보다는 다른 축인 자원봉사활동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에 관심을 많이 가져왔던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요인 및 참여효과를 전국적인 확률표집의 데이터를 통해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한편으로, 기존에 관심을 많이 두지 않아왔던 청소년들의 물질기부활동의 참여요인 및 참여효과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또한 기존에 관심을 가져왔던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요인 및 참여효과도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계획한 봉사활동과 개인이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의 둘로 보다 세분화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학교 봉사학습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한 봉사활동과 개인이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의 참여요인 및 참여효과를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경험적 연구의 측면에서 보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이다.

이러한 청소년 나눔활동의 참여요인 및 참여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은, 이 연구에서 실시한 양적, 질적인 경험적 연구결과 분석을 통해, 입시위주 학생 생활문화의 한계로 인한 봉사활동 자발성의 부족, 봉사활동 교육의 부족, 봉사활동 동아리활동의 활성화 부족, 봉사활동 전문성의 부족, 기부활동의 제도화 문제 등(이경상, 2014) 기존 청소년 나눔활동의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우선 청소년 나눔활동의 참여요인, 참여효과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 여러 국내외 문헌자료들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헌자료 분석은 청소년들의 나눔활동에 관한 양적 설문조사와 질적 면접조사 구성의 바탕이 되었다.

2) 양적 설문조사

양적 설문조사의 모집단은 2015년 5월 조사시점 현재 전국의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이다. 이들 조사모집단을 대상으로 2014년 한국교육통계연보를 표집틀로 하여 목표표본수를 6,000명으로 상정한 다음 PPS방식의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강현철, 2015).

조사는 2015년 5월~7월 사이에 조사면접원들이 약속된 일시에 해당학교를 방문하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기기입(self reported)식 집단면접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이후 조사현장에서의 에디팅과 조사후의 에디팅 과정을 거쳐 조사의 타당성을 제고하였다.

질문지는 크게 나눔활동의 실태, 나눔활동의 참여요인, 나눔활동의 효과를 측정하는 세 부분으로 나뉘 구성되었다.

나눔활동의 실태를 묻는 부분은 나눔활동을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계획한 봉사활동,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계획한 봉사활동 외에 개인이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기부의 세 부분으로 나뉘 구성하였다. 이 중 봉사활동 부분은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유형화한 교내봉사활동, 지역사회봉사활동, 자연환경보호활동, 캠페인활동으로 나뉘 각각 참여횟수, 참여시간, 주된 참여형태, 만족도를 묻는 방식으로 구성하였고, 기부 부분은 지식이나 육체적 능력 기부는 제외하고 재산기부를 현금기부, 현물기부, 포인트기부로 세부적으로 나뉘 각각 참여여부, 참여횟수, 주된 참여형태, 만족도를 묻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단, 절, 절, 교회, 성당 등에서 행해지는 종교적 기부는 제외하였다.

나눔활동의 참여요인을 묻는 부분은 앞의 이론적 논의에 따라, 개인적 요인으로 개인배경변수이외에, 이기적 동기, 이타적 동기, 개인규범, 자아정체성을 측정하는 문항을 구성하였고, 상황적 요인으로 주변인 효과, 도움의 기회, 수혜자의 특성을 구성하였으며, 사회적 요인으로 나눔활동관련 조직

소속여부, 그 조직에서의 중심성, 조직구성원들간의 친밀성, 상호성,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의미 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전신현, 2011, 2015). 나눔활동 참여요인에 관한 척도는 현재 전신현(2011, 2015)의 연구에서 활용한 척도가 한국에서 유일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전신현, 2011, 2015).

나눔활동의 효과를 측정하는 부분은 역시 앞의 이론적 논의에 따라 나눔활동이 청소년들의 개인적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자아존중감, 우울, 공격성, 진로성숙, 리더십, 학교생활적응을 구성하였고, 나눔활동이 청소년들의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다문화수용도, 사회공동체성 문항을 구성하였다(Rogenberg, 1965,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 2000, 이경상 외, 2012에서 재인용; 김광일 외, 1984, 이경상 외, 2012에서 재인용; 조봉환 외, 2003, 이경상 외, 2012에서 재인용; 이경상 외, 2003; 이경상 외, 2012; Crits, 1978, 김현옥, 1989, 윤지윤, 2010, 박관숙, 2012에서 재인용; Wingenbach, 1995, Dormody & Seevers, 1995, 최창욱, 2001에서 재인용; 민병수, 1991, 이경상 외, 2012에서 재인용; 양계민, 정진경, 2008, 이경상 외, 2012에서 재인용; 김동배, 조학래, 1996).

최종 수집된 자료는 비표집오차를 최소화하고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코딩, 더블 편칭, 데이터 검수의 과정을 거쳐 정리되었다. 그리고 최종 정리된 데이터에는 가중치의 합계가 표본크기와 동일하게 만든 표준화가중치를 부여하였다(강현철, 2015). 그리고 분석시에는 이 표준화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분석된 모든 데이터의 분석결과는 표준화가중치를 부여한 분석결과이다.

3) 질적 면접조사

질적 면접조사는 나눔활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과 나눔활동과 관련된 성인전문가 분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청소년 대상의 면접조사는 전국에서 봉사활동과 기부활동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 15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청소년 면접대상자 15명의 선발은 우선 전국을 서울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의 5개 권역으로 나눈 후, 각각의 권역에서 봉사활동과 기부활동의 경험이 있는 초등학생(4~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1명씩 총 15명을 선발하여 실시하였다. 면접내용 및 방법은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참여요인, 참여효과 등의 내용으로 반구조화된 면접법을 실시하였다.

성인대상의 면접조사는 전국에서 청소년 봉사활동, 기부활동과 관련된 성인 전문가 15명과 대학입학

사정관 1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성인 면접대상자 15명의 선발도 역시 청소년의 선발과 마찬가지로 전국을 서울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의 5개 권역으로 나눈 후, 각각의 권역에서 봉사활동 담당교사, 봉사활동 전문가, 기부활동 전문가 1명씩 총 15명을 선발하여 실시하였다. 그리고 추가로 대학에서 입학사정관 경험이 있는 교수 1명을 추가로 선발하였다. 면접내용 및 방법 역시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참여요인, 참여효과 등의 내용으로 반구조화된 면접법을 실시하였다.

전국에서 선발된 청소년 면접대상자 15명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번	이름	성별	나이	거주지	학교	봉사활동 경험	기부 경험
1	김○○	여	13	강원	○○○초등학교	있음	있음
2	박○○	여	15	강원	○○○○중학교	있음	있음
3	박△△	여	18	강원	○○○○고등학교	있음	있음
4	김△△	남	11	경상	○○초등학교	있음	있음
5	정○○	여	14	경상	○○○○중학교	있음	있음
6	서○○	남	18	경상	○○고등학교	있음	있음
7	안○○	남	13	서울 경기	○○초등학교	있음	있음
8	이○○	여	15	서울 경기	○○중학교	있음	있음
9	고○○	여	17	서울 경기	○○○○고등학교	있음	있음
10	이△△	여	13	전라	○○초등학교	있음	있음
11	이□□	여	16	전라	○○중학교	있음	있음
12	김□□	남	18	전라	○○○○고등학교	있음	없음
13	이◇◇	여	12	충남	○○초등학교	있음	있음
14	이××	여	15	충남	○○중학교	있음	있음
15	김◇◇	여	19	충남	○○○○고등학교	있음	있음

전국에서 선발된 성인 전문가 15명과 대학입학사정관 1명의 기본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번	이름	성별	나이	거주 지역	직장	비고
1	김○○	남	57	강원	○○○○고등학교	봉사활동 담당교사 봉사/기부 프로그램 운영 경험 있음
2	이○○	남	36	강원	○○○○청소년활동 진흥센터	봉사활동 전문가 봉사 프로그램 운영 경험 있음
3	김△△	남	30	강원	굿네이버스 ○○본부	기부활동 전문가 봉사/기부 프로그램 운영 경험 있음
4	이△△	여	45	경상	○○중학교	봉사활동 담당교사 봉사/기부 프로그램 운영 경험 있음
5	조○○	남	45	경상	○○청소년활동 진흥센터	봉사활동 전문가 봉사 프로그램 운영 경험 있음
6	이□□	남	31	경상	세이브더칠드런 ○○지부	기부활동 전문가 기부 프로그램 운영 경험 있음
7	정○○	여	24	서울 경기	○○○중학교	봉사활동 담당교사 봉사 프로그램 운영 경험 있음
8	김□□	남	46	서울 경기	○○○○	기부활동 전문가 기부 프로그램 운영 경험 있음
9	채○○	남	35	서울 경기	○○○○운동본부	나눔교육 전문가
10	김××	여	47	전라	○○○○중학교	봉사활동 담당교사 봉사/기부 프로그램 운영 경험 있음
11	김◇◇	남	53	전라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전문가 봉사 프로그램 운영 경험 있음
12	김●●	여	44	전라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기부활동 전문가 봉사/기부 프로그램 운영 경험 있음
13	박○○	남	51	충청	○○○○고등학교	봉사활동 담당교사 봉사/기부 프로그램 운영 경험 있음
14	신○○	여	24	충청	○○○청소년수련관	봉사활동 전문가 봉사 프로그램 운영 경험 있음
15	김■	남	31	충청	굿네이버스 ○○본부	기부활동 전문가 봉사/기부 프로그램 운영 경험 있음
16	이◇◇	남	57	전라	○○대학교	입학사정관

4) 전문가 자문

자원봉사, 기부 등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참여요인, 참여효과에 대한 양적 설문조사를 위해 이론적 논의를 거쳐 구성된 설문지 구성안에 대해 학계, 현장 전문가 분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최종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5) 전문가 FGI

6인의 청소년 자원봉사 전문가, 청소년 기부 전문가, 청소년 자원봉사, 기부활동 담당관련 교사분들을 모시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기 위한 전문가 FGI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FGI를 통해 개선된 의견은 최종 정책제언을 구성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6) 정책협의회

우선 실행계획서 작성단계에서부터 관련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연구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제 1차 정책실무협의회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 나눔활동 관련 정책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대상으로 제 2차 정책실무협의회를 실시하였다. 개선된 의견은 최종 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유용하게 반영되었다.

7) 전문가 워크숍

청소년 나눔활동에 대한 양적 설문조사 분석결과, 질적 면접조사 분석결과, 전문가FGI 분석결과와 정책협의회 등을 거쳐 마련된 정책적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정책, 현장 관련 전문가 분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워크숍을 실시하여 정책적 개선방안 등에 대한 최종 검토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나눔활동에 대한 최종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4. 분석결과

1) 청소년 나눔활동 참여실태

우선 지난 1년간의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를 전체 봉사활동,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된 봉사활동,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기부활동으로 나눠 전반적인 실태를 살펴보았다.

우선 <표 1>은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된 봉사활동과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모두를 합친 전체 청소년 봉사활동의 참여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청소년들 중 83.9%가 지난 1년간 봉사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10명 중 8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한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 중의 대다수가 지난 1년간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청소년 봉사활동의 제도화가 전반적으로 많이 정착된 결과로 해석된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가 87.2%, 남자가 80.9%로 여자청소년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남자청소년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주관적 경제수준별로는 상층이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86.1%, 하층이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83.9%, 중간층이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81.9%의 순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인의 종교무유별로도 통계적으로 유의할만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 전체 봉사활동 참여실태(빈도, %)

구분		참여 무	참여 유	합계	χ^2
전체		1134(16.1)	5913(83.9)	7047(100)	
성별	여자	432(12.8)	2941(87.2)	3373(100)	51.686***
	남자	702(19.1)	2972(80.9)	3674(100)	
교급	초	308(15.6)	1671(84.4)	1979(100)	5.296
	중	370(15.1)	2078(84.9)	2448(100)	
	고	455(17.4)	2165(82.6)	2620(100)	
종교	무	640(16.5)	3245(83.5)	3885(100)	1.286
	유	476(15.5)	2601(84.5)	3077(100)	
경제 수준	상	419(13.9)	2598(86.1)	3017(100)	19.978***
	중	554(18.1)	2508(81.9)	3062(100)	
	하	149(16.1)	777(83.9)	926(100)	

*p < .05, **p < .01, ***p < .001

이러 청소년들의 전체 봉사활동을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된 봉사활동과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으로 세부적으로 나눠 살펴보았다.

〈표 2〉는 청소년들의 전체 봉사활동 중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된 봉사활동에 청소년들이 참여한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청소년들 중 78.1%가 지난 1년간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된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청소년들의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참여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제도화된 봉사학습의 경험을 체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가 81.1%, 남자가 75.3%로 여자청소년이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남자청소년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82.2%, 중학생이 77.7%, 고등학생이 75.4%로 나타나 교급이 올라갈수록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된 봉사활동에 참여한 비율이 떨어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경제수준별로는 상층이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80.6%, 하층이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76.7%, 중간층이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76.1%의 순으로 학교교육과정으로 계획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무유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2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된 봉사활동 참여실태(빈도, %)

구분	참여 무	참여 유	합계	χ^2
전체	1545(21.9)	5503(78.1)	7048(100)	
성별	여자	639(18.9)	2734(81.1)	33.485***
	남자	906(24.7)	2769(75.3)	
교급	초	353(17.8)	1626(82.2)	30.640***
	중	546(22.3)	1902(77.7)	
	고	645(24.6)	1975(75.4)	
종교	무	857(22.1)	3028(77.9)	0.141
	유	667(21.7)	2409(78.3)	
경제수준	상	584(19.4)	2434(80.6)	20.021***
	중	733(23.9)	2329(76.1)	
	하	216(23.3)	710(76.7)	

*p < .05, **p < .01, ***p < .001

〈표 3〉은 청소년들의 전체 봉사활동 중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된 봉사활동을 제외하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에 참여한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청소년들 중 45.1%가 지난 1년간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된 봉사활동외에 개인이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들 10명 중 5명 가까이가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된 봉사활동 참여비율에 비하면 많이 적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봉사활동 참여비율은 많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으나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된 봉사활동의 참여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높게 나타나고 개인이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가 49.7%, 남자가 40.9%로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역시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약간 더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33.7%, 중학생이 48.6%, 고등학생이 50.5%로 나타나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은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된 봉사활동과는 반대로 교급이 올라갈수록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에 참여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무유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주관적 경제수준별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실태(빈도, %)

구분		참여 무	참여 유	합계	χ^2
전체		3869(54.9)	3179(45.1)	7048(100)	
성별	여자	1698(50.3)	1676(49.7)	3374(100)	54.717***
	남자	2172(59.1)	1503(40.9)	3675(100)	
교급	초	1313(66.3)	666(33.7)	1979(100)	147.294***
	중	1258(51.4)	1190(48.6)	2448(100)	
	고	1298(49.5)	1322(50.5)	2620(100)	
종교	무	2166(55.8)	1718(44.2)	3884(100)	3.481
	유	1647(53.5)	1430(46.5)	3077(100)	
경제수준	상	1638(54.3)	1380(45.7)	3018(100)	5.047
	중	1721(56.2)	1343(43.8)	3064(100)	
	하	484(52.3)	442(47.7)	926(100)	

*p < .05, **p < .01, ***p < .001

다음으로 청소년들의 기부실태를 살펴보았다.

〈표 4〉는 현금기부, 현물기부, 포인트 기부 등 청소년들의 기부활동에 참여한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청소년들 중 51.8%가 지난 1년간 기부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의 10명 중 과반인 5명을 넘는 청소년들이 기부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간 청소년들의 정책 대상에서 등한시되었던 기부활동에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가 59.1%, 남자가 45.1%로 역시 여자청소년이 기부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남자청소년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68.0%, 중학생이 42.5%, 고등학생이 48.5%의 참여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종교유무별로는 종교가 있는 청소년들이 55.9%, 종교가 없는 청소년들이 48.9%의 비율로 나타나 종교를 가진 청소년들의 참여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경제수준별로는 상층이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58.5%, 중간층이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46.8%, 하층이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46.5%의 순으로 기부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주관적 경제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이 기부활동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기부 참여실태(빈도, %)**

구분		참여 무	참여 유	합계	χ^2
전체		3396(48.2)	3650(51.8)	7046(100)	
성별	여자	1382(40.9)	1993(59.1)	3375(100)	136.610***
	남자	2015(54.9)	1657(45.1)	3672(100)	
교급	초	634(32.0)	1346(68.0)	1980(100)	305.451***
	중	1405(57.5)	1039(42.5)	2444(100)	
	고	1357(51.8)	1264(48.2)	2621(100)	
종교	무	1986(51.1)	1898(48.9)	3884(100)	33.548***
	유	1358(44.1)	1718(55.9)	3076(100)	
경제 수준	상	1250(41.5)	1765(58.5)	3015(100)	96.379***
	중	1631(53.2)	1432(46.8)	3063(100)	
	하	495(53.5)	431(46.5)	926(100)	

*p < .05, **p < .01, ***p < .001

2) 봉사활동 자발성 확대, 기부활동 강화 관련 경험적 자료

〈양적 설문조사 자료〉

다음으로 앞의 이론적 논의를 따라 학교교육과정 봉사활동 참여무유더미,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무유더미, 기부활동 참여무유더미와 같은 나눔활동 참여무유, 학교교육과정 봉사활동 참여횟수,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횟수, 기부활동 참여횟수와 같은 나눔활동 참여횟수가 자아존중감, 우울감, 공격성, 진로성숙, 리더십, 학교적응, 다문화수용도, 공동체의식 등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개인적 사회적 효과는 어떠한 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 5〉는 남성더미, 학년, 반성적, 종교무유더미, 경제수준, 대도시거주더미, 중소도시거주더미를 통제한 후, 학교교육과정 봉사활동 참여무유더미,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무유더미, 기부활동 참여무유더미 변수가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우울감, 공격성, 진로성숙, 리더십, 학교적응, 다문화수용도,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부활동 참여무유더미 변수가 청소년들의 개인적 사회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크고,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무유더미 변수가 그 다음으로 청소년들의 개인적, 사회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된 봉사활동 참여무유더미 변수가 청소년들의 개인적, 사회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나눔활동 참여무유가 청소년에 미치는 개인적 사회적 효과1

변수	자이존중감		우울감		공격성		진로성숙	
	B	β	B	β	B	β	B	β
(상수)	2.419		3.131		2.827		2.233	
남성더미	0.077	0.057***	-0.183	-0.110***	-0.102	-0.063***	0.053	0.034**
학년	-0.017	-0.065***	0.058	0.175***	0.028	0.086***	-0.006	-0.020
반성적	0.179	0.267***	-0.132	-0.160***	-0.076	-0.095***	0.129	0.167***
종교무유더미	0.018	0.013	0.010	0.006	0.049	0.030*	0.105	0.067***
경제수준	0.107	0.171***	-0.130	-0.169***	-0.073	-0.098***	0.096	0.134***
대도시 거주 더미(읍면기준)	0.076	0.056**	-0.081	-0.048**	-0.058	-0.036	0.044	0.028
중소도시 거주 더미(읍면기준)	0.021	0.015	-0.051	-0.030	-0.034	-0.021	-0.026	-0.017
학교교육과정 봉사활동 참여무유	0.031	0.019	-0.044	-0.022	-0.009	-0.004	0.018	0.010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무유	0.054	0.040**	-0.008	-0.005	-0.009	-0.005	0.141	0.091***
기부 참여무유	0.051	0.038**	-0.027	-0.016	-0.053	-0.033**	0.191	0.124***
수정된 R ²	0.156***		0.142***		0.046***		0.104***	

*p < .05, **p < .01, ***p < .001

표 5 나눔활동 참여무유가 청소년에 미치는 개인적 사회적 효과2

변수	리더십		학교적응		다문화수용도		공동체익식	
	B	β	B	β	B	β	B	β
(상수)	2.143		2.607		2.701		2.968	
남성더미	0.001	0.001	-0.070	-0.059***	-0.123	-0.074***	-0.076	-0.101***
학년	0.040	0.157***	-0.008	-0.033**	0.057	0.172***	0.000	0.001
반성적	0.172	0.267***	0.181	0.307***	0.090	0.109***	0.039	0.105***
종교무유더미	0.035	0.027*	0.037	0.031**	0.036	0.021	0.044	0.058***
경제수준	0.095	0.159***	0.060	0.109***	0.043	0.056***	0.015	0.043**
대도시 거주 더미(읍면기준)	0.114	0.088***	0.072	0.060***	0.059	0.036	0.009	0.011
중소도시 거주 더미(읍면기준)	0.025	0.019	0.018	0.015	-0.033	-0.020	-0.008	-0.010
학교교육과정 봉사활동 참여무유	0.019	0.012	0.066	0.046***	0.005	0.003	0.046	0.050***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무유	0.116	0.089***	0.096	0.081***	0.112	0.067***	0.068	0.089***
기부 참여무유	0.130	0.100***	0.126	0.106***	0.211	0.128***	0.098	0.130***
수정된 R ²	0.149***		0.177***		0.070***		0.073***	

*p < .05, **p < .01, ***p < .001

〈표 6〉은 남성더미, 학년, 반성적, 종교무유더미, 경제수준, 대도시거주더미, 중소도시거주더미를 통제한 후, 학교교육과정 봉사활동 참여횟수,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횟수, 기부활동 참여횟수 변수가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우울감, 공격성, 진로성숙, 리더십, 학교적응, 다문화수용도,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눔활동 참여횟수 변수도 나눔활동 참여무유 변수와 마찬가지로 기부활동 참여횟수 변수가 청소년들의 개인적 사회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크고,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횟수 변수가 그 다음으로 청소년들의 개인적, 사회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된 봉사활동 참여횟수 변수는 청소년들의 개인적, 사회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나눔활동 참여횟수가 청소년에 미치는 개인적 사회적 효과¹

변수	자아존중감		우울감		공격성		진로성숙	
	B	β	B	β	B	β	B	β
(상수)	2.473		3.081		2.787		2.337	
남성더미	0.072	0.053***	-0.180	-0.108***	-0.096	-0.059***	0.037	0.024*
학년	-0.018	-0.067***	0.060	0.180***	0.029	0.091***	-0.009	-0.028*
반성적	0.180	0.268***	-0.132	-0.159***	-0.078	-0.097***	0.130	0.169***
종교무유더미	0.017	0.012	0.012	0.007	0.048	0.030*	0.105	0.067***
경제수준	0.107	0.171***	-0.131	-0.170***	-0.074	-0.099***	0.095	0.133***
대도시 거주 더미(읍면기준)	0.077	0.057**	-0.078	-0.047**	-0.056	-0.035	0.058	0.038*
중소도시 거주 더미(읍면기준)	0.020	0.015	-0.045	-0.027	-0.033	-0.020	-0.011	-0.007
학교교육과정 봉사활동 참여횟수	0.001	0.011	-0.001	-0.008	0.000	-0.003	0.003	0.034**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횟수	0.003	0.035**	-0.002	-0.020	-0.001	-0.007	0.008	0.071***
기부 참여횟수	0.005	0.033**	-0.001	-0.003	0.000	0.001	0.020	0.114***
수정된 R ²	0.154***		0.142***		0.044***		0.102***	

*p < .05, **p < .01, ***p < .001

표 6 나눔활동 참여횟수가 청소년에 미치는 개인적 사회적 효과2

변수	리더십		학교적응		다문화수용도		공동체의식	
	B	β	B	β	B	β	B	β
(상수)	2,216		2,718		2,802		3,048	
남성더미	-0.010	-0.008	-0.085	-0.072***	-0.140	-0.085***	-0.086	-0.114***
학년	0.039	0.152***	-0.010	-0.042***	0.054	0.164***	-0.002	-0.011
반성적	0.174	0.270***	0.184	0.312***	0.093	0.113***	0.042	0.111***
중고무유더미	0.036	0.027*	0.038	0.032**	0.037	0.022	0.044	0.058***
경제수준	0.095	0.159***	0.060	0.110***	0.043	0.056***	0.015	0.043**
대도시 거주 더미(읍면기준)	0.124	0.095***	0.076	0.064***	0.067	0.041*	0.012	0.016
중소도시 거주 더미(읍면기준)	0.035	0.027	0.020	0.017	-0.023	-0.013	-0.006	-0.008
학교교육과정 봉사활동 참여횟수	0.002	0.032**	0.003	0.043***	0.002	0.023	0.002	0.053***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횟수	0.006	0.061***	0.004	0.051***	0.005	0.044***	0.003	0.056***
기부 참여횟수	0.014	0.093***	0.011	0.079***	0.020	0.110***	0.009	0.107***
수정된 R ²	0.146***		0.167***		0.065***		0.063***	

*p < .05, **p < .01, ***p < .001

〈질적 면접조사 자료〉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계획한 봉사활동과 청소년들이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간에 뚜렷한 차이점을 느끼고 있었다.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계획한 봉사활동은 자발성이 없고 봉사시간 채우기 형태로 별로 느낀 점이 없다고 말하고, 개인이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은 자발적이며 이웃에 대한 공동체성 등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의미있는 활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지도하고 계시는 전문가 선생님도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한 봉사활동과 청소년들이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사이에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박△△ :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하는 거는 뭐랄까.. 아 학교에서 하는건 약간 한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것저것 경험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원하는 봉사활동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보니깐 좀 개인이 하는 거랑 학교에서 하는 거랑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서○○ : 자체적으로 복지관을 찾아가던가 그런 식으로 봉사다운 봉사를 하는게 낫지, 이런 식은 그냥 시간채우기밖에 안되지 않을까요. 봉사활동을 하는 것 자체는 청소년들이 정서를 형성하는 단계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과 같은 그런 정신을 함양하는데는 많은 도움이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대부분 제 또래도 그렇고 지금 중학생도 그렇고 봉사활동을 한다는건 지하철역에서 피켓 들고 있는게 다거든요. 그런거해서 과연 우리가 봉사정신을 느낄 수 있는가..

이◇◇ : 자발성이 없는거를 하면 제가 흥미도 떨어지고 하고 싶은 마음도 떨어져서 더 열심히 안할 것 같고, 제가 하고 싶은걸 하면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취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 봉사활동이라는 의미는 자기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의 경우에는 제가 자발적으로 하는게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하는건 제가 자발적으로 하는게 아닌데, 그걸 자원봉사라고 말할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 선생님: 앞에 말했던거랑 좀 비슷한데요.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한 봉사활동은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흘러가듯이 같이 하는 거고,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은 학생들마다 생각하는게 다르듯이 나는 이쪽에 관심있으니까 이 분야에서 해봐야지하는 아이들과, 또는 할게 없는지 하는 애들이 나뉘지만 그래도 자발적으로 알아보고 하는거랑 의무감으로 하는거랑은 봉사에 임하는 자세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청소년 나눔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참여효과가 있다고 얘기해주었다. 우선 기부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혼자서 그리고 기부를 받는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에서 뿌듯함과 기쁨을 느낀다고 말해주었다. 또한 청소년 기부활동 전문가 선생님은 나눔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고 말해주었다.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지도하고 있는 선생님도 나눔활동이 자존감이 부족했던 학생들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준다고 얘기해주었다.

박△△ : 그냥 넣었을 때.. 저같은 경우는 넣었을 때 뿌듯함이 있는 것 같아요. 잠시의 뿌듯함..

이◇◇ : 제가 2년전에 세이브더칠드런에서 네팔에 있는 친구한테 지금 기부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해서 친구랑 편지를 주고받고 하는게 되게 기쁘고, 친구가 제가 전에 항상 후원해주면 친구가 거기서 잘 살고 있고, 얼마나 공부 잘하는지도 알려주거든요. 그래가지고 공부 성적이 오르고 그러면 저도 덩달아서 기뻐요.

이□□ 선생님 : 일단은 물질기부든 무슨 기부든 나눔을 한다는것에 있어서는 일단 자아존중감이 되게 높아진다고 생각들거든요. 일단은 내가 남을 돕는다는거에 대해서 여기서는 되게 뭐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내가 나눔으로써 정말 적은 금액이지만 이게 문화가 형성되는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의미가 있는거죠. 그리고 또 내가 나누는거는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거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리고 청소년 나눔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자원봉사 경험이 자신의 진로성숙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해주었다. 장래희망이 판사, 검사인 청소년은 자신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진로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얘기해주었고, 장래희망이 유치원교사인 청소년도 자원봉사활동 과정에서 자신의 진로설정이 좀 더 명확해졌다고 말해주었고, 사회복지사가 꿈인 청소년도 자신의 진로관련 체험에 도움이 되었다고 얘기해주었다.

김○○ : (혹시 우리친구 장래희망이 뭔지 물어봐도 되요?) 장래희망은 판사나 검사요. (봉사활동하는 게 나중에 장래희망 꿈꾸는 거에 도움이 된 적 있어요?) 좋을 것 같아요. 이미 경험을 해봤으니까 다가가기도 쉬울 것 같고요.

이◇◇ : 저는 사회복지사가 꿈인데 저는 노인쪽으로 사회복지를 하는게 제 꿈이었어요. 노인분들 밥 드시는거 도와드리고, 말벗해드리고, 안마해드리고, 청소해드리고 이런 거요.

그리고 다른 청소년들은 자원봉사 등 청소년 나눔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성격이 좀 더 적극적이게 되고 리더십이 향상되는 것 같다고 얘기해주었다. 동아리활동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은 동아리활동을 통한 자원봉사과정에서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리더십 등을 키우게 되는 것 같다고 말해주었다. 또 다른 친구는 봉사활동 과정에서 동아리 단장을 맡아 단체활동을 하면서 성격이 좀 더 적극적이고 밝고 진취적으로 변하는 것 같다고 말해주었다.

박△△ : 아 성격으로 하면 일단 동아리하다 보니깐 일단 제가 애들 의견을 먼저 수용하게 되고, 좀 더 리더십도 키우게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보니까 저희가 저번에는 요양원에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거 하다 보니까 아 이제 아이들이랑 거기 계신 분들이랑 좀 다르게 해서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 많았어요.

고○○ : 저한테 큰 영향을 미친게, 이런 봉사활동을 하면서 단체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를 하다보면서 성격도 좀 더 적극적이고 밝게 변하고, 또 제가 맡고 있는게 이 동아리의 단장을 맡고 있는데, 그런걸 맡으면서도 진취적인 성향도 커지는 것 같고요.

학교에서 봉사동아리를 지도하고 있는 전문가 선생님은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성실해지고 단정해지는 등 자아정체성 차원에서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얘기해주었다.

김○○ 선생님 : 많이 일어나죠. 일단 첫 번째로, 변화되는 것은 뭐냐하면 봉사동아리를 지도하면서도 교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하고 생활을 해가면서 보면은 1학년 때 모습하고 2학년 때 모습이 달라지고, 3학년때 모습이 달라지고, 처음에 들어왔을 때 학교생활에 성실하지 않았던 친구들 조차도 자기의 어떤 인생의 목표도 생기고 목표를 향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모습 이런 변화도 일어나고, 제일 바람직한 것은 뭐냐면 1학년때도 화장하고 치마도 짧게 입고 다니던 이런 녀석들이 한 1년 지나고 나면 정말 단정하게 바뀌어요. 콧속 짙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변화가 정말 감동이 아닐까.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정체성에서도 봉사활동을 통해서 자기들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청소년들은 자원봉사활동 등 나눔활동 과정에서 사회공동체성이 강화되고 있음을 얘기해주었다. 한 청소년은 장애인 봉사활동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어졌다고 얘기하였다. 그리고 다른 청소년은 몸이 불편하거나 힘든 애들과 어르신들을 도와주면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대해 느낀 점이 있다고 말해주었다. 교회에서 시각장애인 봉사활동을 한 친구는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드린 것이 기분이 좋았다고 말해주었다. 청소년활동 기관에 종사하시는 전문가 선생님도 청소년들이 자원봉사 등 나눔활동 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심고 사회공동체성을 함양하는 것 같다고 말해주었다.

김○○ : 뿌듯했구요. 장애인들을 좀 많이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구요. 장애인이란 편견이 없어졌고요...초등학교때 봉사활동을 하면은 느끼는 게 많으니까요.

박○○ : (이 동아리를 하면서 본인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 있어요?) 친구들이랑 더 말을 잘하게 되었고, 말하는 걸 좀 더 잘하게 됐어요....불편한 사람들이나 몸이 힘드신 어르신들 도와드리고, 애들도 같이 놀아주고.. 힘드신분들 도와드리니까 좋은 것 같아요....음. 이렇게 힘들게 사는 애들도 있구나를 느꼈어요.

정○○ : 교회에서 시각장애인분들 도움드리면서 제가 시각장애인분들 눈이 되어드린 것 같아서 기분 좋았어요.

이△△ : 할머니들이나 여러사람들 기쁘게 해주는게 뭐가 제가 마음이 깊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 저는 원래 장애인이 되게 무섭고, 저희와 다르게 되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언니오빠들은 단지 몸이 불편할뿐이지 저희와 생각과 마음은 다 똑같고 저희와 같이 놀고 싶고, 저희와 같이 어울리고 싶다는걸 알게 되었고...

조○○ 선생님 : 네. 아이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남에 대한 생각을 배려심이 좀 생기죠. 나 혼자 공부만 열심히 하고 남들 돌아보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배려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남을 한번 생각해볼 수 있고 이런 곳이 있구나 우리 사회에. 그런 것을 인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의 특성상 또래를 형성해서 3명에서 가기도 하고, 동아리 형태로 가기도 하고 해서 가면은 나름대로 사회성을 길러요.

기부를 하는데 있어서 방법상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전문가 선생님의 의견도 있었다. 그냥 단순히 부모로부터 받은 용돈을 받아가지고 물질기부를 하는 것보다는 내 노력에 의해서 얻은 물질을 기부하는 것이 교육상 훨씬 가치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김○○ 선생님 : 그냥 단순히 물질기부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내 노력에 의해서 땀을 흘려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은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냥 부모한테서 용돈 탄 것을 가지고 독거노인에게 과자를 사다드렸다. 그거보다는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거죠. 아이들한테 어떤 뿌듯함이나 만족감 같은게 크죠.

이◇◇ 선생님 : 지금 우리가 입학사정관의 입장에서 물질기부에 대해 정확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그러니까 사회봉사활동 같은 경우들에서도 조금만 선을 넘어서면 학생들에 대한 강제적 노동착취로도 볼 수 있고, 물질기부같은 경우에서도 조금만 선을 넘어서 보면 경제적 착취형태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너 이렇게 점수를 받을라 그러면 물질기부를 해야된다 상당히 그 미묘한 영역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근데 지금 외국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들 상황에서는 대부분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생활을 하는데 물질기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어떤 그 물질적 자원이 아니라 부모가 준 것을 가지고 자기가 전달하는 것 밖에 없는데 이게 과연 학생들의 사회성이라던지 도덕성을 함양하는데 이게 과연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라는게 저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전문가 FGI 자료〉

청소년 나눔활동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기 위한 전문가 FGI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문제는 학교에서 계획한 봉사활동 시간보다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창의적 체험활동 제도화에 의한 봉사학습의 확대, 봉사활동 결과의 입시제도에서의 반영 등으로 인해 자원봉사의 자발성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인만큼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계획한 봉사활동 시간보다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안이었다.

조△△ : 지금... 창체활동 안에 봉사활동이 들어가 있거든요. 4개영역 안에 들어가는데, 그게 들어감으로 인해 이제는 학생들 스스로라던가, 개별적으로 바깥에 나가서 봉사 동아리에 참여한다던지, 단체 참여해서 하는 부분 만큼도 학교안에서 해버리고, 수업시간에 다 수렴을 해버립니다. 그니까 자원성을 더 없애버리는 상황이고, 자발성이나 이런것들을 더 없애버리는 상황이고...

전문가 FGI에서 청소년 나눔활동 개선방안으로 제기된 다음 문제는 청소년 자원봉사외에 기부활동 활성화에 대한 문제였다. 청소년 기부활동 활성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은 청소년들이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에 종사하여 돈을 버는 연령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부라는 행위가 자원봉사와는 또 다르고 청소년들의 개인적 사회적 성장에 강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부에 대한 교육도 받고 기부관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부를 교육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반면, 청소년 기부활동 활성화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입장은 청소년들이 아직 경제활동에 종사하여 돈을 버는 연령대가 아니고, 기부활동을 입시 등과 연계시켜서 시행하면 경제적 계층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기부금이 다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기부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외에 기부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청소년 기부활동이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대체하는 것은 안되고,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위상이 설정되어야 되며, 반드시 합리적인 기부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하며, 청소년 개인이 아니라 청소년 기부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해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형태로 신중하게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김○○ :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비영리 NGO단체다 보니까 모금활동을 활발히 진행할 수 밖에 없는 단체고, 저희가 모금 분야에서도 스쿨 펀드레이징.. 그니까 학교에서 진행하는 것들에서는

활발히 진행을 하고 그래서 사실 유아부터 시작해서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까지 사업이라던지 모금을 특화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기부를 하라는 게 중요하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나눔의 필요성이라던지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장 기부해가 아니고, 이리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나눔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도 나눔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더 나아가다면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던지 자원봉사와 관련된 그런 기부를 할 수 있는 매개체를 지원해주는거죠.

이○○: 우리나라의 기부문화는 타 선진국이나 OECD 가입국가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떨어지는 부분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기부를 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부모님의 돈을 받아서 하는.. 기부가 강제가 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되는 건데, 이거를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어제 면접을 봤던 동아리중에 한 동아리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바자회를.. 프리마켓에 참여하는거죠. 프리마켓에 참여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장품이라던지, 물품이라던지, 다른데서 기증받은 물품을 바자회에 참여해서 판매를 해서 20만원정도를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20만원을 가지고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한 활동비로도 사용을 하고, 그리고 모은 돈을 연말쯤에 이웃에 기부하는.. 정말 저는 봤을 때 그런게 정말 좋은 하나의 기부문화..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이 기부, 저는 진짜 우려스러워서 하는건데, 하게 된다고 하면 새로운 계층갈등을 낳을 수가 있는 거죠. 가지신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쏟아 붓게 되겠죠. 그렇지 않아도 기부입학제도 생각하는데..

2) 나눔활동 교육강화 관련 경험적 자료

〈양적 설문조사 자료〉

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청소년들이 33.5%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활동 참여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28.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에 대한 의견 (빈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계
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442 (7.5)	969 (16.4)	2514 (42.6)	1589 (26.9)	388 (6.6)	5902 (100)

표 8 청소년들의 기부에 대한 생각 (빈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계
기부활동 참여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이 부족하다	712 (10.2)	1099 (15.7)	3197 (45.8)	1570 (22.5)	405 (5.8)	6983 (100)

〈질적 면접조사 자료〉

또한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봉사활동 등 나눔활동에 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다고 얘기하였다. 봉사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은 거의 받은 경험이 없고 봉사사이트 정보 정도 알려주는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봉사활동 등 나눔활동에 관한 교육을 받으면 지금보다 봉사활동에 더 많이 접근해서 봉사활동을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주었다.

김○○ : (학교에서 봉사활동 관련된 교육같은걸 해줬던 적은?) 아니요. (한번도 없었어요?) 네...(봉사활동 교육같은 걸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애들도 좀 더 봉사활동에 접근을 많이 할 것 같고요.

박○○ : (그러면 왜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지나 의미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아본 적 있어요?) 아니요. (그런 교육이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학교에서?) 봉사활동 하는데 더 잘할 것 같아요.

김△△ : (혹시 그러면 우리 친구 학교에서 나눔교육이라던지, 봉사활동 관련된 교육같은거 받아본적 있어요?) 봉사활동 교육이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선생님이 와서 해준 적 있어요?) 없었어요...

정○○ : (혹시 학교에서 봉사활동에 관련된 교육같은걸 해준적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봉사사이트나, 우리학교와 결연된 기관알려주거나요...

이△△ : (혹시 그러면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러가기 전에 우리가 왜 봉사활동을 해야되는지 가서 뭘 해야되는지 교육같은걸 선생님이 해주신 적 있어요?) 학교 봉사활동은 한적 없어요.

박△△ : (혹시 학교나 이런 기관에서 나눔교육이나 봉사활동 전에 사전교육을 받아본적 있어요?) 공개적으로 단체로 모여가주고 얘기해주시지는 않고, 그냥 애들이 선생님한테 물어보거나 선생님 따로 애들앞에서 말해주는 편이라서 그렇게 막 잘 얘기는 안해주세요.

기부관련 기관에서 청소년 나눔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전문가 선생님들도 청소년 나눔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률이 많이 낮다고 얘기해주었다. 학교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부터가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서 신청하기보다는 입시에 필요해서 마지 못해 신청하는 정도의 인식만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김△△ 선생님 : 그런데 가장 심각한 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미투위라는 나눔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봉사활동이라는 의미가 어떤 거고, 모금이라는것, 왜 도와줘야하는지 어려운 사람들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교육신청률이 엄청 낮아요. 그니까 학교 자체에서의 그런 필요성이나 인식도가 낮다는 거죠.

김□□ 선생님 : 아니요. 기부교육이 아니라 인권이나 이런 교육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부가 목적이라면 좀 어렵겠다..

봉사활동 기관에 종사하시면서 청소년들에게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전문가 선생님은 봉사활동 등 나눔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해주었다. 효과적인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봉사활동도 제대로 이뤄지고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가능성이 증대된다는 것이다.

이○○ 선생님 : 이제 교육개정이 일어나면서 봉사활동이 의무적으로 하는 걸로 아이들은 인식을 하고 있죠. 의무봉사활동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봉사활동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어떠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지, 자기에게 맞는 봉사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활동이 진행되다보니깐 아이들 관심도 떨어지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인거죠. 한마디로 준비과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행과 평가가 굉장히 나쁘게 되는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해야하니까 무조건 시키는거고, 제대로 된 교육없이 시키는거고..... 학교에서

진행되어지는 봉사교육은 대집단으로 많이 진행이 되요. 전교생을 한다던지, 아니면 학년별로 한다던지. 뭐 긍정적인 것은 저희들이 봉사교육을 나가지만 반별로 소그룹으로 진행될때는 교육의 효과가 높죠. 그러니까 제대로 하고자 한다면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봉사활동교육이 먼저, 소양교육이 먼저 되어 봉사활동, 그리고 봉사활동에 대한 평가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학창시절에만 하는 봉사활동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이웃에 대한 봉사라던지 그런 관심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전문가 FGI 자료〉

전문가 FGI에서 청소년 나눔활동 개선방안으로 논의된 다음 문제는 청소년 자원봉사이든 기부이든 청소년 나눔활동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겠다는 것이었다. 입시와의 연계, 창의적 체험활동의 제도화, 인정보상제 강화 등을 통해 자발성이 일부 훼손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자원봉사, 기부에 대한 청소년 나눔활동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 나눔활동에 대한 교육을 학교현장에서 교과서를 가르치는 형태이든 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한 교육형이든 학교에서 담당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학교보다는 현장에서 학교를 찾아가든 아니면 기관이나 시설에서 교육을 시키든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전문가 FGI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청소년 나눔활동 교육은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하며,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기 보다는 시설, 단체 등의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이었다.

조△△ : 교육이 좋는데 학교에서 하는 교육은 한계가 좀 있죠. 내놓아야 되는데, 안 내놓고 자꾸 뭘 하려고하면 똑같습니다. 그거는 얘기하기 무리한 정도의 입시아닌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축소되고 왜곡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도적으로 간다고 하면 제도에서는 아이들을 일정시간 되면 다 내보내고 밖에 나가서 이런 걸 지향점을 찾아서 교육을 받던지, 알려주는 단체 있으니까 가서 배워오라는 그런 식으로 해야 하는데, 학교에서 애들 보내려 하니까 예산이 필요하고, 뭘 해야되고, 아이들 안전도 책임져야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밖에 없죠. 오늘 쪽 이야기 나왔던 것도 자원봉사도 그렇고 기부나 이런 것도 학교가 아이들을 내놓는 그래서 사회에서 다같이 맡기는 그런 교육개혁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 그니까 이게 교육이라는거는 소규모로 진행될수록 효과가 높은건데 학교에서 그걸 분명히 알거든요. 그런데 일단 시간뺏는 거는 아이들 통째로 한시간 빼서 자원봉사교육 딱 시키고, 교육적

효과가 없는 상태에서 교육은 했다. 자원봉사 나가라. 그러면 아이들이 자원봉사가 될 수 밖에 없거든요. 소규모로 학교에서 진행하는 반별로 하던지, 동아리별로 연계되는 기관에 나가서 교육을 받던지.. 그런식으로 효과가 높은 교육을 좀 만든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3) 봉사관련 동아리활동 활성화 관련 경험적 자료

〈양적 설문조사 자료〉

〈표 9〉는 나눔활동 참여요인 중 동아리활동 관련 변수인 도움조직 사회자본(무유, 중심성, 친밀성, 상호성, 정체성)이 전체봉사활동 참여무유,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된 봉사활동 참여무유,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무유, 기부활동 참여무유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도움조직 사회자본 변수가 전체봉사활동 참여무유,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된 봉사활동 참여무유,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무유, 기부활동 참여무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나눔활동 참여요인이 나눔활동 참여무유에 미치는 영향

변수	전체 봉사활동		학교 교육과정 봉사활동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기부	
	B	Exp(B)	B	Exp(B)	B	Exp(B)	B	Exp(B)
남성더미	-0.360	0.698***	-0.251	0.778***	-0.272	0.762***	-0.474	0.622***
학년	0.003	1.003	-0.045	0.956***	0.121	1.129***	-0.126	0.882***
종교무유더미	-0.029	0.972	-0.074	0.929	0.043	1.044	0.136	1.145**
경제수준	0.040	1.041	0.041	1.042	0.011	1.011	0.102	1.108***
시간노력손실	0.028	1.028	0.020	1.020	-0.022	0.978	0.010	1.010
주위칭찬	-0.098	0.906*	-0.029	0.971	-0.088	0.915**	-0.049	0.952
나익즐거움	0.214	1.238***	0.150	1.161***	0.134	1.143***	0.168	1.182***
나의죄책감	-0.030	0.971	-0.057	0.944	0.020	1.020	0.040	1.041
주위비난	-0.013	0.987	-0.040	0.961	0.003	1.003	-0.078	0.925**
이타적동기	0.055	1.057	0.124	1.132*	-0.016	0.984	0.100	1.105*
개인규범	0.153	1.165**	0.032	1.032	0.125	1.133**	0.163	1.177***
자아정체성	-0.098	0.907	-0.073	0.930	0.038	1.039	0.049	1.050
주변인인지	0.045	1.046	0.063	1.065	0.011	1.011	-0.089	0.915**
도움기회	0.024	1.024	0.024	1.024	0.077	1.080**	0.056	1.058
신뢰	-0.047	0.955	-0.061	0.941	-0.060	0.942*	-0.090	0.914**
도움조직 사회자본	0.281	1.324***	0.202	1.223***	0.218	1.244***	0.158	1.172***
상수항	0.384	1.469	0.597	1.817*	-1.954	0.142***	-0.968	0.380***
-2 Log우도	5247.260		6982.721		8962.834		8818.324	
Cox와 Snell의 R ²	0.040		0.033		0.071		0.097	
Nagelkerke R ²	0.069		0.050		0.095		0.129	

*p < .05, **p < .01, ***p < .001

〈표 10〉은 나눔활동 참여요인중 동아리활동 관련 변수인 도움조직 사회자본(무유, 중심성, 친밀성, 상호성, 정체성)이 전체봉사활동 참여횟수,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된 봉사활동 참여횟수,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횟수, 기부활동 참여횟수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도움조직 사회자본 변수가 전체봉사활동 참여횟수,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된 봉사활동 참여횟수,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횟수, 기부활동 참여횟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나눔활동 참여요인이 나눔활동 참여횟수에 미치는 영향

변수	전체 봉사활동		학교 교육과정 봉사활동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기부	
	B	β	B	β	B	β	B	β
(상수)	-1.300		0.805		-2.107		-0.835	
남성더미	-0.844	-0.033**	-0.410	-0.023	-0.438	-0.032**	-0.645	-0.073***
학년	0.459	0.090***	0.217	0.061***	0.241	0.087***	-0.085	-0.048***
종교무유더미	0.483	0.019	0.134	0.007	0.349	0.025*	0.304	0.034**
경제수준	0.306	0.026*	0.173	0.021	0.133	0.021	0.204	0.050***
시간노력손실	-0.107	-0.008	0.020	0.002	-0.127	-0.017	0.071	0.014
주위칭찬	-0.080	-0.006	-0.002	0.000	-0.076	-0.010	-0.105	-0.022
나의즐거움	0.483	0.035*	0.372	0.038*	0.110	0.014	0.209	0.043**
나의죄책감	0.308	0.025	0.147	0.017	0.163	0.024	0.147	0.034*
주위비난	-0.411	-0.034*	-0.291	-0.034*	-0.122	-0.018	-0.212	-0.050***
이타적동기	0.548	0.036*	0.375	0.035*	0.175	0.021	0.005	0.001
개인규범	-0.150	-0.010	-0.255	-0.023	0.105	0.012	0.226	0.041*
자아정체성	0.096	0.006	-0.005	0.000	0.101	0.011	0.145	0.026
주변인인지	0.256	0.019	0.252	0.027*	0.003	0.000	-0.084	-0.018
도움기회	0.789	0.059***	0.288	0.031*	0.501	0.069***	0.369	0.079***
신뢰	-0.454	-0.033**	-0.253	-0.026*	-0.201	-0.027*	-0.160	-0.033**
도움조직 사회자본	1.454	0.187***	0.739	0.136***	0.714	0.170***	0.293	0.108***
수정된 R ²	0.064***		0.032***		0.055***		0.058***	

*p < .05, **p < .01, ***p < .001

〈질적 면접조사 자료〉

봉사활동 동아리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있었다. 봉사활동 동아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 학교에는 봉사활동 동아리는 많지 않고 댄스부 등 다른 목적의 동아리가 많다는 것이다. 물론, 봉사활동 동아리에 소속되지 않고 일반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학교 내에 봉사활동 동아리의 설치 필요성과 일반동아리의 봉사활동 활성화의 필요성이 엇보이는 대목이다.

박○○ : 학교에는 이런 동아리 말고 댄스부나 그런게 많아요. (거기에 봉사랑 관련된 건 없고요?) 없을걸요..

김◇◇ : 그냥 봉사에 관련되지 않는 동아리여도 봉사시간을 주는 동아리가 굉장히 많아요... 네. 저는 홍보동아리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홍보동아리 그냥 중학교가서 홍보를 하면 봉사시간을 주거든요.

청소년 나눔관련 기관에 계시는 전문가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동아리를 통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다고 얘기해주었다. 다른 청소년 기관에 계신 전문가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동아리를 통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얘기해주었다.

김△△ 선생님 : 우선은 참여에 있어서 흥미도가 좀 틀려요. 저희가 왜냐면 친구들과 다같이 하는 거잖아요. 내가 혼자하는 것은 참여에 대한 흥미가 틀리잖아요. 그거는 누구나 똑같은 것처럼.. 또 혼자하는 것보단 여러명에서 다같이 하는게 아이들의 만족도도 더 높아지는 것 뿐더러 이게 단순하게 하는게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기획하고 하다보니까 더 뿌듯해하고 남는게 많죠. 그래서 많이 능동적이고....

조○○ 선생님 : 네. 개인별로하면 아무래도 이제 지속적으로 하기 힘들고 봉사를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다른 학교 수업이나 자기 과외나 이런걸 하면은.. 그니까 자기가 어떤 지점을 찾아서 하기도 힘들고, 개인적으로 어디 간다고 했을 때는 시설이나 이런테를 하고 싶어도 시설은 잘 안받아주거든요.... 아이들도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는 아무래도 그런 조직의 틀을 갖고 있는 게 좋고...

〈전문가 FGI 자료〉

전문가 FGI에서 청소년 나눔활동 개선방안으로 제기된 다음 문제는 봉사관련 동아리활동의 활성화 필요 문제이다. 청소년들이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봉사관련 동아리활동을 통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개인적, 사회적 발달과 관련해서 훨씬 낫다는 것이다. 봉사관련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의 형태에는 학교내에서 봉사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동아리를 늘리는 방법도 있고, 전문 봉사활동 동아리는 아닌 일반 동아리라 하더라도 자신들의 동아리활동과 연계된 봉사활동 횟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는데, 이 모든 방법을 통해서라도 봉사관련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창체활동에도 동아리활동을 활성화하게 기본적인 제도화가 되어 있으므로 봉사관련 동아리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는 것이다.

이○○ : 개인이 하기에는 충분히 쉽지 않은 것을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교육을 잘 받으면서 타인과 친구, 또래집단과의 어떻게 보면 같은 활동을 하면서 재미도 느끼고, 동기부여도 되고 그 활동들이 저는 개인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좀 더 풍부하게 자원봉사활동을 즐겁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 : 청소년들은 특성상 기본 또래문화이거든요. 어른들이 시켜서 하면 오히려 반항심과 거부심만 낳는거고, 친구가 하자고 하고 그들의 언어로 설득을 하고, 동기부여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거고, 그 다음에 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아이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들이 전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충분히 전달하기 때문에 교육적 효과도 높고요. 이거는 만족도나 여러 가지가 높고, 그러려면 또래 지도자들을 많이 양성하고, 그것을 전파하고 전달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면 바람직한 문화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박○○ : 하나 더 말씀드리면 동아리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선생님들을 꼭 한분을 끼게 해서 체제를 합니다. 교사가 있어야만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지도교사가 있어야만 동아리로 인정을 해줍니다. 안그러면 잘못하면 불법써클이라던가, 불량써클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런 체제를 두고 있어요.

4) 청소년 나눔활동 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강화 관련 경험적 자료

〈양적 설문조사 자료〉

봉사활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개선과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31.6% 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에 대한 의견 (빈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계
봉사활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개선과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398 (6.7)	592 (10.0)	3044 (51.6)	1283 (21.7)	584 (9.9)	5901 (100)

〈전문가 FGI 자료〉

전문가 FGI에서 청소년 나눔활동 개선방안으로 논의된 다음 문제는 청소년 나눔활동 프로그램의 지역사회 연계 강화에 대한 문제였다. 청소년 나눔활동 프로그램의 지역사회 연계 강화에 대한 문제는 청소년 나눔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모두 맡아서 구성해서 진행하는 형태와 지역사회 청소년 단체, 기관, 시설쪽에 위탁을 해서 그 쪽 나눔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있는데 어느 형태가 더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한 문제였다. 전문가 FGI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중심을 잡되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는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조△△ : 기본적인 사항은 학교에서 해야하는 거 같고요. 교사가 아이들의 수준과 발달사항을 보고 적절한 언어와 기자재나 그 당시의 효과적인 것들로 기본적인 거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고, 실제로 체험해본다거나 경험해본다거나 이런 건 사회적으로 연결시키는게 바람직한 거는 누구나 답을 아는데.. 이거는 책임의 소재, 안전과 관련된 책임의 소재 이런 것들이 있다보니까, 그런 바람직한 부분들이 전부 다 들어지는 상태인데, 어쨌든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 학교에서 교사가 계획을 하느냐, 위탁을 하느냐인데 이게 분명히 자생동아리거든요. 자생인데 교사는 관리만 해주는 거죠. 아이들은 자생적으로 이루어지는거고, 그런데 자생동아리의 활동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자기주도성해서 큰 부분을 성장시킬 수 있거든요.

김○○ : 저희 기관같은 경우에는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어쨌든 학교 현장에서 신청해주시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이 가능하게끔, 그리고 대규모로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계획하고 컨트롤하는게 좋기는 하지만 사실 대상도 한정되어 있고, 연속성이라는게 사실 힘들거든요.

김△△ : 저희들쪽의 고민은 자원봉사센터 현장쪽에서 있다보니까 주문을 받는 부분들이.. 물론 청소년 봉사활동 자체가 어느 특정시기에 확 몰리는 현상이 토요일이건, 일요일이건, 방학기간에 몰리는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내가 봉사활동을 하고 싶는데, 봉사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해야지만 되는데, 마땅히 할 일감을 못찾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런쪽에서 보면 자원봉사 관련해서 언제든지 그곳을 찾아가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터전들이 자꾸만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관 단체들은 많이들 만들어 줘야지만 되지 않을까하는 책무같은것도 느끼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때는 학교 내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됐든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가져가려는 노력들이 학교에서는 굉장히 열려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5) 청소년 나눔활동 지원인프라 개선관련 경험적 자료

〈전문가 FGI 자료〉

청소년 나눔활동 담당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전문가 FGI에서 청소년 나눔활동 개선방안으로 논의된 다음 문제는 청소년 나눔활동 담당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에 대한 문제였다. 청소년 나눔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학교에서 청소년 나눔활동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교사에 대한 가산점과 같은 인센티브 강화, 전문 연수프로그램 실시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 아직 충남쪽에는 확답은 못받았는데, 저희는 자꾸만 요구를 합니다. 학교자원봉사를 하는 선생님들, 어떤식으로든 인사고과를 줄 수 있는.. 그계 영점 몇점이라고 그러더라도.. 직접적인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 마련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 프로그램을 다른 교과과정속에서의 연수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원봉사에 대해서 같이 고민 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아직 회신은 못받은 상태입니다.

이○○ :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가 아까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산점을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던지 그계 굉장히 크거든요. 선생님들께서 받아들이시는게.. 일례로 청소년 활동쪽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연맹과 관련되어 있는 스카우트라던지.. 그런것과 관련된 교사 가산점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쪽분야의 활동은 완전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가산점이나 그런게 교사한테 주어지느냐 안주어지느냐 그런게 활동과 외부의 활동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오히려 강화하면 강화할것이지 빼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청소년 나눔활동 전문코디네이터 신설 : 전문가 FGI에서 청소년 나눔활동 개선방안으로 논의된 다음 문제는 청소년 나눔활동 지역 코디네이터 제도 신설에 대한 문제였다. 청소년 나눔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지역사회에서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연계역할을 수행할 전문 코디네이터 제도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 네. 지역 코디네이터를 한번 줘.. 그게 없으니까 선생님들은 상담을 하고 싶어도 어디에 어달가서 뭘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박○○: 그런 정보가 거의 없어요.

조△△: 그러니까요. 가서 물어보면 소규모의 봉사활동을 아이들하고 하고 싶다는 교육은 잘 시키는데, 실제로 해줄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찾기가 진짜 힘들고요. 거기에다가 몇 개 더해버리면 힘든 상황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사회는 만들어나가고 프로그램을 만들던지 시스템화 할 필요가 있고 그걸 연결시켜주는 코디네이터 역할이 기관이던지 사람이던지.. 그런 것들을 제도화할 필요는 있겠다.. 그것이 있으면 향후에는 교육적인 부분도 그렇고 어쨌든 발전을 계속 하려고 했을 때는 그런 지원체계망 이런 것들이 빨리 시급하게 만들어지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 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은 저희도 학교랑 바로 소통을 할 수는 없거든요. 중간에서 누가 소통만 된다고 하면 서로가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없다보니까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답답하고, 저희도 그렇고..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박○○: 학교에서도요. 업무가 맨날 바뀌잖아요. 업무분장도 맨날 바뀌고..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학교에 업무가 잘 안바뀌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요즘은 진로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좀 연속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5. 정책적 제언

1)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시간 확대

이 연구의 첫 번째 정책적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의 시간 확대이다. 현재 한국에서의 청소년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계획한 봉사활동과 개인이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시행되고 있는데, 입시위주의 교육문화, 창의적 체험활동 등 봉사학습제도의 보수적 적용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반적으로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계획한 봉사활동 시간이 많고,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의 시간은 많이 적은 편이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수행한 양적 설문조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봉사활동 참여무유, 참여횟수, 참여시간의 모든 면에서,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보다는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의 참여 경험이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우울감, 공격성, 진로성숙, 리더십, 학교적응, 다문화수용도, 공동체의식 등 청소년들의 개인적, 사회적 성장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질적 면접조사의 분석결과에서도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보다는 개인이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가 훨씬 자발적이고 훨씬 덜 형식적이며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진행한 전문가 FGI 분석결과에서도 봉사활동 결과의 입시연계, 창의적 체험활동에 의한 봉사학습의 제도적 강화, 인정보상제 등으로 인해 자원봉사의 원래 중요한 가치인 자발성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한 봉사활동 시간보다는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시간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따라서 교육부 등 관련부처에서 이러한 논리적 분석결과를 받아들여, 청소년들의 봉사활동 중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계획한 봉사활동의 시간은 상대적으로 줄이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시간은 상대적으로 늘려나가는 지침을 학교 현장에 보내 청소년 자원봉사 참여의 자발성이 확대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2) 청소년 기부활동의 제한적 활성화

이 연구의 네 번째 정책적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 기부활동의 제한적 활성화이다. 현재 학교에서 자원봉사활동은 공식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만 기부활동은 공식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이 연구의 양적 설문조사 분석결과에 의하면, 봉사활동 참여무유, 참여횟수, 참여시간의 모든 면에서, 청소년들의 기부활동이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한 봉사활동 참여보다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우울감, 공격성, 진로성숙, 리더십, 학교적응, 다문화수용도, 공동체의식 등 청소년들의 개인적, 사회적 성장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질적 면접조사의 분석결과에서도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물질기부가 가져다 준 뿌듯함과 기쁨을 얘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연구의 전문가 FGI에서도 기존의 청소년들이 돈을 버는 연령대는 아니지만 기존의 자원봉사 외에 교육적인 의미에서의 청소년 기부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다만, 기부활동을 활성화함에 있어, 청소년의 경제적 계층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기부금의 편차가 커서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기부활동을 자원봉사활동을 대체하는 것으로 설정해서는 안되고 자원봉사활동을 보완하는 형태로 제도화되어야 하며, 청소년 개인이 개인적으로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학교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기부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소액기부를 하는 등 제한적으로만 참여하게 해서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학교, 관련기관 등 전달체계를 통해서 이러한 취지의 기부활동의 제한적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청소년 나눔활동 교육 강화

이 연구의 두 번째 정책적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 나눔활동 교육의 강화이다. 현재 한국의 청소년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의 입시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내 봉사학습의 제도적 강화, 여러 가지 인정보상제에 의한 인센티브제 강화 등으로 인해 봉사활동 원래의 자발성은 약화되고 봉사학습이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을 갖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로 참여하지 않으려는 청소년들에게는 봉사학습을 통해 학교 교육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원래의 정신인 자발성에 입각하여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입시연계, 봉사학습의 강화, 인정보상제의 실시 등으로 자발적 참여동기가 떨어져 있는 청소년들에게 앞에서 살펴보았던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시간 확대와 더불어 청소년 자원봉사 참여의 자발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 나눔활동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양적 설문조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청소년들이 3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질적 면접조사의 분석결과에서도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으며, 봉사활동에 관한 교육을 받으면 지금보다 봉사활동에 대한 접근성도 향상되고 봉사활동을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진행한 전문가 FGI에서도 입시와의 연계, 창의적 체험활동의 제도화, 인정보상제 강화 등을 통해 자발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주요한 방법은 청소년 나눔활동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청소년 자원봉사 등 청소년 나눔활동에 대한 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기본적인 교육을 주도하되 학교에서 직접 교육을 주도하기 보다는 지역사회의 시설, 단체 등 현장 전문가들이 학교방문, 혹은 청소년들의 기관초대 형태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자원봉사 외에 최근에 사회전반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기부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교육부 등 관련부처에서 학교 교육현장에 이러한 청소년 나눔활동 교육의 강화에 대한 지침을 내리고 학교 교육현장에서 시설, 단체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하여 이를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나눔활동 교육이 강화되도록 시행하게 해야 할 것이다.

4) 봉사관련 동아리활동의 활성화

이 연구의 세 번째 정책적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 봉사관련 동아리활동의 활성화이다. 현재 학교에서 많은 수의 청소년들은 동아리 형태로 봉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개별적인 형태로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연구의 양적 설문조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동아리, 단체, 시설 등 나눔활동 관련 조직에서의 사회적 경험이 청소년 나눔활동 참여무유, 참여횟수, 참여시간 등 모든 나눔활동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적인 형태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보다는 동아리활동의 형태로 나눔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더 많은 성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질적 면접조사에서도 동아리를 통한 봉사활동 과정에서 많은 것을 얻었으며, 봉사활동 동아리가 필요한데 학교에서는 봉사활동 동아리가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전문가 FGI 분석결과에서도 청소년들의 봉사활동 참여형태가 개인적인 형태보다는 동아리를 통한 참여형태가 훨씬 나은 성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개인적, 사회적 발달을 위해서는 봉사관련 동아리활동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봉사관련 동아리활동의 활성화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나는 학교마다 봉사를 전문으로 하는 동아리를 많이 설치하여 봉사동아리를 확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문 봉사활동 동아리가 아니더라도 일반 동아리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지금보다 많이 할 수 있게 독려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봉사활동 동아리 경진대회 등을 통해 이러한 봉사관련 동아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 청소년 나눔활동 프로그램의 지역사회 연계 강화

이 연구의 다섯 번째 정책적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 나눔활동 프로그램의 지역사회 연계 강화이다. 청소년 나눔활동 관련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학교에서 담당교사 선생님이 직접 청소년 나눔활동 프로그램을 만들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고, 학교에서는 기획만 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수행하는 것은 지역사회 시설, 단체 관련 전문가들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학교와 지역사회 시설, 단체가 역할을 분담해서 인지적인 부분은 학교에서 전문으로 담당하고 비인지적인 부분은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시설, 단체에서 맡아 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개인적, 사회적 성장발달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양적 설문조사 분석결과에 의하면, 봉사활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개선과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전체의 3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전문가 FGI에서도 청소년 나눔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모두 맡아서 구성해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지역사회 청소년 단체, 기관, 시설 쪽에 위탁을 해서 그쪽 나눔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교육부에서 학교를 통해 이러한 형태로 운영되도록 지침을 내리고,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지역사회 시설, 단체 등의 청소년 나눔활동 프로그램 발굴,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고 지역사회 시설, 단체 등에서는 청소년 나눔활동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발굴, 체계적인 운영방법 등을 발전시켜서 청소년 나눔활동 프로그램의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6) 청소년 나눔활동 담당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이 연구의 일곱 번째 정책적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 나눔활동 담당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이다. 각 학교에서 청소년 나눔활동 담당교사들이 청소년 나눔활동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 많은 업무 부담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고과의 업무가산점 등을 받지 못해 사기가 저하되어 있어 이것이 청소년들의 나눔활동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전문가 FGI에서 많은 분들이 청소년 나눔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른 여러 정책들과 함께 각 학교의 청소년 나눔활동 업무 담당교사에 대한 인사고과에서의 가산점과 같은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전문 연수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해당 교육청에서 이러한 부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청소년 나눔활동이 담당교사들의 과중한 업무에 따른 사기저하로 인해 비활성화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된다.

7) 청소년 나눔활동 전문코디네이터의 신설

이 연구의 여섯 번째 정책적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 나눔활동 전문코디네이터의 신설이다. 현재 청소년들의 나눔활동을 활성화하는데 있어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는 학교와 지역사회 시설, 단체간의 연계를 원활히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교 담당자의 잦은 교체, 입시 위주 학교문화로 인한 학교와 지역사회 시설, 단체와의 연계 약화 등으로 인해 학교와 지역사회 시설, 단체간의 연계가 많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앞의 양적 설문조사 분석결과에 의하면, 청소년들 전체의 31.6%가 봉사활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개선과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의 전문가 FGI에서도 각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학교 교사, 현장 전문가 분들을 대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역할을 전담해서 수행할 전문코디네이터 제도의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지역사회 청소년 나눔활동 전문 코디네이터 제도의 신설은 여성가족부에서 전담해서 제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청소년 나눔활동을 전담하고 있는 각 지역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청소년 나눔활동 전문코디네이터를 두고 학교와 지역사회간의 연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8) 두볼넷 시스템의 상호작용 강화형으로의 개선

이 연구의 여덟 번째 정책적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 전문 나눔활동 사이트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두볼넷 시스템의 개편이다.

이 연구의 양적 설문조사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39.2%가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 내용(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청소년들이 34.7%가 봉사활동 내용(프로그램)에 청소년들의 욕구가 반영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질적 면접조사에서도 두볼넷에 들어가도 원하는 티전들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직접 봉사활동 티전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의 두볼넷 시스템은 티전이 봉사활동 프로그램 정보를 등록하면, 청소년의 욕구나 의사가 티전 등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반영되는 과정없이 청소년이 정해져 있는 봉사활동 프로그램들 중 하나를 그냥 선택해서 신청해야만 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티전과 청소년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의견의 조율 등이 일어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두볼넷 시스템을 개선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도 하고 청소년과 티전과의 관계에서 프로그램이 수정될 수도 있는 기존보다 상호작용이 강화되는 형태로 두볼넷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두볼넷 시스템을 상호작용 강화형으로 개선하는 것은 여성가족부와 청소년활동진흥원이 맡아 진행해야 될 것이다.

9) 청소년 나눔활동 정책 수행기구의 체계화

이 연구의 아홉 번째 정책적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 나눔활동 정책 수행기구의 체계화이다. 현재 청소년 나눔활동 정책수행의 중추기구인 청소년활동진흥원과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이전의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시절에 비해 예산과 인력이 많이 축소되어 있으며 정책실행을 위한 세밀한 조직망이 많이 갖춰져 있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현재와 같은 정책수행 기구의 형태로는 청소년 나눔활동을 활성화하기에는 많이 미흡하다.

따라서 우선, 청소년 나눔활동 정책수행의 중추기구인 청소년활동진흥원 참여봉사부의 예산과 인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청소년활동진흥원 참여봉사부를 확대하여 명실공히 한국 청소년 나눔활동의 중추기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확대 개편된 참여봉사부에서 외국 청소년자원봉사기관과의 연계도 수행하고 공동 포럼도 개최하는 등의 여러 가지 확대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지방의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예산 및 인력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중앙의 청소년활동진흥원 참여봉사부의 확대에 걸맞게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시군구 단위에서 청소년 나눔활동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군구 단위의 청소년활동 인프라인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에서 청소년 나눔활동 업무를 맡아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시군구 단위에서의 청소년 나눔활동 지원을 통해 청소년 나눔활동 활성화를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10) 관련 법률의 개정

현재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기부활동 등 나눔활동에 대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미흡하게 제시되어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의 청소년활동에도 자원봉사활동, 기부활동 등이 명확히 들어가 있지 않고(청소년기본법, 2015),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5조에도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만 제시되어 있을 뿐 세분화된 조항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다음의 표과 같이 청소년기본법 제3조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5조에 대한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구분	현행	개정안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정의)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자원봉사활동 기부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65조(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5조(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기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등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기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등의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기부활동에 대한 적절한 교육 등 자발적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기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봉사관련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출처: 청소년기본법[법제처시행 2015.6.22.]; 청소년활동진흥법[법제처시행 2015.8.4.], (2015. 11. 10).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2015년 11월 10일 인출.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2014b, pp.36의 표를 참조하여 수정 보완하고 재작성한 것임.

참 고 문 헌

- 강철희, 유재윤, 박소현 (2012). 기부와 자원봉사에의 참여 행동에 관한 연구-누가 선택적으로 참여하고 누가 결합적으로 참여하는가?-. **한국사회복지학**, 64(2), 273-298.
- 강현철 (2015). 청소년 나눔활동 표본설계보고서.
-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 편 (2000). **심리척도핸드북 I**. 서울: 학지사.
- 구재관, 권향임, 김근아, 김남용, 김현옥, 박성석 외 (2013). **자원봉사론**. 창지사.
- 구지운 (2013). 기부행동의 성별 차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7, 93-122.
- 권현수 (2010). 자원봉사활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성별, 연령별 다집단 분석의 적용.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4, 83-107.
- 김광일, 김재황, 원호택 (1984). **간이 정신진단검사 실시 요강**.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김덕주 (2009).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기의 사회성발달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지원학회지**, 4(1), 123-146.
- 김동배, 조학래 (1996). **청소년 자원봉사의 길잡이**. 서울: 동인.
- 김선숙, 안재진 (2012).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포래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3(1), 339-363.
- 김성준 (2003). 자원봉사활동 참가자의 개인별 특성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7(4), 253-270.
- 김숙경 (2005). 자원봉사자 개인 및 조직특성에 따른 봉사활동의 지속 요인. **한국지역사회복지학**, 16, 1-22.
- 김숙정 (2009).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이해. **국어교과교육연구**, 19, 181-202.
- 김연, 김정우 (2014). 자선모금기관에 대한 기부자의 신뢰가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 조직동일시의 매개효과.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6(3), 89-113.
- 김연수, 이광석 (2011). 모금활동이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사회과학연구**, 27(3), 25-51.
- 김영채 (2010). 창의, 인성, 봉사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사고개발**, 6(2), 1-24.
- 김한구, 안성호, 정하성, 황택주, 권중돈, 이창수 외 (1997). **자원봉사론-이론과 실제**. 서울: 백산출판사.
- 김현옥 (1989).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관련변인과의 상관관계**.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민병수 (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관숙 (2012).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시민의식 형성에 미치는 효과**. 순천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선향 (2010). 청소년의 민주시민교육과 봉사학습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7(1), 167-186.
- 박성복, 김규희 (2008). 고등학생의 자원봉사활동과 자아존중감. **복지행정논총**, 18(2), 91-113.
- 박완성, 김기수 (2012). 고교생의 봉사활동이 자아정체감, 학교생활적응 및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방법연구**, 24(1), 23-40.
- 박재숙 (2013). 중학교 신입생의 봉사활동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분석. **청소년학연구**, 20(9), 1-2.
- 박종철, 이용운 (2012). 소득수준과 자아해석 유형이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 **고객만족경영연구**, 14(2), 107-124.
- 박태규, 윤병호, 정진욱 (2008). 기부횟수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재정학연구**, 1(3), 79-100.
- 박혜준, 김윤경 (2010). 봉사학습의 도덕교육적 함의와 교사의 역할. **도덕윤리과교육**, 31, 187-216.
- 보건복지부 (2013). **2013 보건복지백서**.
- 보건복지부 (2015.07.03.). 사회복지 자원봉사인증관리 홈페이지. <https://www.vms.or.kr/index.jsp> 에서 2015년 7월 3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15). **나눔기본법 제정안 설명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안전행정부 (2013). **2013 안전행정백서**.
- 양계민, 정진경 (2008). **사회통합을 위한 청소년 다문화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 (2013). **2013 청소년백서**.
- 우정자 (2012).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이 청소년의 지역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2(3), 119-147.
- 원미순, 박혜숙 (2010).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7(3), 225-245.
- 윤지윤 (2010). **청소년의 창의적 인성과 자아정체감 및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경상 (2014). 청소년 봉사활동의 실태 및 발전과제. **법정리뷰**, 31(1), 193-224.
- 이경상, 김진호, 오해섭, 김희진, 김재민 (2003). **한국청소년패널조사 I - 조사개요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경상, 서정아, 배상률, 성은모, 김지영, 강현철 (2012).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2010 III 사업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경상, 최향섭, 그레이스정 (2013).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I (13-R0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수애, 이성태 (2009). 개인의 기부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1(3), 69-95.
- 이순자 (2009).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지원학회지**, 4(1), 173-190.
- 이정해, 김현주 (2014). 물질적 지원이 대학생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1(1), 73-95.
- 장덕희, 이명옥, 양점도 (2011). 청소년 자원봉사경험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포항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8(9), 121-146.
- 전신현 (2011). 온라인 도움행동의 원인에 관한 연구. **정보화정책**, 18(1), 55-72.
- 전신현 (2015). 대학생의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의 도움행동 원인 비교. **한국청소년연구**, 26(1), 195-215.
- 조봉환, 임경희 (2003).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729-746.
- 조호운, 조성환, 김영희 (2012).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이 시민의식과 긍정적 자기가각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지**, 21(4), 729-744.
- 최창욱 (2001). **청소년의 리더십 생활기술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향순, 정태자 (2010). 청소년 자원봉사활동과 리더십 개발의 관계. **한국정책연구**, 10(1), 311-331.
- 크레존넷 (2015.04.15.). 창의적 체험활동. <http://www.crezone.net/>에서 2015년 4월 15일 인출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5.07.03.). 청소년자원봉사포털사이트 홈페이지. <http://dovol.youth.go.kr/dovol/index.do#>에서 2015년 7월 3일 인출
- 행정자치부 (2015.07.03.). 1365자원봉사 홈페이지. <https://www.1365.go.kr:444/nanum/prtl/web/vols/volsMain.do> 에서 2015년 7월 3일 인출.
- 홍은진 (2006). 자원봉사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비영리연구**, 5(1), 33-71.
- 황여정, 김경근 (2013). 고등학생의 더불어 사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사회자본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19(1), 61-86.

- 황창순, 강철희 (2002). 개인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자선적 기부노력을 중심으로. *한국비영리연구*, 1(2), 33-73.
- Brown, E., & Ferris, J. M. (2007). Social capital and philanthropy: An analysis of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n individual giving and volunteering.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6(1), 85-99.
- Chapman, M., Zahn-Waxler, C., Cooperman, G., & Iannotti, R. (1987). Empathy and responsibility in the motivation of children's help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3(1), 140-145.
- Crites, J. O. (1961). A model for the measurement of Vocational matur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8, 255-259.
- Dormody, T. J., & Seevers, B. S. (1994). Predicting Youth Leadership and Life Skills among FFA Members in Arizona, Colorado, and New Mexico. *The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35(2):65-71.
- Drollinger, T. L., & Johnson, D. P. (1995). Lifecycle, financial and attitudinal characteristics of charitable donors. *Consumer Interests Annual*, 41, 106-111.
- Hamilton, S. F., & Fenzel, L. M. (1988). The impact of volunteer experience on adolescent social development: Evidence of program effec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3(1), 65-80.
- Janoski, T., Musick, M., & Wilson, J. (1998). Being volunteered?: The impact of social participation and pro-social attitudes on volunteering. *Sociological Forum*, 13(3), 495-520.
- Johnson, M. K., Beebe, T., Mortimer, J. T., & Snyder, M. (1998). Volunteerism in Adolescence: A Process Perspectiv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8(3), 309-332.
- Metz, E., McLellan, J., & Youniss, J. (2003). Types of voluntary service and adolescents' civic development.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8(2), 188-203.
- Nenga, S. K. (2012). Not the community, but a community: Transforming youth into citizens through volunteer work. *Journal of Youth Studies*, 15(8), 1063-1077.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ales, P. C., Blyth, D. A., Berkas, T. H., & Kielsmeier, J. C. (2000). The effects of service-learning on middle school student' s social responsibility and academic succes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0*(3), 332–358.
- Thoits, P. A., & Hewitt, L. N. (2001). Volunteer work and well-be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2*, 115–131.
- Wingenbach, G. J. (1995). *Self-perceived Youth Leadership and Life Skills Development among Iowa FFA Members*. Doctoral dissertation(Ph.D), Iowa State University.

발표 2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V

김 영 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 희 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V³⁾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991년 한국정부는 전 세계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기준과 지침을 담고 있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후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해야 할 법적·도덕적 책임을 갖게 되었으며, 협약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정기적인 아동·청소년 권리실태를 모니터링 받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이후 세 차례 제출된 한국정부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심의 결과 지속적으로 권고를 받은 사항 중의 하나가 아동·청소년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 진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데이터 수집체계를 마련하라는 것이었다(김영지, 김경준, 이민희, 김지혜, 2013: 3).

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종합적인 청소년 인권실태 파악을 위한 지표체계 개발 연구가 추진되었다. 인권실태 연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추진된 제1기(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I~V))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추진되고 있는 제2기(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I~VI))로 구성되어 있다.

제1기 연구는 인권영역을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 영역별로 광범위한 개별지표 풀을 구축하는 기초연구로서 의의가 있었으며, 제2기 연구는 지표체계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국가보고서 작성지침 틀 기준으로 재구성하여⁴⁾ 정책활용도를 제고하고, 2개 영역씩 격년 조사되던 것을 한 해에 종합조사하는 것으로 조사주기와 체계를 변경하여 인권실태의 통합적 분석 여건을 마련하였다.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는 2009년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어 국가통계로

3) 이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년도 고유과제로 수행한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V」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한 것임.

4) 2014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대분류는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기초조건 및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 등 6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 인권지표 결과를 생산하고 있다(국가승인통계 제40201호).

한국사회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아동·청소년의 인권신장을 위한 국가사회적 노력을 수행할 것을 약속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아동학대와 체벌, 청소년폭력, 빈곤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취약 청소년 문제, 과다경쟁적 입시중심 교육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건강 문제, 노동인권 침해, 장애·이주배경·사법과정 아동·청소년의 인권문제, 청소년 참여권에 대한 인식 부족 등 다양한 아동·청소년 인권 개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와 변화양상을 파악하고 국제인권조약 가입국의 의무인 협약 이행정도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 개발한 것이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이며⁵⁾, 이를 통해 인권 현황과 진전상황에 대한 체계적 파악과 보다 과학적·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이에 신뢰할 만한 인권 모니터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권지표의 체계화 및 정교화, 지표 산출체계의 안정적 구축 등은 지표결과 산출 작업과 함께 2015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라 할 것이다. 특히 2017년 6월까지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통합국가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2015년도에는 설문조사를 통한 통계자료 분석과 함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 관련한 다양한 행정통계와 정책자료들을 보완검토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인권상황 분석과 정책과제 도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에 대한 반복적인 횡단조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와 변화양상 및 추이에 대한 시계열적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산 및 축적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 연구는 6개년도 사업의 5차년도 연구이다. 주요 연구내용은 첫째,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와 자료원의 정교화 및 타당성 제고 작업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지표 산출체계를 구축하고, 둘째, 실태조사와 행정통계 등을 통해 2015년도 지표결과 산출 및 종합지표 구축 이후 3년간의 인권상황 추이를 분석하며, 셋째, 이를 기반으로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정책 시사점과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번 발표원고는 2015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5)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는 “아동·청소년인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회체제가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에 비추어 아동·청소년 인권이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평가하고, 아동·청소년인권 실태와 변화양상을 나타내는 의미있는 통계지(최창욱·박영균·김진호·임성택·전성민, 2006: 23)”라 할 수 있다.

2. 조사개요

1)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와 조사방향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는 제1기(2006~2010)와 2기(2011~2016) 연구 역사를 거치면서 체계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2011년 2기 인권실태 연구 첫 해에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으로 구성된 기존의 지표체계를 부분적으로 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지침 체계로 재구성 작업을 시도하였고, 2013년에 들어 한 해에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시스템을 갖추면서 본격적으로 협약에 기반하고 국가보고서 작성 지원이라는 정책활용도를 주요기준으로 한 지표체계를 완성하였다.

2015년도에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근간이 되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작성지침(CRC/C/58/Rev.3) 중 기준에 ‘시민적 권리와 자유’의 하위내용이었던 ‘체벌 및 폭력’ 관련 내용과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의 하위내용이었던 ‘학대’ 관련 내용이 합쳐져서 ‘폭력 및 학대’라는 하나의 새로운 영역이 신설되었다.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대분류 영역은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폭력 및 학대,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 등 7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⁶⁾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국가보고서 작성지침과 일반논평 등 국제문서를 참고하고, 45명의 광범위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거쳐 확정된 2015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는 <표 1>과 같다. 2015년도 인권지표는 ‘7개 대분류 - 24개 중분류 - 57개 소분류(지표) - 148개 지표항목’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⁷⁾

148개 지표항목 중 60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88개는 행정자료 및 타분야 통계자료원 등을 활용하여 지표결과를 생산한다. <표 1>의 지표항목 중 ‘*’ 표시가 된 항목이 설문조사를 통해 생산되는 지표항목으로, 본 발표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6) 2015년 개정된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에 대한 공식문서 제목은 다음과 같음: Treaty-specific guidelines regarding the form and content of periodic reports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paragraph 1(b),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CRC/C/58/Rev.3(2015, 4)).

7) 대분류 영역별 지표항목 개수는 1영역 인권일반 12개, 2영역 시민적 권리와 자유 24개, 3영역 폭력 및 학대 11개, 4영역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16개, 5영역 장애기초 보건 및 복지 32개, 6영역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21개, 7영역 특별 보호조치 32개 등이다.

표 1

2015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 설문조사)
1. 인권일반 및 일반 원칙	1-1. 인권일반 (제4조, 42조)	1-1-1. 인권인프라 구축 정도	1-1-1-1. 아동청소년인권관련 법제도 발전 1-1-1-2. 아동·청소년 인권기구·조직 1-1-1-3.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1-1-2. 인권에 대한 인지도	1-1-2-1. 유엔아동권리협약, 관련기관 인지도* 1-1-2-2.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정도* (가정, 학교, 지역, 전체, 사이버공간) 1-1-2-3. 인권의식 및 태도*
		1-1-3. 인권교육	1-1-3-1. 인권교육 경험* 1-1-3-2. 인권교육 받은 기관* 1-1-3-3.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
	1-2. 일반원칙 (제2조, 제3조)	1-2-1. 차별 경험률	1-2-1-1. 차별해 본 경험* 1-2-1-2. 차별받은 경험*
		1-2-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준수 정도	1-2-2-1.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준수 정도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2-1. 의견표명권 (제12조) 표현의 자유 (제13조)	2-1-1. 가정에서의 참여 정도
2-1-2. 학교에서의 참여 정도			2-1-2-1. 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2-1-2-2. 학급회의 운영 여부* 2-1-2-3. 학급회의에서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정도* 2-1-2-4.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정도* 2-1-2-5. 교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정도*
2-1-3. 사회에서의 참여 정도			2-1-3-1. 아동·청소년정책·사업 결정 과정 참여정도 2-1-3-2. 아동·청소년참여기구 인지도 및 활동 경험* 2-1-3-3. 선거참여연령에 대한 인식* 2-1-3-4. 참여권 보장 수준* 및 참여 장애 이유*
2-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14조)		2-2-1. 사상, 양심적 자유 보장 정도	2-2-1-1. 사상의 자유 보장 정도*
		2-2-2. 종교자유 보장정도	2-2-2-1.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2-2-2-2. 가정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2-3. 결사 및 집회의 자유(제15조)		2-3-1. 결사·집회 경험률	2-3-1-1. 결사·집회 경험률* 2-3-1-2. 집회 참여로 인한 피해 경험률*
2-4. 사생활의 보호 (제16조)		2-4-1.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	2-4-1-1.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
		2-4-2. 학생 정보 보호정도	2-4-2-1. 학교에서 교육비 미납 학생 정보 공개정도* 2-4-2-2. 학교에서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 공개정도* 2-4-2-3. 학교에서 개인 시험성적 공개정도*
2-5. 정보접근권 (제17조)		2-5-1. 매체 접근율	2-5-1-1. 매체 이용률 2-5-1-2. 유해매체 이용률 2-5-1-3. 아동·청소년 도서 발행 비율
		2-5-2. 정보제공 정도	2-5-2-1.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공지정도* 2-5-2-2.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정보제공 정도*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 설문조사)	
3. 폭력 및 학대	3-1.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제37조 가, 제28조 2항)	3-1-1. 청소년폭력 경험률	3-1-1-1. 정서적 학대 경험률* (모욕적인 말·욕설 등) 3-1-1-2. 폭력피해 경험* 3-1-1-3.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	
		3-1-2. 체벌 경험률	3-1-2-1. 체벌 경험률*	
	3-2.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제19조, 제39조)	3-2-1. 학대 및 방임 경험 정도	3-2-2-1. 아동학대 신고건수 3-2-1-2. 학대 및 방임 유형별 경험률 3-2-1-3. 중복지학대 및 재학대 경험률 3-2-1-4. 방임유형 및 정도*	
		3-2-2. 학대피해에 대한 서비스 제공 수준	3-2-2-1.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3-2-2-2.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아동학대 사례건수 3-2-2-3. 서비스 제공정도와 조치결과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4-1. 부모의 지도와 책임(제5조, 제18조 1항, 2항)	4-1-1. 부모와의 관계	4-1-1-1. 부모와의 대화시간 4-1-1-2. 부모와의 관계의 질	
		4-1-2. 보호·보육시설 이용률 및 서비스 실태	4-1-2-1. 방과후 보호자 부재 아동·청소년 비율 4-1-2-2. 보육시설 이용 및 설치 수준 4-1-2-3.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과 서비스 수준	
	4-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제20조)	4-2-1. 입양률	4-2-1-1. 국내외 입양현황과 추이 4-2-1-2. 입양에 대한 의식 4-2-1-3. 국내외 입양 사후조치	
		4-2-2. 대안양육 비율	4-2-2-1. 요보호아동 현황 4-2-2-2. 대안적 양육을 받는 아동·청소년 비율	
		4-2-3. 가출청소년의 서비스 이용률	4-2-3-1. 가출청소년 수와 보호시설 수 4-2-3-2. 가출 경험 여부와 가출 이유* 4-2-3-3. 가출시 서비스 이용*	
	4-3. 양육 및 보호 조치에 대한 심사(제25조)	4-3-1. 양육·보호 조치에 대한 서비스 적절성	4-3-1-1. 양육·보호 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4-3-1-1. 양육·보호 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4-3-1-2. 보호·양육시설 예산 4-3-1-3. 아동복지시설 평가결과 및 사후조치	4-3-1-2. 보호·양육시설 예산 4-3-1-3. 아동복지시설 평가결과 및 사후조치
5.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5-1. 장애(제23조)	5-1-1. 장애아동 및 청소년보호(지원)	5-1-1-1. 장애아동·청소년 통합교육비율	5-1-1-1. 장애아동·청소년 통합교육비율
			5-1-1-2. 특수교육현황 및 특수교사수	5-1-1-2. 특수교육현황 및 특수교사수
			5-1-1-3. 장애 청소년 진학을 및 취업을 추이	5-1-1-3. 장애 청소년 진학을 및 취업을 추이
	5-2. 생존 및 발달 (제6조 2항)	5-2-1. 사망률	5-2-1-1. 0세의 기대여명(평균수명)	5-2-1-1. 0세의 기대여명(평균수명)
			5-2-1-2. 영아·아동·청소년 사망률	5-2-1-2. 영아·아동·청소년 사망률
	5-3. 보건서비스 (제24조)	5-2-2. 안전에 대한 인식률	5-2-1-3. 사고 사망률	5-2-1-3. 사고 사망률
5-2-2-1. 범죄 피해율			5-2-2-1. 범죄 피해율	
5-2-2-2. 안전에 대한 인식률*		5-2-2-2. 안전에 대한 인식률*		
5-3-1. 보건 서비스 인프라 구축 현황		5-3-1-1. 보건교사 배치 현황	5-3-1-1. 보건교사 배치 현황	
	5-3-1-2. 지역사회 보건소 포함 신체, 정신건강관련 시설 비율	5-3-1-2. 지역사회 보건소 포함 신체, 정신건강관련 시설 비율		
5-3-2. 취약계층 보건 서비스 이용률	5-3-1-3. 아동, 청소년의 질병유형 및 대처방안	5-3-1-3. 아동, 청소년의 질병유형 및 대처방안		
	5-3-2-1.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의료서비스 현황 및 이용률	5-3-2-1.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의료서비스 현황 및 이용률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 설문조사)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5-4.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제24조)	5-3-3.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 제공률	5-3-3-1. 흡연율 5-3-3-2. 음주율 5-3-3-3. 기타 약물 사용율 5-3-3-4. 약물남용 예방교육 경험률	
		5-4-1. 건강에 대한 인식	5-4-1-1. 주관적 건강평가*	
		5-4-2. 신체적 건강	5-4-2-1. 운동 실천율* 5-4-2-2. 아침식사 결식률과 결식이유* 5-4-2-3. 수면시간과 수면부족 이유* 5-4-2-4. 비만율	
		5-4-3. 정신적 건강	5-4-3-1. 주고 싶다는 생각과 그 이유* 5-4-3-2. 우울증* 5-4-3-3. 스트레스 인지율* 5-4-3-4. 행복도와 행복하지 않은 이유* 5-4-3-5. 삶의 수준(2015추가)* 5-4-3-6. 자아존중감* 5-4-3-7. 고민거리대화상대*	
		5-5. 사회 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제26조 및 제18조 3항)	5-5-1. 아동·청소년복지 예산 국가간 비교	5-5-1-1. 아동·청소년 빈곤율, 빈곤율 국제비교 5-5-1-2. 아동·청소년복지예산 국가간 비교
			5-5-2.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지원수준	5-5-2-1. 취약계층아동현황 5-5-2-2.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현황 수준
		6-1. 교육여의 권리 (제28조)	6-1-1. 교육기회 보장 정도	6-1-1-1. 학생 취학률 6-1-1-2. 학생 진학률 6-1-1-3. GDP대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 6-1-1-4. 교원1인당 학생수 및 학급당 학생수
			6-1-2. 학교 부적응률	6-1-2-1. 학업중단율 6-1-2-2. 학업포기 결심여부와 이유* 6-1-2-3. 학교 문화 및 학교생활 만족도*(2015추가) ※ 2013년도 조사문항
			6-1-3. 대안교육 참여율	6-1-3-1. 대안학교수와 종류 6-1-3-2. 대안학교 학생 비율
	6-2. 교육의 목표 (제29조)	6-2-1.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	6-2-1-1.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 정도*	
		6-2-2. 학교 교육목표달성을 위한 노력 정도	6-2-2-1. 혁신학교 운영수 6-2-2-2. 혁신학교 운영 현황	
	6-3.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제31조)	6-3-1. 여가·문화·예술 활동기반 시설수	6-3-1-1. 전국 문화예술 기반시설 수 6-3-1-2. 청소년수련시설과 이용시설 수*	
			6-3-2-1. 여가·문화·예술활동 참여도 6-3-2-2. 아동·청소년단체활동 참가율* 6-3-2-3. 동아리활동 참가율* 6-3-2-4.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 6-3-2-5. 하루평균학습시간*	
		6-3-2. 여가·문화·예술활동 참여율	6-3-2-1. 전국 문화예술 기반시설 수 6-3-2-2. 청소년수련시설과 이용시설 수*	
			6-3-2-1. 여가·문화·예술활동 참여도 6-3-2-2. 아동·청소년단체활동 참가율* 6-3-2-3. 동아리활동 참가율* 6-3-2-4.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 6-3-2-5. 하루평균학습시간*	
6-3-2-1. 여가·문화·예술활동 참여도 6-3-2-2. 아동·청소년단체활동 참가율* 6-3-2-3. 동아리활동 참가율* 6-3-2-4.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 6-3-2-5. 하루평균학습시간*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 설문조사)	
7. 특별 보호 조치		6-3-3. 여가·문화·예술 활동 만족도 및 권리보장 정도	6-3-3-1. 여가시설 이용만족도*	
			6-3-3-2. 청소년활동에 대한 가정·학교지지 정도*	
	7-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7-1-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 침해율	7-1-1-1. 아동·청소년 난민 비율	7-1-1-1. 아동·청소년 난민 비율
			7-1-1-2. 탈북 난민 아동수	7-1-1-2. 탈북 난민 아동수
			7-1-1-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 경험률	7-1-1-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 경험률
		7-1-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실태 및 참가율	7-1-2-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 참가율	7-1-2-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 참가율
			7-1-2-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중도탈락률	7-1-2-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중도탈락률
		7-1-3. 이주배경아동·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 참여율	7-1-3-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청소년보호프로그램 참가건수	7-1-3-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청소년보호프로그램 참가건수
			7-1-3-2. 이주배경 청소년의 심리정서 상담건수	7-1-3-2. 이주배경 청소년의 심리정서 상담건수
			7-1-3-3. 이주배경 청소년의 멘토링 참가율	7-1-3-3. 이주배경 청소년의 멘토링 참가율
		7-2. 소년사범아동	7-2-1. 자유박탈 아동·청소년 수용률	7-2-1-1. 보호소년의 수용인원수
	7-2-1-2.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인원수			7-2-1-2.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인원수
	7-2-2. 인권친화적인 환경 조성 비율		7-2-2-1. 법률조력인 배치 인원수	7-2-2-1. 법률조력인 배치 인원수
			7-2-2-2. 소년원의 인권중심 교육체계	7-2-2-2. 소년원의 인권중심 교육체계
	7-2-3. 자유박탈 이외의 대안적 프로그램 참가비율		7-2-3-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청소년 비율	7-2-3-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청소년 비율
			7-2-3-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비율	7-2-3-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비율
		7-2-3-3.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청소년비율	7-2-3-3.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청소년비율	
	7-3. 경제적 착취	7-3-1. 인권 침해적인 청소년근로조건 수준	7-3-1-1. 청소년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	7-3-1-1. 청소년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
			7-3-1-2.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	7-3-1-2.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
		7-3-2. 근로 시 청소년 부당처우 경험률	7-3-2-1.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 비율	7-3-2-1.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 비율
7-3-2-2.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			7-3-2-2.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	
7-3-3. 청소년 근로 시 폭력예방노력정도		7-3-3-1. 청소년근로관련법 준수실태 점검 대상업소수	7-3-3-1. 청소년근로관련법 준수실태 점검 대상업소수	
		7-3-3-2. 청소년고용사업장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률	7-3-3-2. 청소년고용사업장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률	
7-4. 성적 착취	7-4-1. 청소년 성폭력 예방 노력 정도	7-4-1-1.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양성인원수	7-4-1-1.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양성인원수	
		7-4-1-2.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자수	7-4-1-2.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자수	
	7-4-2.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경험률	7-4-2-1.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인구 비율	7-4-2-1.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인구 비율	
		7-4-2-2.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	7-4-2-2.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	
		7-4-2-3. 성적피해 시 도움제공자*	7-4-2-3. 성적피해 시 도움제공자*	
	7-4-3.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처벌 강도	7-4-3-1.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검거 및 조치율	7-4-3-1.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검거 및 조치율	
		7-4-3-2.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형량 변화	7-4-3-2.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형량 변화	
	7-4-4.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서비스 지원 정도	7-4-4-1.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및 보호시설 입소인원	7-4-4-1.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및 보호시설 입소인원	
7-4-4-2. 성폭력 피해 및 성매매 대상 청소년 교육·상담 실시 인원		7-4-4-2. 성폭력 피해 및 성매매 대상 청소년 교육·상담 실시 인원		
7-4-4-3. 재활을 위한 심리·정서치료 서비스 제공 인원		7-4-4-3. 재활을 위한 심리·정서치료 서비스 제공 인원		

2) 조사대상

설문조사는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10,453명의 학생을 조사하였다. 그 중 남학생이 52.2%, 여학생이 47.9%였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28.2%, 중학생이 34.7%, 일반/특목/자율고 학생이 30.4%, 특성화고 학생이 6.8%였으며,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지역 학생이 43.7%, 중소도시지역 학생이 40.9%, 읍면지역 학생이 15.4%였다. 가족유형은 양부모 가정의 학생이 90.2%, 한부모 가정의 학생이 8.3%, 조손가정의 학생이 0.9%였다. 학업성적은 '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32.6%, '중'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42.6%, '하'라고 응답한 학생이 24.7%였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상'으로 인식하는 학생은 51.5%, '중'이라고 인식하는 학생은 35.8%, '하'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12.7%였다.

표 2 조사대상 인구통계학적 특성

		사례수(명)	비율(%)
전체		10,453	100.0
성별	남자	5,448	52.1
	여자	5,005	47.9
학교유형	초등학교	2,935	28.1
	중학교	3,629	34.7
	일반/특목/자율고	3,173	30.4
	특성화고	716	6.8
	대도시	4,568	43.7
지역규모	중소도시	4,275	40.9
	읍면지역	1,610	15.4
	양부모가정	9,428	90.2
가족유형	한부모가정	865	8.3
	조손가정	98	0.9
	기타	61	0.6
	학업성적	상	3,400
중		4,445	42.6
하		2,578	24.7
경제적 수준	상	5,380	51.5
	중	3,744	35.8
	하	1,322	12.7

3. 주요 연구결과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1) 인권일반

① 인권협약 및 기관 인지도

10명 중 6명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나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경우는 10명 중 1.4명. 명칭을 들어본 경험은 지속적으로 증가

‘인권협약 및 기관 인지도’와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대해 알고 있는 청소년은 각각 14.4%, 9.7%, 17.1%로 낮게 나타났다(‘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 아동권리협약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지도는 남학생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지도는 여학생이 더 높았고,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협약과 인권기구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인지도는 ‘14년에 높아졌다가’15년에는 미세하게 하락하였다(‘13년 13.1%, ’14년 15.2%, ’15년 14.4%). 협약에 대해 들어본 경우(‘이름만 들어봤다’와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안다’)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3년 53.2%, ’14년 59.2%, ’15년 61.3%).

② 인권 존중정도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의 인권 존중도 74.2%.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인권을 존중받지 못한다고 응답

가정, 학교, 살고 있는 지역, 대한민국 전체, 사이버공간 등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존중받는 편+매우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값은 가정(94.5%), 살고 있는 지역(89.1%), 학교(88.5%), 사이버공간(79.3%), 대한민국 전체(74.2%) 순으로 나타나 우리사회 전체적인 인권 존중정도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영역에서 여학생이 존중받는다라는 응답률이 높았고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인권이 존중받는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대한민국에서 인권이 존중받는다는 응답은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3년 67.6%, '14년 70.8%, '15년 74.2%).

③ 인권의식 및 태도

‘아동·청소년은 결정능력이 부족하므로 어른들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10명 중 7명이 ‘그렇지 않다’
‘청소년의 사회참여가 필요’하며, ‘학생자치조직이 도움이 된다’ 10명 중 8명.
학교 내 학생자치조직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32.2%가 ‘그렇다’(그런 편 28.0%, 매우 그렇다 4.2%)고 응답하였으며(초등 43.1%, 중학생 30.2%, 특성화고 30.1%, 일반/특목/자율고 25.0%), 여학생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능력이 부족해서 어른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82.8%의 아동·청소년이 ‘그렇다’(그런 편 58.4%, 매우 24.4%)고 응답하였다(일반/특목/자율고 88.7%, 중학생 81.9%, 특성화고 79.5%, 초등 77.9%). 여학생과 학업성적이 상위권일수록 사회참여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학생회 등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은 학교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응답은 80.1%로(중학생 81.7%, 일반/특목/자율고 79.7%, 특성화고 74.1%), 여학생과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학생자치조직에 긍정적 인식을 보였으며 매년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년 65.5%, '14년 76.9%, '15년 80.1%).

표현의 자유와 차별 관련(성별, 가정형편, 민족) 인권의식은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모든 항목에서 여학생과 학업성적이 높은 아동·청소년일수록 인권의식이 높게 나타남.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에 94%의 아동·청소년이 ‘그렇다’(그런 편 45.6%, 매우 48.4%)고 응답하였다(일반/특목/자율고 95.7%, 특성화고 93.7%, 초등 93.3%, 중학생 93%).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에 95.5%가 ‘그렇다’(그런 편 34.6%, 매우 60.9%)고 응답하였으며(일반/특목/자율고 97.1%, 특성화고 94.8%, 중학생 94.4%),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다(다른 3개의 차별 문항에서는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집단의 동의가 가장 많음).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질문에 93.9%가 ‘그렇다’(그런 편 34.5%, 매우 59.4%)고 응답하였다(중학생 94.4%, 일반/특목/자율고 93.8%, 초등 93.7%, 특성화고 92.9%).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다른 민족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에 대해 90.3%가 ‘그렇다’(그런 편 40.3%, 매우 50%)고 응답하였다(중학생 91.6%, 일반/특목/자율고 90.9%, 특성화고 88.5%, 초등 88.3%). 이상 표현의 자유와 차별관련 모든 문항에서 여학생과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인권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④ 인권교육

인권교육 경험률은 65.3%이며 증가 추세,
인권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률은 70.6%이며 전년 대비 미세하게 감소

최근 1년 동안 인권교육을 받은 아동·청소년은 65.3%였으며 여학생인 경우, 그리고 저학년으로 갈수록 인권교육 경험이 많았고(초등 72.7%, 중학생 67.6%, 일반/특목/자율고 57.8%, 특성화고 56.6%),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인권교육 경험이 많게 나타났다. 인권교육 경험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13년 54.4%, ‘14년 64.4%, ‘15년 65.3%).

인권교육을 받은 곳은 학교 정규교과시간 62.8%, 창의적 체험활동 36.5%, 학교밖 인권교육 프로그램(청소년단체, 사회단체 등) 15.6% 등의 응답을 보였으며(복수응답), 인권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률은 70.6%였다(초등 87.5%, 중학생 69.0%, 특성화고 59.5%, 일반/특목/자율고 55.2%). 일반계고등학생의 절반 정도는 인권교육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고등학교 과정의 인권교육 운영현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도움이 된다는 전체 응답률이 전년 대비 미세하게 감소하여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13년 71.1%, ‘14년 71.8%, ‘15년 70.6%).

(2) 일반원칙

① 차별 경험

- 10명 중 2명 정도는 성적, 연령, 외모 및 신체조건, 성별 등의 이유로 차별받음
- 일 년에 1회 이상 차별받은 경험 : 학업성적(24.1%) >연령(21.0%) >외모 및 신체조건(19.6%), 성별(19.5%)
 - 한 달에 1회 이상 차별받은 경험 : 학업성적(9.4%) >외모 및 신체조건(7.8%) >성별(6.3%), 연령(6.3%)

다른 사람을 차별한 경험과 자신이 차별받은 경험 모두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성별, 학업성적, 연령, 가정형편, 지역, 외모 및 신체조건, 종교, 가족유형, 장애, 민족 등 10가지 차별 유형에 대해 최근 1년간 다른 사람을 차별한 경험과 자신이 차별받은 경험을 알아보았다.

다른 사람을 차별한 경험을 살펴보면, 먼저 10명 중 2명 정도는 일 년에 1회 이상 성별(21.5%), 학업성적(20.9%), 연령(20.8%), 외모 및 신체조건(20.3%)을 이유로 다른 사람을 차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1회 이상 차별한 경험은 학업성적 차별(7.6%), 외모 및 신체조건 차별(6.7%), 연령차별(6.6%), 성차별(5.9%) 순으로 높게 나타나 학업성적과 외모 및 신체조건을 이유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이 차별받은 경험을 살펴보면, 먼저 10명 중 2명 정도가 일 년에 1회 이상 학업성적(24.1%), 연령(21.0%), 외모 및 신체조건(19.6%), 성별(19.5%)을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 달에 1회 이상 차별받은 경험은 학업성적(9.4%), 외모 및 신체조건(7.8%), 성별(6.3%), 연령(6.3%) 순으로 나타나 학업성적과 외모 및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차별받은 경험의 경우 여학생인 경우(성별, 성적, 연령, 가정형편, 외모), 교급이 높을수록, 특성화고 등학생의 경우, 그리고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차별받은 경험 많은 경향을 보였다. 다른 사람을 차별한 경험과 자신이 차별받은 경험 모두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1) 의견표명권 및 표현의 자유

① 가정에서의 참여 정도(의사결정 시 부모님 태도)

10명 중 8~9명은 가정에서 의견을 존중받고 있음.

여학생, 양부모가정,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가정에서의 의견존중도가 높음.

의사결정 시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정도는 높아지는 추세

의사결정 시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정도를 알아본 결과, 진로·직업결정(90.6%), 상급학교 진학결정(89.9%), 집안의 중요한 문제결정(84.9%), 공부시간이나 방법결정(84.1%) 등의 순으로 의견을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가정에서의 의견존중도는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여학생과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의견존중도가 높았으며, 중학생의 경우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도가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양부모가정의 아동·청소년인 경우와 학업성적 및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존중받는다라는 응답이 높았다. 의사결정 시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정도는 모든 항목에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② 학교에서의 참여

학생회 자율적 운영 18.8%로 전년대비 감소, 학급회의 운영 61.6%,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제시 18.8%, 교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 66.0%(고등학생의 절반 정도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 교칙 제개정 참여는 늘어나는 추세)

• 학생회의 자율적 운영

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 정도는, ‘교사나 교장의 간섭없이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다’ 18.8%, ‘학생회 임원 후보가 되려면 성적이 어느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25.7%,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장소, 시간 등을 보장한다’ 28.3%, ‘학생회 의견을 교사, 교장이 존중해 준다’ 33.5%로 나타나 학생회의 자율권 보장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잘 모르겠다’ : 각 문항별로 55.1%, 41.1%,

59.8%, 53.2%). 학생회의 간섭없는 자율적 운영은 2014년에 늘어났다가 2015년도에 다시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12년 22.1%, '13년 14.5%, '14년 20.4%, '15년 18.8%).

- 학급회의

학급회의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는 61.6%로 전년도(56.1%)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교급이 낮을수록(초등 79.1%, 중학생 56.7%, 일반/특목/자율고 53.4%, 특성화고 50.9%), 그리고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응답률이 높았다. 학급회의가 운영되는 경우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경우는 82.6%로(초등 85.1%, 일반/특목/자율고 85.0%, 특성화고 79.5%, 중학생 78.3%) 2014년(84.2%)보다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는 응답은 18.8%로 2014년(19.6%)에 비해 약간 감소하였으나 2012년 이후 전반적인 추세는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12년 16.1%, '13년 18.1%, '14년 19.6%, '15년 18.8%). 중학교 19.4%, 일반/특목/자율고 18.9%, 특성화고 15.0%가 학생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69.3%로 높아 학교 내 자치활동에 대해 일반 학생의 인식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 교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

교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 비율은 66.0%였고 교급이 낮을수록 학생의견 반영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초등 86.7%, 중학생 64.1%, 일반/특목/자율고 52.0%, 특성화고 52.1%).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참여한다는 응답이 높았고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참여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③ 사회에서의 참여

2명 중 한 명은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 참여경험은 2.4%, 선거연령을 낮추어야 한다 24.3%, 절반 정도는 현재 만19세 유지해야 한다, 참여권을 보장받고 있다 58.1%,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참여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인식, 일반/특목/자율고 학생의 참여권 보장 수준이 가장 낮음.

청소년 참여의 장애요인 : 시간 부족(35.2%),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31.3%)

-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 및 활동경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등과 같은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51.7%,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모른다’ 35.8%,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는 않았다’ 10.2%, ‘알고 있고 참여경험이 있다’ 2.4%로 나타났다.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는 12.6%(10.2%+2.4%)로 2013년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13년 9.3%, ‘14년 10.6%, ‘15년 12.5%), 참여경험은 2014년도 다소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13년 2.1%, ‘14년 1.8%, ‘15년 2.4%). 인지도와 참여경험 모두 여학생인 경우, 그리고 학업성적이 좋을수록 응답률이 높았다.

- 선거연령에 대한 인식

‘선거연령을 현재(만19세)보다 낮추어야 한다’ 24.3%, ‘현재(만19세)를 유지해야 한다’ 52.4%, ‘만19세보다 높여야 한다’ 7.9%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선거연령 하향화에 동의하였다. 선거연령을 낮추자는 응답률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12년 33.0%, ‘13년 26.5%, ‘14년 25.7%, ‘15년 24.3%).

- 참여권 보장 수준

우리사회가 청소년 관련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해 58.1%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교급이 낮을수록, 그리고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참여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일반/특목/자율고 학생의 40.5%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여 교급 중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전년도와는 비슷한 수준의 응답률을 유지하고 있다(‘13년 51.6%, ‘14년 58.7%, ‘15년 58.1%).

- 참여의 장애

학교나 사회에서 청소년 참여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시간 내기 어렵다’ 35.2%,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31.3%, ‘참여활동에 대한 정보 부족’ 15.8%, ‘참여할 만한 기회나 방법 부족’ 14.0% 등의 응답률을 보였다. 남학생은 ‘시간부족’(39.6%), 여학생은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34.5%)을 많이 꼽았고,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생(40.4%)과 중학생(36.1%)은 '시간부족'을, 일반/특목/자율고 학생(38.2%)과 특성화고 학생(39.2%)은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을 장애 이유로 꼽았다. 2013년과 2014년에는 '사회적 편견'이 1순위였으나, 2015년에는 2위였던 '시간부족'이 1순위로 나타났다.

(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

가정(87.3%), 학교(78.1%), 사회(62.9%),

학교 종교행사에 원하는 학생만 참여하는 경우 46.1%, 부모·형제와 상관없이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는 경우 75.2%

① 사상의 자유 보장정도

가정, 학교, 사회 등의 영역에서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률은 각각 87.3%, 78.1%, 62.9%로 나타나 사회에서의 사상의 자유가 가장 보장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가정과 학교에서의 사상의 자유는 여학생이 보장받는다는 응답이 많았고, 사회에 대해서는 남학생의 응답이 높았다. 가정에서의 자유는 교급이 높을수록 보장정도가 높았고, 학교와 사회에서의 자유는 교급이 높을수록 보장정도가 낮았다. 세 영역 모두에서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 사상의 자유를 보장받는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②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종교재단 학교 중 학교 종교행사에 원하는 학생만 참여하는 경우는 46.1%로 나타나(특성화고 82.0%, 중학교 50.3%, 일반/특목/자율고 37.4%) 절반이 넘는 학교가 종교행사 참여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의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부모·형제와 상관없이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는 경우는 75.2%였고 여학생인 경우, 그리고 교급과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결사 및 집회의 자유

사회문제에 대한 모임이나 인터넷카페 가입 경험 17.0%, 사회문제에 관한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참여경험 6.7%,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참여경험이 많으며 전체적으로 경험률 감소 경향

① 결사집회 관련 경험

지난 1년간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활동 경험으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나 인터넷카페 가입 경험이 있는 경우는 17.0%, 경험이 없는 경우는 83.0%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중학생(18.8%)이 고등학생(특성화고 15.0%, 일반/특목/자율고 15.3%)보다,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경험이 많게 나타났다. 사회문제에 관한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참여경험이 있는 경우는 6.7%였는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중학생(7.4%)이 고등학생(일반/특목/자율고 6.2%, 특성화고 5.1%)보다,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집회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참여 경험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회문제 참여로 인한 피해경험은 '피해경험 없음' 96.4%, '경고 및 훈계' 2.1%, '교내 상담 및 학부모 상담' 0.9%, '선도위원회 개최 징계처분' 0.3% 등으로 나타났다.

(4) 사생활의 보호

용모검사 경험 50.7%, 복장검사 경험 43.6%, 소지품 검사 17.8%. 검사 경험은 줄어들고 있음. 교육비 미납 학생 정보 공개 13.1%,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 공개 26.3%, 개인 시험성적 공개 23.5%. 학생의 사생활을 공개는 줄어들고 있음.

①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

최근 1년간 용모(머리모양·길·아염색 또는 화장)검사, 복장(바지나 치마 길이 등) 검사, 개인 소지품 검사 등을 받은 경험을 알아보았다. 한 번이라도 용모검사를 받은 경험률은 50.7%(일반/특목/자율고 56.2%, 특성화고 53.7%, 중학교 45.3%)였으며, 복장검사 경험률은 43.6%(일반/특목/자율고 45.8%, 특성화고 42.5%, 중학교 41.9%), 소지품검사 경험률은 17.8%(특성화고 39.2%, 중학교 15.9%, 일반/특목/자율고 15.3%)로 나타났다. 용모검사는 대도시일수록, 소지품 검사는 읍면지역일수록 경험이 많았고 복장검사는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경험이 많았다.

용모검사와 복장검사 경험은 줄어들고 있으며(용모검사 : '11년 68.9%, '13년 56.1%, '14년 57.9%, '15년 50.7%, 복장검사 : '11년 62.3%, '13년 52.5%, '14년 54.5%, '15년 43.6%), 소지품 검사는 2014년도 증가했다가 2015년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② 학생 정보보호 정도

교육비 미납 학생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는 13.1%(특성화고 19.1%, 중학교 13.5%, 일반/특목/자율고 11.1%),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는 26.3%(특성화고 40.9%, 초등 29.8%, 일반/특목/자율고 25.7%, 중학교 21.2%), 개인 시험성적을 공개하는 경우는 23.5%(특성화고 41.4%, 일반/특목/자율고 31.6%, 중학교 23.8%, 초등 10.1%)로 나타나 특히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가 미흡한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못하는 비율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교육비 미납 학생 공개 : '12년 30.1% → '15년 13.0%, 징계처분 학생 공개 : '12년 47.1% → '15년 26.3%, 시험성적 공개 : '12년 40.5% → '15년 23.5%).

(5) 정보접근권

학교의 학교규칙 공지 83.0%. 아동·청소년 인권정보를 제공받음 15.1%,
권리침해 시 상담구제기관 정보를 제공받음 25.5%

① 정보제공 정도

학교가 학생에게 학교규칙을 공지하고 있는 경우는 83.0%, 17.1%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교급이 낮을수록 학교가 학교규칙 안내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성화고의 경우(79.5%)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학교규칙 안내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12년 75.0% → '15년 83.0%).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정보제공 정도와 관련하여 '청소년정책 홍보 정보나 자료'를 받은 경우는 22.4%,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아동·청소년의 인권정보'를 받은 경우는 15.1%, '권리침해 시 상담구제기관 정보'를 안내받은 경우는 25.5%로 나타났다.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에 대해 초등학생인 경우, 그리고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 응답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2015년 정보제공 정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3) 폭력 및 학대

(1) 가정 내 폭력 및 학대

① 모욕적인 말·욕설 및 체벌

10명 중 3명(29.8%)은 부모(보호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 경험, 4명 중 1명(24.8%)은 신체적 체벌 경험. 어릴수록 체벌 경험이 많고(초등 30.5%) 체벌 경험은 지속적으로 감소 중

• 모욕적인 말·욕설

최근 1년 부모님이나 보호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경험한 학생은 29.8%로 10명 중 3명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남학생(69.8%), 중학생(66.4%),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정서학대 경험이 많게 나타났다.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 경험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년 38.4%, '13년 34.1%, '14년 30.4%, '15년 29.8%).

• 체벌 경험

최근 1년 부모님이나 보호자로부터 신체적 체벌을 경험한 경우는 24.8%로 4명 중 1명은 체벌받은 경험이 있었다. 1주일에 3회 이상 체벌을 받는 학생은 0.4%였는데 이는 약 40명에 달하는 숫자로 상습적 폭력 우려가 있다. 교급이 낮을수록 체벌 경험이 많았는데 초등학생은 30.5%가 체벌 경험이 있었다. 체벌 경험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11년 39.3%, '13년 30.6%, '14년 25.7%, '15년 24.7%) 초등학생의 경우만 2015년에 전년도 대비 미세하게 늘었다.

② 방임유형 및 정도

밤늦게까지 혼자 집을 본 경험 66.4%, 절반가량의 초등학생이 야간방임 경험(주3회 이상 경험은 5.0%), 한부모가정,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 방임빈도 높음.

최근 1년 동안 방임 경험률을 보면, 돌봐주는 사람 없이 밤늦게까지 혼자 집을 본 경험 66.4%,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불결한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경험 15.4%, 아파도 부모님(보호자)이

내버려 둔 경험 7.4%, 식사를 못해도 부모님(보호자)가 신경쓰지 않는 경험 9.0%, 학교를 결석해도 부모님(보호자)이 신경쓰지 않는 경험 1.7% 등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정,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 방임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 54.1%가 밤늦게까지 혼자 있다고 응답하였고, 주3회 이상 혼자 집을 보는 초등학생이 5.0%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보호체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학교에서의 폭력

① 체벌 경험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 경험 18.4%, 신체적 체벌 18.5%
특성화고등학교, 학업성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체벌 경험이 많고 체벌 경험은 지속적으로 감소 중

•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

최근 1년 선생님께서로부터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들은 경우는 18.4%였으며, 남학생(22.1%), 교급이 높을수록(특성화고 23.9%), 대도시일수록, 그리고 학업성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언어폭력 경험이 많았다. 선생님께서로부터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들은 경험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11년 30.0%, '13년 27.3%, '14년 22.0%, '15년 18.4%).

• 체벌 경험

학교 체벌은 18.5%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26.0%), 특성화고등학생(24.9%), 대도시일수록, 그리고 학업성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경험이 많은 편이었다. 1주일에 3회 이상 체벌 경험률은 0.8%(80여명)로 나타났으며 체벌 경험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11년 38.4%, '13년 29.8%, '14년 23.7%, '15년 18.5%).

② 선후배, 친구들로부터의 폭력피해

선후배나 친구들로부터의 경험한 폭력피해 경험 : 심한 욕설이나 모욕(14.3%), 폭행이나 구타(5.5%), 따돌림(5.2%), 성적 희롱이나 추행(3.2%) 등, 전반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의 폭력피해 경험이 많았고, 폭행이나 구타의 경우 초등학생 경험률이 가장 높음(12.8%).

최근 1년 동안 선후배, 친구들로부터의 경험한 폭력피해 경험을 살펴본 결과 한 번 이상 경험률은 심한 욕설이나 모욕(14.3%), 폭행이나 구타(5.5%), 따돌림(5.2%), 성적 희롱이나 추행(3.2%), 협박(2.3%), 돈이나 물건 갈취(1.8%), 강제적 심부름(1.6%) 등의 순서로 나타나 청소년들 간의 언어폭력이 심각한 것을 볼 수 있고, 20명 중 한 명이 폭행이나 구타 경험이 있다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심한 욕설이나 모욕은 남학생(17.9%), 특성화고(17.1%),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 경험률이 높았다. 2011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고등학생의 경우 미세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특성화고의 경우 2014년 12.8%에서 2015년 17.1%로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컸다.

폭행이나 구타는 남학생(8.1%), 초등학생(12.8%)의 경험이 많았는데 초등학생 1.3%가 1주일에 3회 이상의 상습적 폭행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학교폭력 저연령화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폭행경험은 2013년 이후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13년 7.2%, '14년 5.8%, '15년 5.4%).

따돌림 경험은 여학생(5.6%), 교급(초등 9.2%)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근소하게 피해경험이 많았는데 1주일에 3회 이상의 상습적인 따돌림 피해경험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가장 많게(1.6%) 나타났다. 따돌림 경험은 완만하게 줄어들다가 2015년에 미세하게 증가하였다('13년 6.4%, '14년 5.2%, '15년 5.3%).

성적 희롱이나 추행경험은 남학생(4.4%), 특성화고(5.4%),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 피해경험이 많았고 1주일에 3회 이상 피해경험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가장 많게(1.6%) 나타났다. 2014년 줄어들었던 성희롱 피해경험은 2015년 일반계고를 제외한 전 교급에서 증가하였고 특성화고에서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희롱 피해경험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1)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① 가출 경험

최근 1년간 가출경험 3.5%. 한부모가정,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경험 많음. 부모님과의 문제(불화, 폭행, 간섭 등)(63.5%), 학업부담(12.8%), 친구들과 함께하려고(12.4%)

- 가출 경험

최근 1년 동안 가출경험률은 3.5%로 나타났다. 남학생(4.5%)이 여학생(2.5%)보다 높았고, 교급이 높을수록(일반계고 4.3%, 특성화고 3.9%), 한부모가정인 경우(6.1%),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가출경험이 많았다. 가출 경험률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11년 5.5%, '13년 5.1%, '14년 4.8%, '15년 3.5%).

- 가출한 이유

가출의 주된 이유를 살펴보면, 부모님과의 문제(불화, 폭행, 간섭 등)가 63.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학업부담(12.8%), 친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12.4%), 학교문제(갈등, 폭력 등)(3.6%),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1.4%) 순의 응답률을 보였다.

남학생은 '학업부담', 여학생은 '부모님과의 문제'에 상대적으로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중학생과 특성화고등학생의 경우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 가출했다는 응답이(중 14.3%, 특성화고 17.3%) 높은 것을 볼 수 있으며 '친구들과 함께 하려는' 이유는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② 가출 시 서비스 이용

가출 후 관련 서비스 이용 10명 중 1명, 절반 정도만 서비스 이용 후 만족

가출 관련 기관 서비스는 88.8%가 이용해 본 적이 없었고, 청소년상담기관(5.1%), 청소년쉼터(2.4%), 청소년수련관(센터) 및 청소년전화 1388(각각 1.6%) 순의 응답률을 보였다. 서비스 이용경험이 전년도 대비 5% 정도 늘어났고 특히 청소년상담기관 이용률이 2014년 0.8%에서 5.1%로 크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이용 기관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는 48.1%(만족하는 편 34.2%, 매우 만족 13.9%)로 나타났으며,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25.8%로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이용 만족도는 2014년도 56.1%에서 2015년 48.1%로 줄어들었다.

5) 장애, 기초보전 및 복지

(1) 생존 및 발달

① 안전에 대한 인식

학교급식 안전도 89.6, 살고 있는 지역의 범죄 안전도 64.%, 교통사고 안전도 59.9%,
음식물 안전도 77.0%. 안전하다는 응답률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의 지역사회 안전도는 지속적으로 낮음.

• 학교급식 안전도

학교급식에 대해 안전하다는 의견은 89.6%(매우 26.5%, 그런 편 63.1%)로 높은 편이었다. 교급이 낮을수록(초 94.6%, 중 92.1%, 일반계고 84.3%, 특성화고 80.8%),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안전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학교급식 안전도는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다('14년 89.1%, '15년 89.6%)

• 살고 있는 지역의 안전도(범죄, 교통사고, 먹거리)

지역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아동·청소년은 64.5%였으며, 남학생(72.0%)이, 교급이 낮을수록(초등 75.1%), 읍면지역(67.6%), 양부모가정인 경우(65.2%), 학업성적(70.3%)과 경제적 수준(71.6%)이 높을수록 안전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범죄로부터 안전하다는 응답률은 2013년 이후부터 증가세에 있다.

지역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아동·청소년은 59.9%였으며, 변인별 차이는 범죄 안전도와 유사하게 남학생(64.4%), 교급이 낮을수록(초등 67.9%), 읍면지역(62.8%), 양부모가정인 경우(60.4%), 학업성적(64.2%)과 경제적 수준(65.2%)이 높을수록 안전하다는 응답이 많았고 2013년 이후부터 증가세에 있다. 경제적 수준이 '하'인 아동·청소년의 범죄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는 응답률은 각각 46.2%, 46.9%로 평균 응답률 대비 매우 낮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네에서 파는 음식물의 안전도에 대해 77.0%가 안전하다고 응답하였고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안전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2014년 응답률(72%)에서 5%p 증가하였다.

(2) 신체적, 정신적 건강

① 신체적 건강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식 85.7%,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건강에 부정적.

5명 중 한 명은 운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일반계고등학생과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은

3명 중 한 명꼴로 운동을 하지 않음.

3명 중 한 명은 아침식사를 거르고 있으며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결식률이 높음.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 17분(초등 8시간 39분, 중학생 7시간 23분, 일반계고 6시간 5분,

특성화고 6시간 40분). 고등학생 10명 중 7명 수면부족

• 신체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85.7%(건강한 편 62.3%, 매우 23.4%)이었으며, 남학생(85.8%), 교급이 낮을수록(초등 93.0%, 중학생 87.2%, 일반계고 78.6%, 특성화고 80.3%),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건강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미세하나마 증가하는 추세이다.

• 운동실천율

학교 체육시간 외에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을 일주일에 3회 이상 하는 경우는 31.9%였고, 일주일에 1-2회 27.0%, 한달에 1-2회 20.0%,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21.1%로 월 1회 이상 운동을 하는 경우는 78.9%로 나타났다. 남학생, 교급이 낮을수록,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운동실천율이 높았다. 일반계고등학생(32.3%)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동·청소년(30.8%)은 3명 중 한 명이 운동을 하지 않고 있었다. 운동실천율은 2014년 늘었다가 다시 미세하게 줄어들었다('13년 77.3%, '14년 80.7%, '15년 78.9%).

• 아침식사 결식률

등교 전 아침식사를 하는 비율은 73.0%였으며, 특성화고등학교(54.7%), 한부모가정(60.8%),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하 : 61.0%) 결식률이 높게 나타났고 아침식사 결식률 전체 추이는 미세하게 늘었다가 전년도 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입맛이 없어서’(36.4%), ‘늦잠 자서’(22.0%), ‘학교에 일찍 가야해서’(20.6%) 등의 응답순을 보였다. 초등학생은 ‘입맛이 없어서’, 일반계고등학생은 ‘늦잠’과 ‘학교등교시간’, 조손가정과 경제적 수준이 낮은 아동·청소년은 ‘식사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서’에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 수면시간

아동·청소년의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 17분이었고(초등 8시간 39분, 중학생 7시간 23분, 일반계고 6시간 5분, 특성화고 6시간 40분), 수면시간은 2013년도부터 늘어나는 추세이다(‘13년 7시간 6분, ‘14년 7시간 8분, ‘15년 7시간 17분).

과반수의 아동·청소년(50.1%)이 잠이 부족한 상황이며, 일반계고등학생(69.1%),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63.6%)이 상대적으로 잠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수면부족 이유는 학원/과외(20.9%), 가정학습(17.1%), 야간자율학습(12.8%) 등 학업관련 이유가 과반(50.8%)이었고, 드라마/영화/음악, 채팅/문자메시지 사용 등이 각각 14.7%, 14.6%, 게임은 10.0%였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학원/과외(각각 26.8%, 25.6%), 일반계고등학생은 야간자율학습(26.5%), 특성화고등학생은 채팅/문자 메시지(26.3%)가 주요 수면부족이유였다.

② 정신적 건강

학업문제(학업부담, 성적 등) 스트레스(66.8%)가 가장 컸고, 다음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51%).

학업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큰 경향

행복하다 : 84.3%(초 91.3%, 중 87.5%, 특성화고 78.5%, 일반계고 75.3%)

행복하지 않은 이유 : 학업부담(31.0%), 미래에 대한 불안(23.4%)

10명 중 3명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며 주요 이유는 학업성적(43.6%)과 가족간의 갈등(23.9%)

- 스트레스 인지율

아동·청소년이 인지하는 스트레스 현황을 보면, 학업문제(학업부담, 성적 등)로 인한 스트레스가 66.8%(그런 편 44.0%, 매우 22.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51%), 외모 및 신체조건(25.9%), 또래와의 관계(20.6%), 가정불화(15.7%), 경제적인 어려움(1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 스트레스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13년 69.3%, '14년 67.2%, '15년 66.8%).

학업문제 스트레스는 일반계고등학생(85.1%)과 중학생(71.0%)이, 가정불화, 또래와의 관계, 경제적 어려움, 외모 및 신체조건 모두 특성화고 학생(각각 21.2%, 25.3%, 25.6%, 37.3%)이,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은 일반계고 학생(77.7%)과 특성화고 학생(75.0%), 그리고 중학생(52.1%)이 크게 인지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학업성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여러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다.

• 행복도

현재 행복한지 물어본 결과 '행복하다'는 응답은 84.3%로(행복한 편 58.7%, 매우 25.6%), 전년 대비 긍정적인 응답이 미세하게 증가하였다('13년 81.1%, '14년 83.8%, '15년 84.3%). 여학생(84.6%), 초등학생(91.3%), 학업성적(상 89.6%)과 경제적 수준(상 89.8%)이 높을수록 행복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일반계고등학생(75.3%), 성적이 낮고(74.5%)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75.3%) 아동·청소년의 행복감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학업부담(31.0%), 미래에 대한 불안(23.4%),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어서(14.0%),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8.4%),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7.1%)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부담'으로,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다. 특성화고등학생의 경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어서'(20.4%)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 죽고 싶은 생각과 이유

최근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경험은 27.9%(가끔 25.1%, 자주 2.8%)였으며, 여학생(33.6%), 일반계고등학생(29.7%), 학업성적(35.2%)과 경제적 수준(38.3%)이 낮은 경우 죽고 싶은 생각을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죽고 싶다는 생각은 2013년에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11년 34.3%, '13년 3.9%, '14년 30.0%, '15년 27.9%).

죽고 싶은 이유는 '학교성적'이 43.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가족간의 갈등(23.9%),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9.5%), 경제적 어려움(3.3%) 등의 순이었다. 특성화고등학생과 한부모가정 아동·청소년의 경우 '가족 간의 갈등'이 1순위 이유인 것을 볼 수 있으며, 중학생은 2013년부터 '학교성적' 이유가 증가하는 반면, 고등학생은 '가족갈등' 이유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 고민거리 대화 상대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이야기할 사람에 대해 ‘친구’(40.6)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어머니’(35.2%), ‘없다’(8.8%), ‘형제/자매’(6.0%), ‘아버지’(5.9%), ‘담임선생님’(1.2%) 순의 응답률을 보였다. 초등학생은 ‘어머니’(50.1)라는 응답이 높았고, 중학생, 일반계고등학생, 특성화고등학생은 ‘친구’(각 44.6%, 48.5%, 51.2%)라는 응답이 많았다. 경제적 수준이 ‘하’인 경우 ‘없다’(14.3%)는 응답이 높았고,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와,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친구’와 대화한다는 응답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1) 교육에의 권리

① 학교 부적응

학교포기 생각 : 전체 26.0%, 일반계고 39.9%. 증가추세 중 2015년 감소
학교포기 생각 이유 : 공부하기 싫어서 45.6%, 성적이 좋지 않아서 29.6%
선생님이 학생들을 존중한다 89.1%, 선생님이 학생들을 공정하게 대한다 81.6%
(일반계고등학생은 73.1%), 학업성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부정적

- 학교포기 생각

최근 1년 동안 26.0%의 아동·청소년이 학교포기 생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학교일수록(초등 14.5%, 중학교 22.6%, 일반계고 39.9%, 특성화고 29.3%), 학업성적(상 15.6%, 중 23.9%, 하 43.4%)과 경제적 수준(상 20.3%, 중 29.5%, 하 42.1%)이 낮을수록 학교포기 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포기 생각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2015년도에 미세하게 줄어들었다(‘12년 22.2%, ’13년 23.2%, ’14년 27.7%, ’15년 26.0%).

학교포기를 생각하는 이유는 ‘공부하기 싫어서’(45.6%)로 거의 반수에 달했고 ‘성적이 좋지 않아서’ 29.6% 등 10명 중 7명 정도는 학업관련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문화 및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생활에 대해 ‘친구들이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응답은 90.7%로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생(87.6%)이 중학생(91.8%)과 일반계고등학생(93.0%), 특성화고등학생(88.4%)보다 낮은 응답을 보였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존중한다’는 응답은 89.1%였고, 교급이 낮을수록 긍정적 응답률이 높았다(초등 93.5%, 중학생 90.1%, 일반계고 85.3%, 특성화고 83.0%). ‘선생님이 학생들을 공정하게 대한다’는 응답(81.6%)도 교급이 낮을수록 긍정적이었다(초등 91.7%, 중학생 82.4%, 일반계고 73.1%, 특성화고 73.4%).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는 응답(76.5%)도 마찬가지로 교급이 낮을수록 긍정적 응답이 많았다(초등 84.6%, 중학생 78.8%, 일반계고 68.2%, 특성화고 68.8%). 모든 경우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부정적 응답이 많았다.

(2) 교육의 목표

①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

학교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인성함양, 공동체 의식 형성,
필요한 지식 습득 등에 도움을 준다 : 10명 중 7~8명

학교의 역할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학교는 학생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다’ 76.3%, ‘학교는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준다’ 74.5%, ‘학교는 학생들이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한다’ 80.2%, ‘학교는 학생들의 미래 직업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준다’ 82.5% 등의 응답률을 보였다. 모든 문항에서 교급이 높을수록(고등학교의 경우 일반계고가 특성화고보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부정적인 응답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3)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활동

① 청소년시설·공간 이용 경험

최근 1년간 시설 이용 경험 : 공공도서관 76.6%, 문화예술 공간 66.0%, 체육시설 64.3%, 청소년수련시설 40.6%(10명 중 6명은 청소년시설 미이용). 이용 후 만족도 89.3%

최근 1년간 청소년 관련 시설 이용경험은 공공도서관 76.6%, 청소년수련시설 40.6%, 문화예술 공간 66.0%, 체육시설 64.3%로 나타났다. 상급학교로 갈수록,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이용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 청소년 전용 시설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아동·청소년이 59.4%나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이용하는 실질 이용자는 10.0%로 매우 적었다.

시설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만족도는 89.3%(만족하는 편 74.0%, 매우 15.3%)이었고,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만족도도 낮았다.

② 청소년활동 경험

청소년단체 가입 : 초등학생 26.5%, 중학생 11.6%, 일반계고 11.7%, 특성화고 12.9%
동아리 활동 경험 72.6%. 청소년활동에 대한 지지도는 가정 67.1%, 학교 75.8%

최근 1년간 청소년단체에 가입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은 15.9%(초등 26.5%, 중학생 11.6%, 일반계고 11.4%, 특성화고 12.9%),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하는 경우는 8.2%(초등 16.9%, 중학생 5.0%, 일반계고 4.5%, 특성화고 4.4%)로 나타났다.

취미나 문화활동을 위한 동아리(동호회 포함, 학교 내외 포함) 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는 72.6%이었으며 상급학교일수록 경험이 많았다(초등 71.3%, 중학교 72.3%, 일반계고 73.5%, 특성화고 75.0%). 단체활동과 동아리활동 모두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동아리활동 참여도가 높았다.

청소년활동에 대한 가정과 학교의 지지정도를 보면, 가정(67.1%)과 학교(75.8%) 모두 지지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초등학생에 대한 활동 지지도가 높고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③ 생활시간

하루 여가시간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인 아동·청소년이 30.1%, 1시간 미만인 경우는 22.5%,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2.6%는 하루 여가시간이 2시간 미만.

절반에 가까운 아동·청소년(46.8%)이 정규 수업시간 외 3시간 이상 공부하고 있으며, 공부시간은 계속 늘어나고 있음.

- 평일 여가시간

하루 중 여가시간이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인 경우가 30.1%로 가장 많았고, 1시간 미만인 경우가 22.5%로 나타났다(1시간 미만 : 초등 17.0%, 중학생 14.9%, 일반계고 38.2%, 특성화고 13.9%). 하루에 2시간 이상 여가시간이 있는 경우는 47.4%로 절반 이상이 하루 2시간도 여가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2시간 이상 : 초등 59.5%, 중학생 53.1%, 일반계고 25.7%, 특성화고 64.7%). 전년도 대비 여가시간이 1시간 미만인 응답률이 감소하는 추세로 볼 때, 전체적인 여가시간은 미세하게나마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 하루 평균 학습시간

정규 수업시간을 제외한 하루 공부시간은 2시간 이상~3시간 미만이 20.1%로 가장 많았고, 3시간 이상~4시간 미만은 19.0%,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16.9%, 1시간 미만은 16.4%였다. 3시간 이상 공부하는 경우는 46.8%(초등학생 44.5%, 중학생 44.4%, 일반계고 58.6%, 특성화고 14.2%)로, 절반에 가까운 아동·청소년이 학교 수업시간이 끝나고도 3시간 이상 공부를 하고 있었다. 3시간 이상 공부하는 비율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12년 26.3%, '13년 32.7%, '14년 46.4%, '15년 46.8%).

7) 특별보호조치

(1) 경제적 착취

① 아르바이트 부담처우 경험률

아르바이트 경험 12.2%(중 4.3%, 일반계고 13.7%, 특성화고 45.5%),
부담처우 경험 : 근로계약서 미작성 28.6%, 최저임금 미보장 25.0%, 임금체불이나 과소 지급 17.0%, 초과근무나 다른 일 종사 13.8%, 폭언 등 인격모독 11.8%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경우는 12.2%였으며(중학생 4.3%, 일반계고 13.7%, 특성화고 45.0%), 한부모가정(20.9%)과 조손가정(19.8%) 아동·청소년이 양부모가정(11.2%) 아동·청소년보다 경험률이 많았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상 9.2%, 중 12.4%, 하 19.9%)이 낮을수록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이 나타났다.

부당처우 경험으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28.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최저임금 미보장’(25.0%), ‘임금체불이나 과소 지급’(17.0%), ‘초과근무나 다른 일 종사’(13.8%), ‘폭언 등 인격모독’(11.8%), ‘불결하고 위험한 작업환경’(10.3%), ‘부당해고’(6.9%), ‘성적 피해’(6.2%), ‘구타 및 폭행’(5.5%) 등의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처우 경험은 전년도 대비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2) 성적 착취

① 성적 피해 경험

성적인 피해 경험 3.9%(초등 4.3%), 성적 피해를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은 사람 : 친구 38.8%, 없다 36.3%, 부모님 11.0%, 교사 5.5%

성적인 피해(성적인 놀림, 신체부위에 대한 접촉 등) 경험률은 3.9%로 나타났다(초등 4.3%, 중학생 3.9%, 일반계고 3.6%, 특성화고 3.9%). 학업성적(상 3.8%, 중 3.8%, 하 5.0%)과 경제적 수준(상 3.3%, 중 4.0%, 하 6.3%)이 낮을수록 피해 경험이 많았고, 연도별로는 다소 증가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2015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미세하게 감소하였다(‘11년 3.4%, ‘13년 3.3%, ‘14년 4.0%, ‘15년 3.9%).

성적 피해를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은 사람은 ‘친구’(38.8%)와 ‘없다’(36.3%)는 응답이 높았고, 그 다음으로 ‘부모님’(11.0%)과 ‘교사’(5.5%)라고 응답하였다. 초등학생은 ‘부모님’(25.1%), 중학생은 ‘친구’(48.4%), 일반계고등학생은 ‘없다’(57.3%), 특성화고등학생은 ‘경찰’(23.4%)에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 특성화고등학생 중 ‘부모님’과 ‘교사’ 도움을 받은 경우는 전혀 없었다(0.0%).

참 고 문 헌

- 김경준, 김희진, 이민희, 김윤나 (20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총괄보고서**(연구보고 14-R14).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영지, 김경준, 이민희, 김지혜 (201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Ⅲ** (연구보고 13-R13).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창욱, 박영균, 김진호, 임성택, 전성민 (2006). **국제기준 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 실태 연구 : 청소년인권지표 개발** (연구보고 06-R05).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및 과제

백혜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및 과제⁸⁾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 청소년의 중고등학교 취진학률은 2014년을 기준으로 93~99%에 달하고 있다(국가통계포털, 2015⁹⁾).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청소년은 곧 학생이라는 인식이 쉽게 형성될 수밖에 없으며 학생은 미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아직 배움 중에 있는 청소년으로서 이들이 저지르는 어느 정도의 실수나 잘못은 너그럽게 용서되는 일종의 신분적 혜택을 누리기도 한다.

이와 반대로 학교에 적을 두고 있지 않은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단지 몇몇 자료를 통해 추정이 가능할 뿐인데 연구에 따라 그 추정 규모가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청소년 학령인구인 9~19세의 청소년 중 적게는 4%에서 많게는 10% 정도의 청소년이 정규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예: 오병돈·김기현, 2013; 윤철경·유성렬·김신영·임지연, 2013). 이 비율은 다른 서구사회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비록 그 비율이 높지 않다고는 하지만 이를 인구수로 환산하면 28만 명에서 36만 명 이상으로 그 수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학교에서 쫓겨난 문제아”로 낙인찍혀 사회적 냉대를 받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라는 체제 속에서 부지불식간에 받아왔던 보호와 지원으로부터 제외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상황은 청소년들로부터 향후 성인기로의 성공적인 진입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기회를 박탈하며 더 나아가 사회적 낙오자라는 평가를 받도록 한다. 더욱이 이것이 개인의 일시적인 어려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사회 부적응이나 실업, 이탈 등 각종 사회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8) 이 발표문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므로 무단인용 및 발췌 등을 금하며 본 내용에 대한 인용은 아래와 같이 출처를 표기하여야 가능함.

인용시 출처표기: 백해정, 송미경(20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9)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20 (검색일: 2015.2.25.)

실제적으로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 중에는 단순히 학교를 떠나는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나 교우관계, 경제적 문제 등 주변의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학업 중단 후 이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사회로의 복귀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결국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의 대안 교육 지원이나 학업중단숙려제의 실시, ‘해밀·두드림’ 사업과 같은 위기청소년들의 진로·자립 지원 등은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가장 최근의 일로는 2015년 5월부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을 확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 보니 정책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학교 밖 청소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이 요구하는 지원과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책들 간의 접합점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이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들은 무엇인지, 또한 이러한 정책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체계는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방안을 다각도에서 살펴봄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체계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현장에서 직접 전달하고 있는 지원센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하여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현황 및 그들에 대한 지원정책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청소년들의 욕구와 지원 정책 및 전달체계 간에 나타날 수 있는 간격을 최소화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이 조사는 조사 당시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193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각 기관별로 팀장이나 실무자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파악을 가장 잘하고 있는 한 명이 조사에 응하도록 하였다. 총 193개소에 배포된 설문지 중 거절 및 미회수 등의 이유로 22부가 제외되어 총 171부의 설문지가 분석되었다. 시도별 조사에 참여한 기관의 수는 <표 1>과 같고 지역규모별 참여 기관 수는 <표 2>와 같다.

표 1 17개 시도별 센터 (단위: 개소)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개소	21	11	9	6	4	3	5	1	23	8	11	12	10	14	12	18	3	171

표 2 지역규모별 센터 (단위: 개소,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계
사도센터	5 (2.9)	9 (5.3)	0 (0)	14 (8.2)
사군구센터	49 (28.6)	66 (38.6)	42 (24.6)	157 (91.8)
전체	54 (31.6)	75 (43.9)	42 (24.6)	171 (100)

설문조사 참여자 중 여성의 비율은 80.7%로 남성(19.3%)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연령은 30대가 가장 많고 연령 증가에 따라 그 비율이 감소하였다(<표 3>). 이들의 현 기관에서의 근무 개월은 평균 12.7개월(표준편차 22.8)이었으며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의 총 근무 개월은 평균 42.9개월(표준편차 33.9) 이었다.

표 3 종사자 성별 및 연령 현황 (단위: 명,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인원 (%)	10 (5.8)	49 (28.7)	59 (34.5)	17 (9.9)	44 (25.7)	61 (35.7)	4 (2.3)	38 (22.2)	42 (24.6)	2 (1.2)	7 (4.1)	9 (5.3)	33 (19.3)	138 (80.7)	171 (100.0)

2) 주요 조사 내용

이 조사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영역, 즉 지원센터 이용 청소년의 현황 영역과 센터의 활동 및 제공서비스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지원센터 이용 청소년의 현황 영역에서는 이용 청소년들의 규모 및 성별, 연령, 가정의 경제적 상황, 학업 중단 시기, 위기 상황에 대한 경험 정도, 진로 유형, 발굴 경로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는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센터의 활동 및 제공서비스 영역에서는 기관의 운영기간 및 종사자 수, 위치 및 시설 상태, 평균 예산액 및 예산 집행액,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 및 제공 여부, 센터 내 서비스 제공 정도, 지원서비스별 필요성에 대한 인지 정도, 기관의 위치 및 시설에 대한 평가, 관련 기관과의 연계 정도, 업무 체계화 정도, 홍보방법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이는 센터의 활동 및 제공서비스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하여 현재 센터의 운영상황을 점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상과 같은 설문지의 주요 내용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 설문 영역별 주요 내용

영역	주요 내용
지원센터 이용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 청소년들의 규모 • 이용 청소년들의 인구학적 특성(성별 및 연령, 가정의 경제적 상황) • 이용 청소년들의 학업 중단 시기 • 이용 청소년들의 위기 경험 여부 • 이용 청소년들의 진로 유형 • 이용 청소년들의 발굴 경로
센터의 활동 및 제공 서비스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의 운영기간 및 종사자 수 • 예산 집행 기준 • 다양한 지원제도에 대한 종사자의 인지 및 기관에서의 제공 여부 • 센터 내 서비스 제공 정도 • 지원 서비스별 필요성에 대한 인지 정도 • 기관의 위치 및 시설에 대한 평가 • 관련 기관과의 연계 정도 • 업무 체계화 정도 • 센터 홍보 방법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수집은 우편을 통한 설문조사 후 전화를 통한 보완작업을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전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현황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 및 회수한 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진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보완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조사를 거절한 센터는 부득이하게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조사는 2015년 7월 15일에서 8월 21일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SPSS 20.0을 사용하여 자료에 대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1) 학교 밖 청소년 현황

(1) 기관이용 청소년의 수

최근 일 년 간 설문조사에 응한 기관을 이용한 청소년들은 모두 11,061명이었으며 설문응답 당시에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의 수는 4,99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성별을 보면 남자(54.9%)가 여자(45.1%)에 비해 그 비율이 다소 높았으며 연령별 남녀비율을 보면 만 15~17세(48.1%)와 18세 이상(47.8%)이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표 5 성별 및 연령에 따른 기관이용 청소년의 수 (단위: 명, %)

구분		남자	여자	계
2015.8 현재 이용자 수		2,744 (54.9)	2,251 (45.1)	4,995 (100.0)
최근 일 년간 이용자 수	만 11세 이하	20 (0.3)	9 (0.2)	29 (0.3)
	만 12~14세	245 (3.9)	185 (3.8)	430 (3.9)
	만 15~17세	3,051 (48.8)	2,265 (47.1)	5,316 (48.1)
	만 18세	1,629 (26.0)	1,314 (27.3)	2,943 (26.6)
	만 19세	973 (15.6)	751 (15.6)	1,724 (15.6)
	만 20세 이상	337 (5.4)	282 (5.9)	619 (5.6)
	계	6,255 (100.0)	4,806 (100.0)	11,061 (100.0)

기관 이용청소년 수를 응답기관 수인 171개로 나누어 보면 지난 일 년 간 기관 당 평균 약 65명의 청소년에게, 설문조사 당시에는 기관 당 평균 약 30명의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셈이다(〈표 6〉). 그러나, 표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기관에 따른 이용청소년 수의 편차가 커서 현재 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수가 최소 2명에서 최대 286명인 기관까지, 일 년간 이용자 수는 최소 3명에서 최대 1,271명인 기관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편차는 지역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나기도 하였는데 대도시일수록 학교 밖 청소년의 수가 많고 농산어촌으로 갈수록 그 수가 적었다. 대도시에 학교 밖 청소년이 많은 이유로는 해당 지역 내 청소년 인구가 많아 그만큼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의 수가 많은 탓도 있겠으나 부분적으로는 타 지역에서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대도시로 몰리는 경향에서도 기인하는 것으로 종사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표 6 **성별 및 연령에 따른 기관이용 청소년의 수(평균)** (단위: 명)

구분	응답기관수*			기관별 평균 이용청소년 수(일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2015.8 현재 이용자 수	163	159	165	17	14	30	
최근 일 년간 이용자 수	만 11세 이하	11	5	13	2	2	2
	만 12~14세	60	64	84	4	3	5
	만 15~17세	145	138	154	21	16	35
	만 18세	122	113	133	13	12	22
	만 19세	95	92	111	10	8	16
	만 20세 이상	78	69	91	4	4	7
	계	171	171	171	37	28	65

* 각 연령대별 남자(여자) 청소년이 있다고 응답한 기관 수

(2)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제적 상황

기관 이용 청소년들의 경제적 상황을 지역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살펴보면(〈표 7〉) 파악이 안 되는 경우(39.5%)를 제외하고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경우, 즉 경제수준이 '하'이거나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응답한 경우(41.8%)가 중간 이상(18.7%)보다 훨씬 많았다. 지역별로 나누어 봤을 때,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경우는 대도시(33.6%)보다는 중소도시(45.2%), 농산어촌(59.7%)의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농산어촌의 경우는 10명 중 약 6명 정도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적인 수준에서 경제적 수준이 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4%에도 미치지 못하여 학업을 중단하고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은 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7 기관이용 청소년의 경제적 상황

(단위: 명,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전체
상	234 (5.2)	141 (2.5)	24 (2.5)	399 (3.6)
중	726 (16.3)	750 (13.3)	189 (20.0)	1,665 (15.1)
하	1,039 (23.3)	2,021 (35.9)	470 (49.8)	3,530 (32.0)
기초생활 수급자	462 (10.3)	525 (9.3)	93 (9.9)	1,080 (9.8)
파악 안 됨	2,004 (44.9)	2,192 (38.9)	167 (17.7)	4,363 (39.5)
계	4,465 (100.0)	5,629 (100.0)	943 (100.0)	11,037 (100.0)

(3)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시기

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시기를 살펴보면(〈표 8〉) 고등학교 시기에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의 비율이 77.3%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대부분의 경우 고등학교 때 학교를 그만두기는 하지만 초·중학교 시기에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의 비율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결코 적은 수가 아니고, 고등학교 때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그 이전부터 이와 관련된 문제가 누적되어 온 것일 수 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 및 학업중단 예방책은 초등학교 시기부터 시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8

기관이용 청소년의 학업중단시기

(단위: 명, %)

	구분	남자	여자	계
대도시	초등학교 시기	19 (0.7)	12 (0.6)	31 (0.7)
	중학교 시기	740 (29.1)	544 (28.3)	1,284 (28.8)
	고등학교 시기	1,785 (70.2)	1,365 (71.1)	3,150 (70.5)
	계	2,544 (100.0)	1,921 (100.0)	4,465 (100.0)
중소도시	초등학교 시기	32 (1.0)	34 (1.4)	66 (1.2)
	중학교 시기	582 (18.1)	393 (16.1)	975 (17.2)
	고등학교 시기	2,593 (80.9)	2,019 (82.5)	4,612 (81.6)
	계	3,207 (100.0)	2,446 (100.0)	5,653 (100.0)
농산어촌	초등학교 시기	6 (1.2)	6 (1.4)	12 (1.3)
	중학교 시기	61 (12.1)	84 (19.1)	145 (15.4)
	고등학교 시기	437 (86.7)	349 (79.5)	786 (83.4)
	계	504 (100.0)	439 (100.0)	943 (100.0)
전체	초등학교 시기	57 (0.9)	52 (1.1)	109 (1.0)
	중학교 시기	1,383 (22.1)	1,021 (21.2)	2,404 (21.7)
	고등학교 시기	4,815 (77.0)	3,733 (77.7)	8,548 (77.3)
	계	6,255 (100.0)	4,806 (100.0)	11,061 (100.0)

(4) 학교 밖 청소년들의 위기상황에 대한 경험 정도

기관 이용 청소년들의 위기상황에 대한 경험률은 <표 9>와 같다. 지역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기상황이 미쳐 파악되지 않은 경우(32.9%)를 제외하고 음주 및 흡연, 약물에 대한 경험률이 17.4%로 가장 높았으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경험률(14.6%), 학교폭력 피·가해 경험률(9.1%), 우울·불안·자살시도 경험률(8.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단순히 학업을 중단하는 문제 이외에도 여러 가지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위기경험에 있어서 지역 간 차이를 보이기도 하는데 대도시의 경우 음주 및 흡연, 약물에 대한 경험률과 학교폭력 경험률이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경험의 경우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경험률이 대도시 및 농산어촌 청소년의 경험률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가정폭력 경험률이나 신체적 장애 및 질환자의 비율은 타 지역에 비해 농산어촌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볼 때 지역별 또는 기관별 이용 청소년들의 위기경험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제공해야 할 서비스의 내용이 차별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위기상황에 대한 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청소년들의 배경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들 특성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9 기관이용 청소년의 위기상황 (단위: 명,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전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자	906 (12.6) (16.1)	1,182 (17.7) (30.1)	102 (9.3) (21.0)	2,190 (14.6) (21.8)
우울, 불안, 자살시도	607 (8.5) (10.8)	613 (9.2) (15.6)	59 (5.4) (12.2)	1,279 (8.5) (12.7)
과잉행동, 주의력 결핍 등 문제행동	492 (6.9) (8.7)	326 (4.9) (8.3)	17 (1.5) (3.5)	835 (5.6) (8.3)
인터넷 및 게임중독	467 (6.5) (8.3)	433 (6.5) (11.0)	28 (2.6) (5.8)	928 (6.2) (9.2)
음주, 흡연, 약물 중독	1,767 (24.6) (31.4)	720 (10.8) (18.3)	121 (11.0) (24.9)	2,608 (17.4) (26.0)
학교폭력 파가해자	966 (13.5) (17.2)	318 (4.8) (8.1)	79 (7.2) (16.3)	1,363 (9.1) (13.6)
성범죄 파가해자	90 (1.3) (1.6)	68 (1.0) (1.7)	14 (1.3) (2.9)	172 (1.1) (1.7)
가정폭력 파가해자	311 (4.3) (5.5)	232 (3.5) (5.9)	49 (4.5) (10.1)	592 (4.0) (5.9)
의료지원이 필요한 신체적 장애 및 질환자	23 (0.3) (0.4)	38 (0.6) (1.0)	16 (1.5) (3.3)	77 (0.5) (0.8)
파악 안 됨	1,548 (21.6) -	2,761 (41.3) -	613 (55.8) -	4,922 (32.9) -
계	7,177 (100.0) (100.0)	6,691 (100.0) (100.0)	1,098 (100.0) (100.0)	14,966 (100.0) (100.0)

각 셀의 앞의 () 는 '파악 안 됨' 수를 포함한 비율, 뒤의 () 는 '파악 안 됨' 수를 제외한 비율임.

(5)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유형

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진로유형을 살펴보면(〈표 10〉)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된 경우(46.9%)를 제외하고 학업형(17.5%)으로 분류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혼합형(15.5%), 근로형(10.3%)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형의 경우는 10.3%이나 혼합형 15.5% 중 일부가 근로형에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실제 근로를 원하는 청소년들의 비율은 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청소년들의 비율이 높은 것과 맞물려 생각해 볼 때 학교 밖 청소년들 중 일부는 학업지원 뿐 아니라 경제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청소년들의 유형을 지역별로 나누어 보면 중소도시의 경우 학업형보다는 혼합형이 가장 많은 반면 대도시 및 농산어촌에서는 학업형이 가장 많았다.

청소년들의 유형이 파악되지 않은 경우는 대도시의 경우 60%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청소년들의 유형이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겠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관에서 청소년들의 진로에대한 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종사자들 중에는 사례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기반이 취약하여 개별적인 사례관리 및 통계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서 청소년들의 위기 경험에서도 지적했듯이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개인별 특성과 더불어 기관 이용자 전체의 경향에 대한 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후 통계자료를 수집하거나 각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지역마다 다른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초기 면접지를 비롯하여 청소년들의 사례관리 관련 서류 등에 대해 통일된 양식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표 10 **기관이용 청소년의 유형**

(단위: 명,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전체
학업형	1,139 (15.1) (40.3)	1,284 (18.5) (27.6)	298 (26.8) (37.6)	2,721 (17.5) (32.9)
근로형	726 (9.6) (25.7)	810 (11.7) (17.4)	70 (6.3) (8.8)	1,606 (10.3) (19.4)
혼합형	544 (7.2) (19.3)	1,613 (23.3) (34.7)	257 (23.1) (32.4)	2,414 (15.5) (29.2)
유예형	247 (3.3) (8.7)	772 (11.1) (16.6)	109 (9.8) (13.7)	1,128 (7.2) (13.6)
비행형	167 (2.2) (5.9)	170 (2.5) (3.7)	59 (5.3) (7.4)	396 (2.5) (4.8)
파악 안 됨	4,701 (62.5) -	2,280 (32.9) -	318 (28.6) -	7,299 (46.9) -
계	7,524 (100.0) (100.0)	6,929 (100.0) (100.0)	1,111 (100.0) (100.0)	15,564 (100.0) (100.0)

(6) 학교 밖 청소년들의 발굴경로

기관이용 청소년들의 발굴경로에 대해 지역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보면(〈표 11〉) 파악이 안 된 경우(23%)를 제외하고는 학교를 통한 발굴이 15.5%로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한 발굴(11.7%), 법원이나 법무부 산하기관을 통한 발굴(10.8%)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소 아쉬운 점은 학교 및 교육청을 통한 청소년의 연계가 가장 쉽고 빠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한 연계가 17.5%에 불과하다는 점과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쉼터를 통한 연계가 2.7%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쉼터를 통한 발굴이 적은 것은 부분적으로는 쉼터 내 자체 학업지원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지만 쉼터와의 보다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 및 교육청을 통한 연계와 관련하여 일선 현장의 종사자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부 소속 기관들과의 연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중앙부처 차원에서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간의 연계는 이루어지고 있다 하여도 일선 현장에서 해당지역 학교 및 교육청과 지원센터 간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들의 즉각적인 인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발굴경로에 있어서 지역별 차이를 보면 대도시의 경우는 학교 이외에도 법원이나 법무부 산하기관을 통한 발굴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고 농산어촌의 경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아웃리치를 통한 발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중소도시 및 농산어촌에서는 친구의 소개로 인한 발굴도 적지 않아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입소문에 의한 연계도 매우 중요한 발굴 방법임을 알 수 있다.

표 11 기관이용 청소년의 발굴경로

(단위: 명,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전체
학교(Wee 클래스)를 통해서	636 (13.3)	1,117 (18.0)	96 (10.0)	1,849 (15.5)
교육청(Wee 센터)을 통해서	67 (1.4)	144 (2.3)	25 (2.6)	236 (2.0)
법원, 법무부 산하기관을 통해서	696 (14.5)	536 (8.6)	54 (5.6)	1,286 (10.8)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포함)를 통해서	582 (12.1)	599 (9.7)	219 (22.9)	1,400 (11.7)
청소년 쉼터를 통해서	211 (4.4)	108 (1.7)	0 (0.0)	319 (2.7)
아동복지시설을 통해서	274 (5.7)	294 (4.7)	7 (0.7)	575 (4.8)
청소년시설을 통해서	34 (0.7)	26 (0.4)	25 (2.6)	85 (0.7)
온·오프라인 아웃리치를 통해서	340 (7.1)	292 (4.7)	121 (12.7)	753 (6.3)
스스로 찾아옴	177 (3.7)	422 (6.8)	68 (7.1)	667 (5.6)
가족 소개로	205 (4.3)	162 (2.6)	21 (2.2)	388 (3.2)
친구 소개로	159 (3.3)	592 (9.6)	78 (8.2)	829 (6.9)
기타	336 (7.0)	353 (5.7)	132 (13.8)	821 (6.9)
파악 안 됨	1,083 (22.6)	1,553 (25.1)	110 (11.5)	2,746 (23.0)
계	4,800 (100.0)	6,198 (100.0)	956 (100.0)	11,954 (100.0)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현황

(1) 운영기간

학교 밖 지원센터의 운영기간을 보면(〈표 12〉) 평균 약 5개월로 대부분 최근에 개원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01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후 2015년 이후에 학교 밖 청소년들만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이전에 이미 위기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사회진입지원 프로그램인 두드림 프로그램을, 2009년부터는 학업복귀지원 프로그램인 해밀을 제공해 왔기 때문에 최근에 지정된 센터라 하더라도 그 이전부터 운영되어 오던 기관들도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표 12 기관 운영기간(2015년 9월 현재) (단위: 개월)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표준편차)
대도시	2	8	4.65 (1.63)
중소도시	2	8	5.07 (1.59)
농산어촌	2	8	5.50 (1.77)
전체	2	8	5.05 (1.67)

(2) 종사자 수

각 기관별 종사자 수를 보면(〈표 13〉) 총 446명 중 정규직은 117명으로 26.2%이며 비정규직은 328명(73.5%)으로 정규직의 2.8배에 이른다.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3배에 가깝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종사자들의 고용이 불안정함을 의미한다.

기관 당 종사자 수는 시·도 센터의 경우는 평균 5.1명, 시·군·구 센터의 경우는 평균 2.4명, 전체적으로는 2.6명이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조사 당시를 기준으로 현재 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수가 최소 2명에서 최대 286명인 기관까지, 일 년간 이용자 수는 최소 3명에서 최대 1,271명인 기관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고려하면 한 기관에서 종사자 두 명의 인원으로 약 200여 명의 청소년을 상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 일부 종사자들은 높은 업무 강도와 낮은 임금 등 열악한 처우로 인하여 담당자들의 평균 근무 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하여 사업의 질이 저하되고 있음을 토로하였다. 따라서 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수가 많은 곳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종사자에 대한 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상 이들에 대한 장기간의 개입 및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과중한 업무로 인한 담당자의 잦은 교체는 청소년들에 대한 개입 및 지원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결국 종사자들의 고용불안정 및 업무과다는 업무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이직률을 높임으로써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표 13 기관별 종사자 수

(단위: 명, %)

구분	기관수	정규직	비정규직	총 종사자 수	평균 종사자 수*	
대도시	사도센터	5(9.3)	6(20.6)	23(79.0)	29(100.0)	5.8
	사군구센터	49(90.7)	52(44.5)	64(54.7)	117(100.0)	2.4
	계	54(100.0)	58(39.7)	87(59.6)	146(100.0)	2.7
중소도시	사도센터	9(12.0)	5(11.6)	38(88.1)	43(100.0)	4.8
	사군구센터	66(88.0)	37(22.4)	127(77.0)	165(100.0)	2.5
	계	75(100.0)	42(20.2)	165(79.3)	208(100.0)	2.8
농산어촌	사도센터	-	-	-	-	-
	사군구센터	42(100.0)	17(18.1)	76(80.9)	94(100.0)	2.2
	계	42(100.0)	17(18.1)	76(80.9)	94(100.0)	2.2
전체	사도센터	14(8.2)	11(15.3)	61(84.6)	72(100.0)	5.1
	사군구센터	157(91.8)	106(28.3)	267(71.4)	374(100.0)	2.4
	계	171(100.0)	117(26.2)	328(73.5)	446(100.0)	2.6

* 평균 종사자 수=총 종사자 수/기관 수

(3) 평균 예산액

기관별 일 년의 평균 예산액은 약 9천만 원에 다소 못 미치는 정도이다(표 14). 2015년 사업지침서(여성가족부, 2015)에 따르면 국비 및 지방비를 합하여 시·도 센터의 경우는 약 2억 1,500만 원¹⁰⁾, 시·군·구 센터의 경우는 6,700만 원의 예산을 지급받아 이중 사업비로 시·도 센터의 경우는 35% 이상, 시·군·구 센터의 경우는 27% 이상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기타 예산을 합쳐 시·도 센터와 시·군·구 센터로 나누어 보면 시·도 센터의 경우는 약 2억 5천여 만 원, 시·군·구센터의 경우는 약 7천 4백여 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국고 보조비와 지방비의 비율을 보면 중소도시의 경우 지방비가 39.7%로 다른 지역에 비해 그 비율이 높았으며 농산어촌의

10) 시·도 센터 중 특성화 사업을 운영하는 4개 지역에는 2억 5,800여 만 원이 지급되었다(여성가족부, 2015).

경우는 국고보조비가 69.2%로 다른 지역에 비해 그 비율이 높았다. 이는 정부의 운영지침상 국고보조율을 서울은 50%, 그 외의 지역은 70%의 범위로정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여성가족부, 2015).

표 14

기관별 평균 예산액

(단위: 천원, %)

구분	국고보조비	지방비	기타	계	
대도시	시도센터	148,750 (43.6)	157,042 (46.1)	87,764 (25.7)	340,898 (100.0)
	시군구센터	43,566 (69.1)	22,870 (36.3)	10,790 (17.1)	63,003 (100.0)
	계	53,680 (59.8)	38,117 (42.5)	49,277 (54.9)	89,724 (100.0)
중소도시	시도센터	141,652 (66.9)	64,520 (30.5)	85,313 (40.3)	211,702 (100.0)
	시군구센터	50,908 (59.5)	36,819 (43.1)	7,050 (8.2)	85,495 (100.0)
	계	60,852 (60.5)	39,940 (39.7)	54,008 (53.7)	100,640 (100.0)
농산어촌	시도센터	-	-	-	-
	시군구센터	47,983 (69.2)	22,305 (32.2)	6,876 (9.9)	69,350 (100.0)
	계	47,983 (69.2)	22,305 (32.2)	6,876 (9.9)	69,350 (100.0)
전체	시도센터	144,382 (56.0)	100,106 (38.8)	86,294 (33.5)	257,843 (100.0)
	시군구센터	47,870 (64.4)	28,946 (39.0)	7,898 (10.6)	74,300 (100.0)
	계	55,383 (61.9)	34,953 (39.1)	38,050 (42.5)	89,505 (100.0)

(4) 예산집행액

기관별 예산집행액을 보면(〈표 15〉)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약 60%를, 프로그램 운영비(30.8%)와 직접 지원비(6.6%) 등 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37.4%를 차지하였고 예산 항목 중 관리운영비는 약 8.7%이다. 사업비의 경우 기관 당 약 3천여 만 원 수준이며 기관 당 일 년 간 이용청소년의 수가 평균 65명이라 할 때 일인당 50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관마다 이용청소년의 규모에 대한 편차가 심해 이용청소년의 수가 많은 기관인 경우에는 사업비 예산이 더욱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현장의 실무자들은 사업비의 부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직접적인 개별지원을 충분히 하기가 어렵고 집단지원을 중심으로 사업비가 배정될 수밖에 없음을 호소하였다. 또한 지역 내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중소도시나 농산어촌의 경우 활동을 위한 강사 등의 인건비가 많이 들고 다양한 문화 및 사회 활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위해서는 지역 밖으로 나가야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욱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정도를 감안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예산지원이 좀 더 증액될 필요가 있다.

표 15 기관별 평균 예산집행액

(단위: 천원, %)

구분	인건비	사업비		관리운영비	계	
		프로그램운영비	직접지원비			
대 도 시	시도센터	134,262(39.4)	187,922(55.1)	12,515(3.7)	18,675 (5.5)	340,898(100.0)
	시군구센터	37,070(58.8)	16,365(26.0)	6,103(9.7)	7,213 (11.4)	63,003(100.0)
	계	46,416(51.7)	33,184(37.0)	6,609(7.4)	8,118 (9.0)	89,724(100.0)
중소 도시	시도센터	125,347(59.4)	68,743(32.6)	16,246(7.7)	9,796 (4.6)	211,172(100.0)
	시군구센터	57,000(66.7)	22,804(26.7)	4,702(5.5)	7,008 (8.2)	85,495(100.0)
	계	64,389(65.0)	27,839(28.1)	6,116(6.2)	7,356 (7.4)	99,082(100.0)
농산 어촌	시도센터	-	-	-	-	
	시군구센터	42,764(61.6)	19,412(28.0)	4,405(6.3)	7,719 (11.1)	69,407(100.0)
	계	42,764(61.6)	19,412(28.0)	4,405(6.3)	7,719 (11.1)	69,407(100.0)
전체	시도센터	128,776(49.3)	114,581(43.9)	15,003(5.7)	13,601 (5.2)	261,067(100.0)
	시군구센터	47,128(63.4)	19,940(26.8)	5,093(6.9)	7,282 (9.8)	74,347(100.0)
	계	53,483(60.2)	27,397(30.8)	5,875(6.6)	7,757 (8.7)	88,882(100.0)

(5) 주요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종사자들의 인지도 및 제공(안내) 정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원가능한 주요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해 얼마나 많은 기관종사자들이 인지하고 있고 또 제공(안내)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표 16>과 같다. 여기에 제시된 정책 및 서비스는 각 정부부처에서 제공하는 것들로 이 중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 상담복지 지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청소년쉼터 서비스는 위기청소년 등을 중심대상으로 하는 여성가족부의 주요 정책 및 서비스이다. 이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종사자들의 인지도는 매우 높은 편으로 정책에 따라 83%~96%의 인지율을 보였다. 인지도가 높은 만큼 제공(안내)률도 높아 각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는 기관 중 해당 정책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정책에 따라 62%~87%의 제공(안내)률을 보였다. 이 중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72.7%)과 청소년쉼터(62.3%)에 대한 안내 및 제공은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다소 낮았다.

한편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초중고 졸업학력 검정고시, 특성화 및 대안학교, 숲체험 캠프(숲으로 가는 행복열차)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제공되며 청소년들의 학업지속을 위한 지원제도 및 서비스들이다. 이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종사자들의 인지도 역시 숲체험 캠프(24%)를 제외하고는 매우 높은 편으로 정책에 따라 81%~97%의 인지율을 보였다. 그러나 인지한 이들의 제공(안내)률은 정책

및 서비스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초중고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94.5%로 제공(안내)률이 가장 높았으며 방송통신 중고등학교에 대한 제공(안내)률(60.7%)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방송통신 중고등학교에 대한 제공 및 안내율이 낮은 것은 부분적으로 성인들이 많이 등록하고 주말에 등교가 이루어지는 등 통신학교의 특성이 상당수의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과 맞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되는 취업사관학교,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청년인턴제는 학교 밖 청소년 중 학업보다는 취업으로 진로를 정한 이들에게 적합한 정책 및 서비스이다. 이에 대한 종사자들의 인지도는 정책에 따라 60%~92%의 인지율을 보임으로써 전반적으로 여성가족부나 교육부의 정책 및 서비스 인지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인지율 내 제공(안내)률을 보면 취업성공패키지는 74.4%인데 비해 취업사관학교와 취업청년인턴제는 각각 56.7%와 50%로 그 비율이 떨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현장 종사자들은 취업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경우 기숙형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출석률이 중시되는데 적극성과 성실성이 다소 떨어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성향 상 기숙형 기관에서의 생활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입소를 하게 되더라도 기숙형 기관의 특성 상 지원센터에서 청소년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제도에 대한 참여율이 낮을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였다.

법무부에서는 소년범 및 비행·위기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자립생활관, 창업보육사업, 사회정착지원센터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종사자들의 인지도는 정책에 따라 19%~52%로 그 비율이 높지 않았다. 인지율 내 제공(안내)률도 낮아 정책에 따라 23%~35%의 제공(안내)률을 보였다. 제공(안내)률이 낮은 것은 낮은 인지율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겠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요 지원대상자가 소년범 및 비행 청소년으로 한정되기 때문인 것으로도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 중에는 경찰서 등 법원이나 법무부 산하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오는 소년범 및 비행 청소년들이 10%이상 되는 만큼 이들을 위한 지원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경우에 따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관 종사자들의 인지율은 50.9%, 인지율 내 제공(안내)률은 44.8%이다. 이러한 비율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청소년 관련 업무가 모두 여성가족부로 이전 중이고 청소년 뿐 아니라 가족 대상 상담중심 프로그램 운영으로 프로그램의 성격이 변화된 경우가 많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향후 이처럼 사업의 성격이 변화되거나 혹은 종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관 종사자들은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사업의 변화 여부에 좀 더 민감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모든 관련 부처 및

기관에서는 해당사업에 대한 최신 정보를 종사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무지개청소년센터와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사업 중 일부이지만 지원 대상이 다양한 이주배경 청소년들이다. 이 사업들에 대한 종사자들의 인지도는 각각 47.4%와 50.9%, 인지율 내 제공(안내)률은 각각 13.6%와 11.5%로 낮은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이주 배경 청소년들의 학업 중단율은 전체 청소년들의 중단율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2014년 기준 북한이탈 고등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7.5%로 전체 고등학생 1.6%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5. 5. 12). 또한 2015년 다문화 학생 중 초중고교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은 1.01%로 일반 학생의 학업중단율(2014년 기준 0.83%)에 비해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동아일보, 2015.10.8).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내 이주배경을 지닌 청소년들의 규모는 아직 크지 않은 실정이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중심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향후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에 대한 발굴과 지원은 지원센터의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양한 이주배경 청소년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센터 내에서 수립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지원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숙지와 제공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부의 다양한 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사업에 대한 안내를 하거나 제공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열악한 처우 등으로 인해 종사자들이 잦은 이직 현상을 보인다면 현장에서 관련 정보 및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이에 현장전문가로 거듭나기가 어렵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숙달되고 전문성 있는 인력이 필요하며 이는 곧 종사자들에게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함으로써 업무의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종사자 대상 교육이나 정보제공에 있어서는 좀 더 내실 있고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 한 번의 교육으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더불어 관련 정보에 대한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은 그 예가 될 수 있다. 또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함으로써 종사자들이 최신 정보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 16

부처별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인지 및 제공(안내) 여부

(단위: 명, %)

구분	대도시(N=54)		중소도시(N=75)		농산어촌(N=42)		전체(N=171)	
	안다	제공 한다	안다	제공 한다	안다	제공 한다	안다	제공 한다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위기 청소년 대상)	45 (83.3)	34 (75.6)	64 (85.3)	47 (73.4)	34 (81.0)	23 (67.6)	143 (83.6)	104 (72.7)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 대상)	50 (92.6)	40 (80.0)	73 (97.3)	63 (86.3)	41 (97.6)	34 (82.9)	164 (95.9)	137 (83.5)
청소년 상담복지 지원 (위기 청소년 대상)	49 (90.7)	42 (85.7)	69 (92.0)	60 (87.0)	41 (97.6)	36 (87.8)	159 (93.0)	138 (86.8)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위험군 위기 청소년 대상)	49 (90.7)	38 (77.6)	73 (97.3)	65 (89.0)	39 (92.9)	28 (71.8)	161 (94.2)	131 (81.4)
청소년 쉼터 (가출 청소년 대상)	49 (90.7)	32 (65.3)	72 (96.0)	47 (65.3)	38 (90.5)	20 (52.6)	159 (93.0)	99 (62.3)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학교 밖 청소년 대상)	45 (83.3)	23 (51.1)	64 (85.3)	44 (68.8)	31 (73.8)	18 (58.1)	140 (81.9)	85 (60.7)
초중고 졸업학력 검정고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51 (94.4)	47 (92.2)	73 (97.3)	70 (95.9)	41 (97.6)	39 (95.1)	165 (96.5)	156 (94.5)
특성화 및 대안학교 (학교 밖 청소년 대상)	48 (88.9)	36 (75.0)	68 (90.7)	53 (77.9)	38 (90.5)	23 (60.5)	154 (90.1)	112 (72.7)
숲체험 캠프: 숲으로 가는 행복열차 (위기 청소년 대상)	10 (18.5)	3 (30.0)	21 (28.0)	6 (28.6)	10 (23.8)	3 (30.0)	41 (24.0)	12 (29.3)
취업사관학교 (학교 밖 청소년 대상)	31 (57.4)	16 (51.6)	52 (69.3)	32 (61.5)	21 (50.0)	11 (52.4)	104 (60.8)	59 (56.7)
취업성공패키지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 대상)	50 (92.6)	40 (80.0)	71 (94.7)	56 (78.9)	35 (83.3)	20 (57.1)	156 (91.2)	116 (74.4)
취업청년인턴제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 대상)	38 (70.4)	24 (63.2)	56 (74.7)	27 (48.2)	30 (71.4)	11 (36.7)	124 (72.5)	62 (50.0)
자립생활관 (소년범 및 비행/위기, 시설퇴소 청소년)	35 (64.8)	13 (37.1)	34 (45.3)	14 (41.2)	20 (47.6)	4 (20.0)	89 (52.0)	31 (34.8)
창업보육사업 (소년범 및 비행/위기 청소년 대상)	10 (18.5)	5 (50.0)	16 (21.3)	3 (18.8)	8 (19.0)	3 (37.5)	34 (19.9)	11 (32.4)
사회정착지원센터 (소년범 및 비행/위기 청소년 대상)	10 (18.5)	3 (30.0)	20 (26.7)	4 (20.0)	12 (28.6)	3 (25.0)	42 (24.6)	10 (23.8)
청소년자활지원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	30 (55.6)	16 (53.3)	33 (44.0)	15 (45.5)	24 (57.1)	8 (33.3)	87 (50.9)	39 (44.8)
무지개청소년센터 (다문화 청소년 지원)	30 (55.6)	4 (13.3)	31 (41.3)	6 (19.4)	20 (47.6)	1 (5.0)	81 (47.4)	11 (13.6)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탈북 청소년 지원)	30 (55.6)	3 (10.0)	34 (45.3)	6 (17.6)	23 (54.8)	1 (4.3)	87 (50.9)	10 (11.5)

(6) 지원 서비스의 제공 정도

기관 내에서 지난 일 년 동안 청소년들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면 <표 17>과 같다.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상담 및 정서지원 서비스의 경우, 이를 제공하는 기관이 모두 158개소(92.4%), 전체 이용자 수는 6,295명으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임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적성검사나 성격검사 등 각종 검사실시 서비스(136개 개소(79.5%) 제공, 4,645명 이용), 교육지원(161개 개소(94.2%) 제공, 3,498명 이용), 생활 및 지원정책 관련 정보 제공(146개 기관(85.4%) 개소, 3,009명 이용) 순으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였다. 가장 적게 이용하는 서비스는 법률지원 서비스로 82개 기관(48%)이 제공하고 229명이 이용하였다. 한편 학업중단 숙려상담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총 137개 기관(80.1%)이나 이용자수는 총 1,703명으로 지원 기관 수에 비해 이용자 수가 많지 않았다. 지역별 서비스 제공기관 수 및 이용자 수를 보면 대도시 및 중소도시는 전체 순위가 전반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단 농산어촌의 경우는 대도시 및 중소도시와 달리 직업 및 취업지원의 순위가 세 번째로 높았던 반면 타 지역에서 4순위 안에 드는 생활 및 지원정책 관련 정보제공 서비스는 6순위로 밀려났다. 이러한 지역 차이는 지역의 규모에 따라 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특성이 다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중점적으로 제공해야 할 서비스도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17 최근 일 년 간 제공한 서비스

(단위: 명, %)

구분	대도시(N=54)		중소도시(N=75)		농산어촌(N=42)		전체(N=171)	
	제공 한다	이용자 수	제공 한다	이용자 수	제공 한다	이용자 수	제공 한다	이용자 수
학업중단 숙려상담	40 (74.1)	504	61 (81.3)	847	36 (85.7)	118	137 (80.1)	1,703
생활 및 지원정책 관련정보 제공 (복학절차, 취업 정보 등)	44 (81.5)	664	66 (88.0)	1,854	36 (85.7)	243	146 (85.4)	3,009
교육지원 (복교, 대안학교 진학, 검정고시 지원)	50 (92.6)	889	71 (94.7)	1,821	40 (95.2)	516	161 (94.2)	3,498
직업 및 취업지원 (직업 훈련, 진로교육활동, 취업 지원 등)	45 (83.3)	494	67 (89.3)	1,547	35 (83.3)	549	147 (86.0)	2,839
경제적 지원 (자립정착금, 급식비, 학원비, 주거비 등)	36 (66.7)	647	49 (65.3)	565	24 (57.1)	110	109 (63.7)	1,504
각종 검사 (성격검사, 적성검사 등)	41 (75.9)	1,716	63 (84.0)	2,076	32 (76.2)	622	136 (79.5)	4,645
상담 및 정서지원 (멘토링 포함)	49 (90.7)	1,991	70 (93.3)	2,809	39 (92.9)	1,228	158 (92.4)	6,295
의료·건강지원 (건강진단 포함)	37 (68.5)	131	46 (61.3)	272	29 (69.0)	50	112 (65.5)	640
법률지원	30 (55.6)	12	29 (38.7)	76	23 (54.8)	7	82 (48.0)	229
여가 및 문화활동지원	42 (77.8)	660	57 (76.0)	1,452	33 (78.6)	358	132 (77.2)	2,692
가족 및 부모교육지원	30 (55.6)	364	40 (53.3)	361	27 (64.3)	149	97 (56.7)	1,038
기타	6 (11.1)	93	5 (6.7)	16	3 (7.1)	20	14 (8.2)	151

(7)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종사자들의 인식 정도

지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그 필요성에 대한 종사자들의 인식정도는 <표 18>에 제시되어 있다. 대부분의 종사자들은 제시된 지원들이 모두 필요한 지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간혹 불필요한 지원이라는 의견도 소수 있었으나 매우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하나도 없었다. 전체적으로 종사자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는 역시 학업지원(3.91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취업지원(3.89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공간(3.86점), 심리 상담 및 정서지원(3.84점)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 서비스에 대한 종사자들의 의견을 지역별로 나누어 보면 미미한 점수 차에 의해 순위가 다소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는 하였으나 모든 지역에서 학업지원, 취업지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공간, 심리 상담 및 정서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다른 지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종사자들은 건강관련지원에서 건강 검진 이외에 건강에 대한 교육이나 일반진료 및 질병치료 등에 대해 현실적인 수준에서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나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 둔 문제 이전에 가정이나 경제적 형편, 사회적 관계 형성과 생활태도 및 동기 등에서 복합적인 문제를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장기적인 접근을 통해 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냄으로써 성인기에 이르렀을 때 자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표 18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전체	평균(표준편차)
심리상담 및 정서지원	대도시		13(24.5)	40(75.5)	53(100.0)	3.75(.434)
	중소도시		11(14.7)	64(85.3)	75(100.0)	3.85(.356)
	농산어촌		4(9.5)	38(90.5)	42(100.0)	3.90(.297)
	전체		28(16.5)	142(83.5)	170(100.0)	3.84(.372)
각종 검사 지원	대도시	2(3.8)	31(58.5)	20(37.7)	53(100.0)	3.34(.553)
	중소도시	1(1.3)	33(44.0)	41(54.7)	75(100.0)	3.53(.528)
	농산어촌	1(2.4)	15(36.6)	25(61.0)	41(100.0)	3.59(.547)
	전체	4(2.4)	79(46.7)	86(50.9)	169(100.0)	3.49(.547)
학업지원	대도시		4(7.5)	49(92.5)	53(100.0)	3.92(.267)
	중소도시		7(9.3)	68(90.7)	75(100.0)	3.91(.293)
	농산어촌		5(11.9)	37(88.1)	42(100.0)	3.88(.328)
	전체		16(9.4)	154(90.6)	170(100.0)	3.91(.293)
법률지원	대도시	3(5.7)	37(69.8)	13(24.5)	53(100.0)	3.19(.521)
	중소도시	2(2.7)	46(61.3)	27(36.0)	75(100.0)	3.33(.528)
	농산어촌		26(63.4)	15(36.6)	41(100.0)	3.37(.488)
	전체	5(3.0)	109(64.5)	55(32.5)	169(100.0)	3.30(.519)
의료·건강 지원	대도시	1(1.9)	22(41.5)	30(56.6)	53(100.0)	3.55(.539)
	중소도시	2(2.7)	32(42.7)	41(54.7)	75(100.0)	3.52(.554)
	농산어촌		19(45.2)	23(54.8)	42(100.0)	3.55(.504)
	전체	3(1.8)	73(42.9)	94(55.3)	170(100.0)	3.54(.535)

구분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전체	평균(표준편차)
경제적 지원	대도시	1(1.9)	19(35.8)	33(62.3)	53(100.0)	3.60(.531)
	중소도시	3(4.0)	22(29.3)	50(66.7)	75(100.0)	3.63(.564)
	농산어촌		16(38.1)	26(61.9)	42(100.0)	3.62(.492)
	전체	4(2.4)	57(33.5)	109(64.1)	170(100.0)	3.62(.534)
취업지원	대도시		5(9.4)	48(90.6)	53(100.0)	3.91(.295)
	중소도시		8(10.7)	67(89.3)	75(100.0)	3.89(.311)
	농산어촌		6(14.3)	36(85.7)	42(100.0)	3.86(.354)
	전체		19(11.2)	151(88.8)	170(100.0)	3.89(.316)
가족 및 부모교육 지원	대도시		26(49.1)	27(50.9)	53(100.0)	3.51(.505)
	중소도시		38(50.7)	37(49.3)	75(100.0)	3.49(.503)
	농산어촌	3(7.1)	18(42.9)	21(50.0)	42(100.0)	3.43(.630)
	전체	3(1.8)	82(48.2)	85(50.0)	170(100.0)	3.48(.535)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대도시	3(5.7)	24(45.3)	26(49.1)	53(100.0)	3.43(.605)
	중소도시	3(4.1)	28(37.8)	43(58.1)	74(100.0)	3.54(.578)
	농산어촌	1(2.4)	18(42.9)	23(54.8)	42(100.0)	3.52(.552)
	전체	7(4.1)	70(41.4)	92(54.4)	169(100.0)	3.50(.579)
생활 및 정책 관련 정보 제공	대도시	1(1.9)	28(52.8)	24(45.3)	53(100.0)	3.43(.537)
	중소도시		42(56.0)	33(44.0)	75(100.0)	3.44(.500)
	농산어촌	1(2.4)	20(47.6)	21(50.0)	42(100.0)	3.48(.552)
	전체	2(1.2)	90(52.9)	78(45.9)	170(100.0)	3.45(.522)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공간	대도시	1(2.0)	7(13.7)	43(84.3)	51(100.0)	3.82(.434)
	중소도시		9(12.2)	65(87.8)	74(100.0)	3.88(.329)
	농산어촌		5(11.9)	37(88.1)	42(100.0)	3.88(.328)
	전체	1(0.6)	21(12.6)	145(86.8)	167(100.0)	3.86(.363)
대학진학 지원	대도시	5(9.6)	27(51.9)	20(38.5)	52(100.0)	3.29(.637)
	중소도시	3(4.0)	38(50.7)	34(45.3)	75(100.0)	3.41(.572)
	농산어촌	1(2.5)	20(50.0)	19(47.5)	40(100.0)	3.45(.552)
	전체	9(5.4)	85(50.9)	73(43.7)	167(100.0)	3.38(.588)
기타	대도시		2(50.0)	2(50.0)	4(100.0)	3.50(.577)
	중소도시	1(9.1)	2(18.2)	8(72.7)	11(100.0)	3.64(.674)
	농산어촌		1(25.0)	3(75.0)	4(100.0)	3.75(.500)
	전체	1(5.3)	5(26.3)	13(68.4)	19(100.0)	3.63(.597)

(8) 기관의 위치 및 시설에 대한 종사자들의 평가

기관의 위치 및 시설에 대한 종사자들의 평가를 보면(〈표 19〉), 전반적으로 접근성에 대한 평가는 긍정에 좀 더 가까운 반면 시설 및 공간의 충분성이나 기자재 및 도구의 충분성에 대한 평가는 부정에 좀 더 가깝게 나타났다. 우선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보면 대도시의 경우는 10명 중 8명 이상의 종사자가 센터의 접근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즉 청소년들이 찾아오기 쉬운 곳에 위치해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중소도시 및 농산어촌에서는 대도시에 비해 긍정적인 응답이 감소하였는데 중소도시의 경우는 40%, 농산어촌의 경우는 38.1%가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특히 중소도시의 8%, 농산어촌의 9.5%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일부 기관의 경우 접근성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군 단위 기관의 종사자들이 접근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군 단위 기관의 경우 인구밀도가 낮고 교통의 편리성이 떨어지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보다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기관을 재배치하거나 교통수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활동을 위한 기관 내 시설이나 공간이 충분한가에 대한 질문에서 종사자들은 부정적으로 응답한 경우(전혀 아니다 14.6%, 아닌 편이다 40.9%)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그런 편이다 36.3%, 매우 그렇다 8.2%)보다 많았다. 4점 척도(전혀 아니다(1점) - 매우 그렇다(4점))를 기 준으로 이 항목의 점수 평균을 내 본 결과 2.38(표준편차 .834)점으로 부정적인 경향에 가깝게 나타났다. 이러한 부정적 응답 경향은 중소도시(2.31점)가 대도시(2.46점)나 농산어촌(2.40점)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앞서 서술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전용공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고려해 볼 때 기관 내 공간확보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기관의 급격한 양적 확대로 인해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기존에 있던 시설 내 일부분에 공간을 확보하여 개소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다 보니 공간의 부족을 언급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중앙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각 기관에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적절한 수준 이상의 공간 확보책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이 활동시 이용할 수 있는 기자재나 도구가 충분한가에 대한 질문에서도 종사자들의 전체적인 응답은 부정적으로 응답한 경우(전혀 아니다 12.3%, 아닌 편이다 41.5%)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그런 편이다 39.8%, 매우 그렇다 6.4%)보다 많았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응답경향은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대도시(2.59점)보다는 중소도시(2.36점)에서 더 높았으며 농산어촌(2.24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9

기관의 위치 및 시설 수준

(단위: 명, %)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N	평균(표준편차)
시설에 대한 접근성	대도시	3(5.6)	7(13.0)	26(48.1)	18(33.3)	54(100.0)	3.09(.830)
	중소도시	6(8.0)	24(32.0)	29(38.7)	16(21.3)	75(100.0)	2.73(.890)
	농산어촌	4(9.5)	12(28.6)	18(42.9)	8(19.0)	42(100.0)	2.71(.891)
	전체	13(7.6)	43(25.1)	73(42.7)	42(24.6)	171(100.0)	2.84(.884)
충분한 시설 및 공간	대도시	5(9.3)	23(42.6)	22(40.7)	4(7.4)	54(100.0)	2.46(.770)
	중소도시	15(20.0)	29(38.7)	24(32.0)	7(9.3)	75(100.0)	2.31(.900)
	농산어촌	5(11.9)	18(42.9)	16(38.1)	3(7.1)	42(100.0)	2.40(.798)
	전체	25(14.6)	70(40.9)	62(36.3)	14(8.2)	171(100.0)	2.38(.834)
충분한 기자재 및 도구	대도시	3(5.6)	19(35.2)	29(53.7)	3(5.6)	54(100.0)	2.59(.687)
	중소도시	12(16.0)	30(40.0)	27(36.0)	6(8.0)	75(100.0)	2.36(.849)
	농산어촌	6(14.3)	22(52.4)	12(28.6)	2(4.8)	42(100.0)	2.24(.759)
	전체	21(12.3)	71(41.5)	68(39.8)	11(6.4)	171(100.0)	2.40(.786)

(9) 지원단계에서의 기관 간 연계상황

청소년들이 꿈드림 센터를 이용하는 단계에서 타 기관과의 연계정도를 3점 척도(부족하다(1점) - 충분하다(3점))로 하여 그 평균점수를 살펴본 결과(〈표 20〉), 연계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2.61점), 경찰서(2.27점), 시·군·구청(2.21점)이었으며 그 외 기관과의 연계는 평균점이 1.51점에서 1.92점 사이에 분포하여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쉼터는, 물론 지역에 따라 연계가 잘 되는 곳도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많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발굴단계에서 뿐 아니라 지원단계에서도 연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청소년 발굴경로에서도 언급했듯이 지원센터와 쉼터 간 역할이 중복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쉼터와 지원센터 간 역할중복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20

지원단계에서의 기관 간 연계 상황

(단위: 명, %)

구분		부족	보통	충분	N	평균(표준편차)
학교 (Wee class)	대도시	17(33.3)	25(49.0)	9(17.6)	51(100.0)	1.84(.703)
	중소도시	14(18.9)	50(67.6)	10(13.5)	74(100.0)	1.95(.571)
	농산어촌	15(35.7)	17(40.5)	10(23.8)	42(100.0)	1.88(.772)
	전체	46(27.5)	92(55.1)	29(17.4)	167(100.0)	1.90(.664)
교육청 (Wee 센터)	대도시	21(41.2)	27(52.9)	3(5.9)	51(100.0)	1.65(.594)
	중소도시	30(40.5)	33(44.6)	11(14.9)	74(100.0)	1.74(.703)
	농산어촌	18(42.9)	18(42.9)	6(14.3)	42(100.0)	1.71(.708)
	전체	69(41.3)	78(46.7)	20(12.0)	167(100.0)	1.71(.670)
법원, 법무부 산하기관 (보호관찰소 등)	대도시	19(37.3)	17(33.3)	15(29.4)	51(100.0)	1.92(.821)
	중소도시	24(32.9)	26(35.6)	23(31.5)	73(100.0)	1.99(.808)
	농산어촌	16(38.1)	19(45.2)	7(16.7)	42(100.0)	1.79(.717)
	전체	59(35.5)	62(37.3)	45(27.1)	166(100.0)	1.92(.789)
청소년상담복지 센터 (1388 포함)	대도시	5(9.8)	17(33.3)	29(56.9)	51(100.0)	2.47(.674)
	중소도시	2(2.7)	20(26.7)	53(70.7)	75(100.0)	2.68(.524)
	농산어촌	4(9.5)	6(14.3)	32(76.2)	42(100.0)	2.67(.650)
	전체	11(6.5)	43(25.6)	114(67.9)	168(100.0)	2.61(.609)
청소년 쉼터	대도시	25(50.0)	15(30.0)	10(20.0)	50(100.0)	1.70(.789)
	중소도시	38(52.1)	24(32.9)	11(15.1)	73(100.0)	1.63(.736)
	농산어촌	32(76.2)	5(11.9)	5(11.9)	42(100.0)	1.36(.692)
	전체	95(57.6)	44(26.7)	26(15.8)	165(100.0)	1.58(.750)
아동복지시설 (그룹홈, 양육시설 등)	대도시	26(51.0)	20(39.2)	5(9.8)	51(100.0)	1.59(.669)
	중소도시	45(60.8)	19(25.7)	10(13.5)	74(100.0)	1.53(.726)
	농산어촌	27(64.3)	13(31.0)	2(4.8)	42(100.0)	1.40(.587)
	전체	98(58.7)	52(31.1)	17(10.2)	167(100.0)	1.51(.675)
청소년시설 (문화의 집, 수련관 등)	대도시	19(37.3)	15(29.4)	17(33.3)	51(100.0)	1.96(.848)
	중소도시	29(39.2)	27(36.5)	18(24.3)	74(100.0)	1.85(.788)
	농산어촌	12(28.6)	15(35.7)	15(35.7)	42(100.0)	2.07(.808)
	전체	60(35.9)	57(34.1)	50(29.9)	167(100.0)	1.94(.812)

구분		부족	보통	충분	N	평균(표준편차)
경찰서 (파출소 등)	대도시	11(21.6)	18(35.3)	22(43.1)	51(100.0)	2.22(.783)
	중소도시	9(12.2)	37(50.0)	28(37.8)	74(100.0)	2.26(.663)
	농산어촌	6(14.3)	15(35.7)	21(50.0)	42(100.0)	2.36(.727)
	전체	26(15.6)	70(41.9)	71(42.5)	167(100.0)	2.27(.715)
의료기관 (병원 보건소 등)	대도시	25(50.0)	19(38.0)	6(12.0)	50(100.0)	1.62(.697)
	중소도시	40(54.1)	26(35.1)	8(10.8)	74(100.0)	1.57(.684)
	농산어촌	20(47.6)	19(45.2)	3(7.1)	42(100.0)	1.60(.627)
	전체	85(51.2)	64(38.6)	17(10.2)	166(100.0)	1.59(.670)
시·군·구청	대도시	13(25.5)	22(43.1)	16(31.4)	51(100.0)	2.06(.759)
	중소도시	13(17.6)	36(48.6)	25(33.8)	74(100.0)	2.16(.703)
	농산어촌	4(9.5)	14(33.3)	24(57.1)	42(100.0)	2.48(.671)
	전체	30(18.0)	72(43.1)	65(38.9)	167(100.0)	2.21(.727)
복지기관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 터 등)	대도시	20(39.2)	23(45.1)	8(15.7)	51(100.0)	1.76(.710)
	중소도시	24(32.4)	35(47.3)	15(20.3)	74(100.0)	1.88(.721)
	농산어촌	15(35.7)	18(42.9)	9(21.4)	42(100.0)	1.86(.751)
	전체	59(35.3)	76(45.5)	32(19.2)	167(100.0)	1.84(.722)

또한 학교 및 교육청과의 긴밀한 연계는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할 만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장 종사자들이 인식하는 연계정도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청소년 발굴단계에서 학교나 교육청을 통하는 경우가 18%가 채 되지 않는다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관련기관의 연계와 관련하여 현장 종사자들은 기관 간 연계가 담당자들의 인간관계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밖 지원센터가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담당자 개인의 인간관계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스템 상의 연계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관 간 연계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하여 서로 동일한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적경쟁을 하는 것이나 우리의 치부를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지원대상자와 서비스가 중복되는 경우는 각 기관 간 역할을 좀 더 명확히 분담함으로써 공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10) 업무체계화 정도

기관 내 업무체계화 정도와 관련하여 4점 척도(전혀 아니다(1점) - 매우 그렇다(4점))를 바탕으로 산출한 각 항목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표 21〉), 지역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중앙값(2.5점)를 넘어 체계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았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사례관리 항목으로 응답자의 95%에 가까운 이들이 이용 청소년들에 대한 사례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거나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이는 앞서 이용청소년들의 경제적 상황, 위기경험, 유형 등 개인적 특성에 대한 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결과와 다소 상반되는 것이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이용 청소년들에 대한 사례관리 차원에서 개인별 파악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기관운영 초기단계에서 행정의 전산화 시스템이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문제로 전체적인 통계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사례관리 및 기관이용 청소년들의 특성파악 등이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체 사례에 대한 통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행정의 전산화시스템이 조속히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한편 지역이나 항목에 따라 업무체계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이들이 적지 않은 경우도 보였다. 예를 들어 지역 내 기관과 도움을 주고받을 만한 기관이 충분한지, 위기상황에 놓인 청소년 및 가족을 의뢰할 기관이 있는지에 대한 항목에서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각각 83.3%와 87.1%로 나타났으나 중소도시의 경우는 각각 76%와 73.3%, 농산어촌의 경우는 각각 76.2%와 76.2%로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다시 말해 지역 내 도움을 주고받거나 필요시 의뢰를 할 만한 기관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대도시의 경우에는 10%대로 낮았으나 중소도시 및 농산어촌의 경우는 20%대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소도시 및 농산어촌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할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빈약함을 시사한다. 또한 농산어촌의 경우 대상자를 직접 발굴하는 경우도 47.6%로 적지 않았는데 이 역시 부분적으로는 연계기관의 부족에 따른 현상으로 파악된다.

표 21 업무 체계화 정도

(단위: 명, %)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N	평균(표준편차)	
지역 내 연계 체계 구축 및 조정 담당 기구가 잘 마련되어 있다.	대도시	2(3.7)	12(22.2)	34(63.0)	6(11.1)	54(100.0)	2.81(.675)
	중소도시	1(1.4)	20(27.4)	46(63.0)	6(8.2)	73(100.0)	2.78(.607)
	농산어촌	0(0.0)	12(29.3)	25(61.0)	4(9.8)	41(100.0)	2.80(.601)
	전체	3(1.8)	44(26.2)	105(62.5)	16(9.5)	168(100.0)	2.80(.624)
귀 센터와 지역 내 도움을 주고받을 만한 기관이 충분히 있다.	대도시	2(3.7)	7(13.0)	37(68.5)	8(14.8)	54(100.0)	2.94(.656)
	중소도시	0(0.0)	18(24.0)	49(65.3)	8(10.7)	75(100.0)	2.87(.577)
	농산어촌	0(0.0)	10(23.8)	27(64.3)	5(11.9)	42(100.0)	2.88(.593)
	전체	2(1.2)	35(20.5)	113(66.1)	21(12.3)	171(100.0)	2.89(.604)
귀 센터에 대한 지역 내 인지도가 높다.	대도시	2(3.7)	19(35.2)	30(55.6)	3(5.6)	54(100.0)	2.63(.653)
	중소도시	1(1.3)	20(26.7)	44(58.7)	10(13.3)	75(100.0)	2.84(.658)
	농산어촌	1(2.4)	15(35.7)	22(52.4)	4(9.5)	42(100.0)	2.69(.680)
	전체	4(2.3)	54(31.6)	96(56.1)	17(9.9)	171(100.0)	2.74(.665)
지원 내용을 관리하는 데이터 베이스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대도시	2(3.7)	15(27.8)	33(61.1)	4(7.4)	54(100.0)	2.72(.656)
	중소도시	1(1.3)	26(34.7)	42(56.0)	6(8.0)	75(100.0)	2.71(.632)
	농산어촌	0(0.0)	10(23.8)	27(64.3)	5(11.9)	42(100.0)	2.88(.593)
	전체	3(1.8)	51(29.8)	102(59.6)	15(8.8)	171(100.0)	2.75(.631)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사례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대도시	0(0.0)	3(5.7)	39(73.6)	11(20.8)	53(100.0)	3.15(.496)
	중소도시	1(1.3)	4(5.3)	58(77.3)	12(16.0)	75(100.0)	3.08(.514)
	농산어촌	0(0.0)	1(2.4)	33(78.6)	8(19.0)	42(100.0)	3.17(.437)
	전체	1(0.6)	8(4.7)	130(76.5)	31(18.2)	170(100.0)	3.12(.489)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 및 가족을 의뢰할 기관이 있다.	대도시	0(0.0)	7(13.0)	34(63.0)	13(24.1)	54(100.0)	3.11(.604)
	중소도시	1(1.3)	19(25.3)	49(65.3)	6(8.0)	75(100.0)	2.80(.593)
	농산어촌	0(0.0)	10(23.8)	23(54.8)	9(21.4)	42(100.0)	2.98(.680)
	전체	1(0.6)	36(21.1)	106(62.0)	28(16.4)	171(100.0)	2.94(.630)
대상자를 직접 발굴하기 보다는 의뢰받는 경우가 많다.	대도시	1(1.9)	23(43.4)	24(45.3)	5(9.4)	53(100.0)	2.62(.686)
	중소도시	3(4.0)	27(36.0)	43(57.3)	2(2.7)	75(100.0)	2.59(.617)
	농산어촌	0(0.0)	20(47.6)	19(45.2)	3(7.1)	42(100.0)	2.60(.627)
	전체	4(2.4)	70(41.2)	86(50.6)	10(5.9)	170(100.0)	2.60(.638)

(11) 기관의 홍보방법

현장의 종사자들은 기관이 운영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음으로 인해 기관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활동의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기관의 홍보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표 22>와 같다. 4점 척도(하지 않는다(1점) - 충분하다(4점))를 바탕으로 산출한 각 항목의 평균점수를 살펴본 결과 기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홍보방법은 연계기관 방문을 통한 홍보(3.30점)였다. 그 다음으로 아웃리치(3.17점), 포스터나 전단지 같은 홍보물 부착 및 배부(3.04점), 그리고 지역 신문이나 소식지 같은 지역 언론 매체를 통한 광고(2.99점)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홍보방법을 살펴보면 대도시 및 중소도시는 전체적인 순위와 차이가 없었으나 농산어촌의 경우는 아웃리치가 연계기관 방문을 통한 홍보보다 더 많이 이용되는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식정보포털(2.12점)이나 스마트폰 앱(1.86점)을 이용한 홍보, 이벤트 실시 및 행사를 통한 홍보(2.46점)는 부족하였다.

홍보와 관련하여 기관 종사자들은 홍보 예산의 부족을 언급하거나 개별 기관 차원에서의 홍보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차원에서 주요 일간지 및 공중파 TV 등 언론 매체를 통한 지속적이고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자체의 요구로 기관홍보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질을 떨어뜨림으로써 기관 본연의 업무가 소홀해 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지역사회 내 청소년 발굴을 위해서라도 각 기관별 홍보도 물론 필요하지만 홍보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홍보는 청소년 발굴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지원기관의 연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2

기관의 홍보방법

(단위: 명, %)

구분	하지 않는다	부족	보통	충분	N	평균(표준편차)	
지식정보 포털(네이버, 다음 등)	대도시	12(22.2)	19(35.2)	20(37.0)	3(5.6)	54(100.0)	2.26(.873)
	중소도시	25(34.2)	18(24.7)	26(35.6)	4(5.5)	73(100.0)	2.12(.957)
	농산어촌	11(26.2)	16(38.1)	14(33.3)	1(2.4)	42(100.0)	2.12(.832)
	전체	48(28.4)	53(31.4)	60(35.5)	8(4.7)	169(100.0)	2.17(.898)
스마트폰 앱	대도시	22(40.7)	20(37.0)	11(20.4)	1(1.9)	54(100.0)	1.83(.818)
	중소도시	35(46.7)	16(21.3)	18(24.0)	6(8.0)	75(100.0)	1.93(1.018)
	농산어촌	17(40.5)	20(47.6)	3(7.1)	2(4.8)	42(100.0)	1.76(.790)
	전체	74(43.3)	56(32.7)	32(18.7)	9(5.3)	171(100.0)	1.86(.903)
연계 기관(학교, 경찰서 등) 방문을 통한 홍보	대도시	(0.0)	6(11.1)	26(48.1)	22(40.7)	54(100.0)	3.30(.662)
	중소도시	(0.0)	3(4.0)	38(50.7)	34(45.3)	75(100.0)	3.41(.572)
	농산어촌	(0.0)	2(4.8)	16(38.1)	24(57.1)	42(100.0)	3.52(.594)
	전체	(0.0)	11(6.4)	80(46.8)	80(46.8)	171(100.0)	3.40(.610)
홍보물(포스터, 전단지 등) 부착 및 배부	대도시	0(0.0)	14(25.9)	24(44.4)	16(29.6)	54(100.0)	3.04(.751)
	중소도시	1(1.3)	12(16.0)	33(44.0)	29(38.7)	75(100.0)	3.20(.753)
	농산어촌	1(2.4)	3(7.1)	21(50.0)	17(40.5)	42(100.0)	3.29(.708)
	전체	2(1.2)	29(17.0)	78(45.6)	62(36.3)	171(100.0)	3.17(.744)
길거리 홍보(전광판, 현수막, 버스 및 지하철 광고)	대도시	16(29.6)	18(33.3)	14(25.9)	6(11.1)	54(100.0)	2.19(.992)
	중소도시	6(8.1)	14(18.9)	34(45.9)	20(27.0)	74(100.0)	2.92(.888)
	농산어촌	2(4.8)	6(14.3)	21(50.0)	13(31.0)	42(100.0)	3.07(.808)
	전체	24(14.1)	38(22.4)	69(40.6)	39(22.9)	170(100.0)	2.72(.973)
지역 언론 매체(지역 신문, 소식지 등)를 통한 광고	대도시	2(3.7)	19(35.2)	25(46.3)	8(14.8)	54(100.0)	2.72(.763)
	중소도시	3(4.0)	9(12.0)	40(53.3)	23(30.7)	75(100.0)	3.11(.764)
	농산어촌	2(4.8)	6(14.3)	18(42.9)	16(38.1)	42(100.0)	3.14(.843)
	전체	7(4.1)	34(19.9)	83(48.5)	47(27.5)	171(100.0)	2.99(.801)
아웃리치	대도시	(0.0)	6(11.1)	33(61.1)	15(27.8)	54(100.0)	3.17(.607)
	중소도시	(0.0)	9(12.0)	37(49.3)	29(38.7)	75(100.0)	3.27(.664)
	농산어촌	(0.0)	2(4.8)	13(31.0)	27(64.3)	42(100.0)	3.60(.587)
	전체	(0.0)	17(9.9)	83(48.5)	71(41.5)	171(100.0)	3.32(.646)
이벤트 실시 및 행사를 통한 홍보	대도시	6(11.3)	27(50.9)	18(34.0)	2(3.8)	53(100.0)	2.30(.723)
	중소도시	11(14.9)	31(41.9)	24(32.4)	8(10.8)	74(100.0)	2.39(.873)
	농산어촌	1(2.4)	15(36.6)	17(41.5)	8(19.5)	41(100.0)	2.78(.791)
	전체	18(10.7)	73(43.5)	59(35.1)	18(10.7)	168(100.0)	2.46(.825)
기타	대도시	1(25.0)	1(25.0)	1(25.0)	1(25.0)	4(100.0)	2.50(1.291)
	중소도시	2(25.0)	1(12.5)	3(37.5)	2(25.0)	8(100.0)	2.63(1.188)
	농산어촌	0(0.0)	1(50.0)	1(50.0)	0(0.0)	2(100.0)	2.50(.707)
	전체	3(21.4)	3(21.4)	5(35.7)	3(21.4)	14(100.0)	2.57(1.089)

4.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10명 중 9명 이상은 현재 고등학교 이상의 연령대에 있고 10명 중 7~8명 정도는 고등학교 시기에 학교를 그만두었으며 진로가 파악된 청소년들의 경우 10명 중 3명 이상은 학업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 중에는 경제적 상황이 어렵거나 음주흡연, 폭력, 보호처분, 우울불안 등 위기상황을 경험한 청소년들도 적지 않았다.

청소년들이 지원센터를 이용하게 된 경로를 보면 학교나 상담복지센터, 법원 및 법무부 산하기관을 통해 이용하게 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비율이 그리 높지 않았고 다른 경로를 통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다양한 이용경로가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빠르고 쉬운 연결통로라 할 수 있는 일선 학교 및 교육청을 통한 연계가 충분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지원센터와 학교 간의 연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학교를 그만 두고 지원센터로 연결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단절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고 단절 없는 연계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이나 북한이탈 청소년과 같이 이주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 중에는 학업이 중단된 사례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이용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도 시급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에 따라 정부 부처 간, 그리고 현장에서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정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은 보다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정책 및 기관에 대한 홍보가 필수적이다. 홍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이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알리는 것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시킴으로써 청소년들이 더 이상 사회 안전망 밖으로 밀려나거나 숨지 않고 사회 속에서 당당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각 개별 기관들이 지역별 홍보를 강화하기 이전에 정부차원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계획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관에 따라서는 기관 이용 청소년에 대한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았거나 파악하였더라도 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놓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청소년들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파악은 이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있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기초적인 작업이므로 체계적인 자료구축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의 실태와 관련하여 정부부처, 지자체

및 연구기관 등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형태의 자료 요구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료 입력 및 저장 시스템 구축은 자료내용의 적절성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설계 및 진행되어야 한다. 즉 학교 밖 청소년들의 현황 및 실태 파악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선별하고 이를 하나의 통일된 양식으로 입력하도록 하며 필요시 자료에 대한 간단한 가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관운영에 대한 측면을 살펴보면 지역마다 이용청소년의 규모에 있어서 편차가 크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의 모든 지원센터에 동일한 예산과 인력이 지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과 인력의 부족에 따른 과중한 업무로 인해 기관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 곤란을 겪는 곳이 적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의 처우에 있어서도 고용의 안정성이나 급여의 적절성이 확보되지 못하여 이직률이 높게 나타났다. 종사자들의 높은 이직률은 이들의 업무역량을 저하시키고 업무의 연속성을 저해함으로써 청소년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이에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기관의 상황에 맞도록 예산 및 인력충원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지원센터에서 청소년들에게 각 부처별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안내 및 제공을 적절히 하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이 먼저 관련 정보를 충분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높은 이직률과 형식적인 종사자 교육연수 등으로 인해 종사자들이 최신의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지 못하고 있거나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정책 및 서비스가 청소년의 특성과 다소 괴리되어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책 및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부처들은 청소년들의 특성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정책 및 서비스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동시에 기관 종사자들에게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원센터에서는 이에 대한 정보를 보다 빠르고 폭넓게 수집할 뿐 아니라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보다 용이하고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지원센터의 종사자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원, 즉 학업 및 취업지원 이외에 심리상담 및 정서지원, 의료건강지원,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학업 및 취업동기가 낮은 경우가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과도 맞물려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이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지원을 제공하기에는 기관의 예산 및 인력 부족, 성과평가의 불합리성, 보여주기식 행정 등 주변 여건으로 인해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기관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관 위치 및 시설기자재의 수준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확보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환경에서의 열악함을 보이는 곳도 적지 않았다. 학교 밖 청소년이 몇

명 되지 않는 지역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는 것, 예산의 부족으로 종사자의 개인물품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것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부분적으로 사전에 충분한 조사나 예산의 확보 없이 성급하게 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하도록 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아직 운영 초기단계이므로 각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특성, 지역 내 인프라 형성, 기관의 준비 정도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몇몇 기관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식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있어서 지역 내 유관기관 간의 연계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단계에서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이러한 연계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지역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지역 내 긴밀한 연계를 위해 정부부처 간, 그리고 일선 현장에서 관련기관 간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한 방안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구되어야 한다. 지자체나 지원센터 역시 지역 내 관련기관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에 따라 청소년쉼터 등 역할이 중복되는 기관들과 연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지불식간에 경쟁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기관 및 시설 등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바탕으로 각 기관 간 역할분담 및 상호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국가통계포털(2015).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20 (검색일 2015.2.24)
- 동아일보(2015.10.8). 다문화 학생, 학업중단 비율 해마다 높아져.
- 여성가족부(2015). 2015년도 청소년사업안내(II).
- 여성가족부(2015.5.12). 관계부처 합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 발표(내부자료).
- 오병돈, 김기현(2013). 청소년복지정책 대상규모 추정: 학교 밖 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 복지연구, 15(4), 31-54.
- 윤철경, 유성렬, 김신영, 임지연(201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 4

.....

미래 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I

김 경 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래 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해외 인적 자원의 활용을 통한 네트워크의 형성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미 화교와 유대인들은 세계 각 지역에 각각 약 3,000만명, 2,00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인적 자원을 하나로 묶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경제적 네트워크로 전환시키고, 정치적, 문화적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김정숙, 임채완, 김정근, 서범중, 2008: 39~40).

한민족의 경우에도 최근 화교 네트워크와 유대인 네트워크에 자극을 받아서 한민족 공동체 네트워크 형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의 동포사회 지도자 및 차세대 리더의 네트워크 구축, 재외동포 기업인과 국내 중소기업인 또는 재외동포 기업인 간의 연계, 한민족경제인통합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재외동포재단, 2013b, 2014). 특히, 최근 재외동포 사회는 1세대에서 1.5 및 2세대로의 세대교체로 인한 차세대의 주류사회 진출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차세대는 1세대에 비해서 한민족에 대한 정체성이 약화되고 있어 재외동포 청소년의 한민족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향후 한민족 공동체 네트워크 형성의 주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적 목표는 ‘재외동포의 거주국 내 안정적인 정착’과 ‘모국과의 유대 강화’(p.7)로 김영삼 정부 이후로 비교적 연속성을 유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고 효과적으로 추진·지원하는 국무총리 소속 기구인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정점으로 외교통상부와 각 관계부처, 재외동포재단에서 모국과 동포 간 네트워크 구축사업, 재외동포사회 조사·연구사업, 재외동포교류사업, 재외교육기관 지원 등 다양한 재외동포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다(윤인진, 2013).

11) 2015년도 청소년정책연구원 고유과제로 수행한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I」의 내용을 요약한 것임.

재외동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재외동포재단에서 대학 학사과정 및 석·박사과정을 희망하는 우수 재외동포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재외동포 초청장학사업과 전 세계 해외동포청소년에게 동포사회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재외동포 청소년 초청연수사업(재외동포재단, 2013b: 25~27),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한민족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지원사업¹²⁾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1996년부터 격년으로 세계한민족 청소년축전을 개최해 왔으나 2005년 이후에는 세계한민족축전으로 변경되어 개최되고 있다(월드코리아뉴스, 2012. 9. 3일자).

한편, 재외동포정책의 대상인 재외동포는 2013년 현재 7,012,492명으로 파악되고 있다(재외동포재단, 2013a: 14). 그러나 재외동포 수는 한인회 등 한인단체가 파악한 명부와 주재국의 입출국 기록을 토대로 추정되고 있으며, 중복기재로 인해서 과도하게 추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연합뉴스, 2012. 8. 14일자; 윤인진, 2013: 13). 더욱이 재외동포 청소년에 대해서는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서 추정치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에서 해외동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시설과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거주 국가별, 지역별로 수요 파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정부의 정책적인 관심과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재외동포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정책이 현장 요구에 기반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필요에 따라 정부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미래 사회의 중요한 자원으로서의 재외동포 청소년을 위한 정책 방향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한류가 확산되고 있으며, 주요 국가와의 FTA 체결 등으로 전문직 차세대의 대한민국에서의 역할 기대가 상승하고 있다. 실제로 차세대 재외동포는 기존 네트워크의 활용을 통해서 거주국의 여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공공외교 차원에서의 역할, 한인 경제력 규모의 성장에 따른 경제적 측면에서의 가교 역할, 거주국에서의 한국문화의 수용자, 전파자로서의 역할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이진영, 박우, 2013: 23~24). 대한민국은 재외동포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서 보다 발전할 수 있으며,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해외의 우수한 인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별히 재외동포 차세대는 “모국과 거주국을 매개하는 주요 행위자이자 우리 국력의 외연을 형성하는 소중한 자산” (p.12)으로 인식되고 있다. 때문에 창의적 우수 재외동포인재의 국내 유입과 재외동포 청소년층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12) 교육부(2015). 교육부 조직 소개.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에서 2015년 2월 10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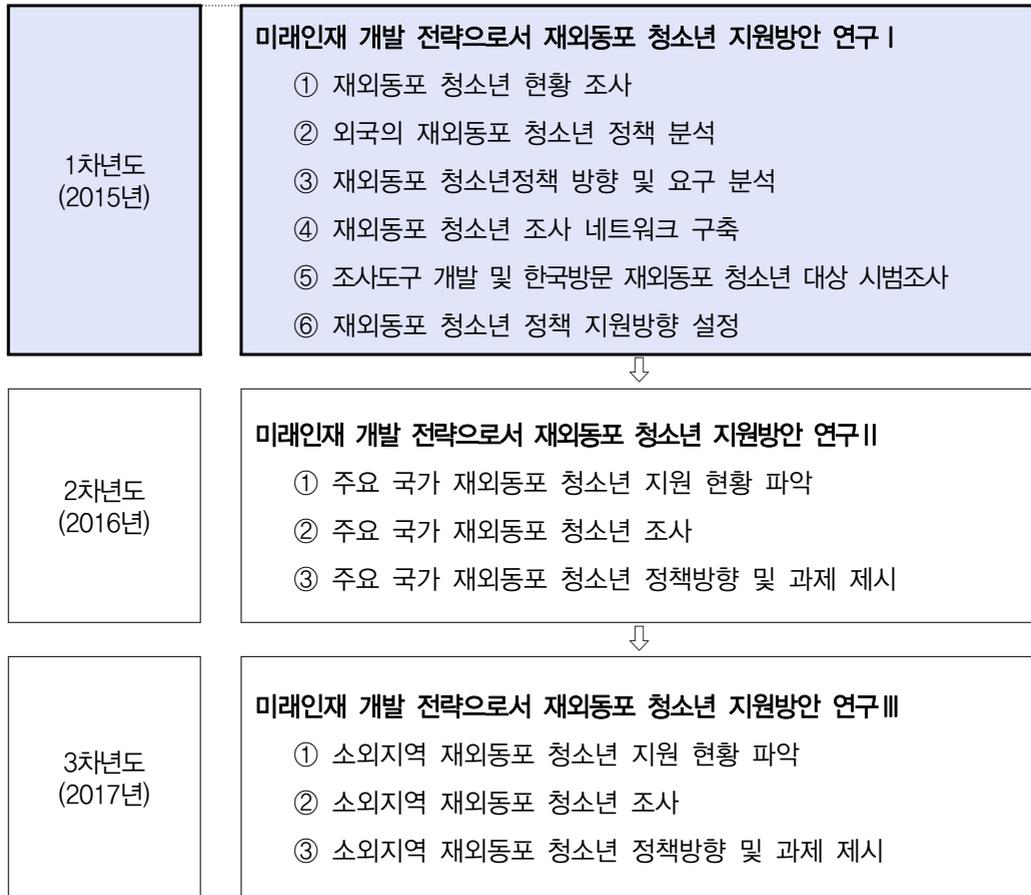
있다(임영상, 윤인진, 이진영, 박우, 한준태, 예동근, 이병조, 2012). 재외동포가 대한민국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갖고 한민족의 발전에 기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래 동포사회의 주역이 될 재외동포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향후 재외동포 청소년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재외동포 청소년에 대한 기초적 통계와 현황 파악, 그리고 정책적 요구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글로벌 시대의 재외동포 청소년의 미래 인재 개발 전략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정책과제를 제시하여 재외동포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재외동포 청소년의 성장·발전을 지원하고, 나아가서는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영역에서 한민족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는 3차년에 걸쳐 연구가 수행될 계획이며,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 방향 설정을 토대로 하여, 주요 국가와 소외지역 국가의 재외동포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를 파악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1차년도에는 재외동포 청소년정책 분석과 전문가 의견 분석 등을 통해서 정책방향을 설정할 것이며, 2차년도에는 주요 국가 재외동포 청소년의 실태 파악을 토대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차년도에는 소외지역 국가의 재외동포 청소년의 실태 파악과 정책방안 제시에 목적을 두었다.

2. 연구추진체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동안 추진할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의 연차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차년도인 2015년의 경우에는 재외동포 청소년 현황과 국내·외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 분석을 통해서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 지원방향을 설정하고, 2, 3차년도 본격적으로 조사할 재외동포 청소년 조사도구의 개발과 각국 단체와의 조사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다음으로 2차년도인 2016년에는 주요 국가의 재외동포 청소년에 대한 지원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국가 재외동포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부 정책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3차년도인 2017년에는 소외지역 재외동포 청소년에 대한 지원현황을 파악하고 소외지역 재외동포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부 정책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그림 1】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의 연차별 추진계획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재외동포청소년의 정의와 관련해서 「재외 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등록법, 「재외동포재단법, 「외교부훈령,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등 재외동포 및 청소년 관련 법령을 참고하였다. 재외동포청소년 및 관련 기관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재외동포재단 등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재외동포청소년 관련 연구동향 파악을 위하여 학술정보연구서비스(RISS)에 수록되어 있는 사회과학 분야 논문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재외동포청소년과 관련한 조사연구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외국의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 비교를 위하여 각국의 정부기구 및 단체 사이트 검색과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2) 전문가자문 및 워크숍 실시

재외동포청소년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 조사도구의 개발과 재외동포청소년 조사,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제안 검토 등을 위해 재외동포 및 청소년 관련 학계, 현장전문가, 정부부처공무원 등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3차례 자문을 실시하였다. 특히,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및 CIS 등 지역별 재외동포청소년 실태와 정책과제 제안 등을 위해 각 지역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운영하였다. 또한 미래 인재 개발 전략으로서의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학계와 정부부처 및 재외동포 관련 기관 담당자가 참여하는 전문가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3) 델파이조사

미래 인재로서의 재외동포 청소년 개발에 대한 의미와 정부의 정책 방향 설정, 주요 정책과제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15년 4월 13일에서 2015년 5월 1일 사이에 재외동포 관련 학자 및 공무원 30여명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차 조사에서는 26명, 2차 조사에서는 25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되었다. 1차 조사에서는 개방형 질문으로 재외동포사회와 재외동포청소년과 관련된 지역별 현재 이슈, 지역별 미래 이슈, 재외동포청소년의 미래인재상과 미래인재로서 필요한 능력, 정부정책의 문제점 및 정책 방향, 미래인재 개발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과제, 미래인재 개발을 위한 동포사회가 제공해야 할 지원 등을 질문하였으며,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결과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각 항목에 대하여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동의 정도와 우선순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4) 사례조사

전문 학회(해외한인학회)에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미국, 일본, 중국, 독일, 이스라엘 등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에 대한 외국 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해외 각 지역의 재외한인 청소년에 대한 정책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향후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별권으로 보고서가 발간되지만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주요 결과를 요약에서 본 보고서에 포함하였다. 외국 사례 분석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선행연구가 사실상 부재한 가운데 시도하는 연구로서 문헌연구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해당 국가의 재외동포정책, 청소년정책 및 인재유입정책에 대한 선행연구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재외동포 청소년정책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문헌 및 정책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전문 연구자들의 분석뿐 아니라, 정부의 각 종 홈페이지 및 법령 제도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는 시설 및 인력에 대한 광범위한 문헌을 검토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민간기구의 재외동포 청소년지원에 대한 프로그램도 분석하였다.¹³⁾

5) 청소년 설문조사 실시

재외동포청소년 조사도구를 개발하여 2015년 7월 14일에서 2015년 8월 4일 사이에 재외동포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외동포 청소년 초청사업을 통해서 국내로 입국한 전 세계 재외동포 청소년(중·고·대학생) 85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 회수·분석된 설문지는 575개였다. 재외동포청소년들의 생활실태와 한민족에 대한 의식, 재외동포청소년의 동포사회와 한국 사회에서의 역할 기대 등 총 22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작성한 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로 번역하고 해당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제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수정·보완하여 2, 3차년도 조사도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13) 본 연구의 용역과제로 수행된 「외국의 재외동포 청소년정책 비교 연구」(이진영 외, 2015)에서 기술된 연구방법 내용을 재인용하였음.

4. 주요 조사결과

1) 델파이조사 결과

재외동포 청소년의 미래 인재상과 주요 정책과제 등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학계, 현장 및 정책전문가를 대상으로 총 두 차례에 걸쳐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1차 조사는 4월 13일에서 4월 17일까지, 그리고 2차 조사는 4월 27일에서 5월 1일까지 실시되었다. 1차에서는 30명 중 26명이 응답하였으며, 2차에서는 25명이 응답하였다.

재외동포청소년 공통적인 현재 이슈는 차세대 민족자원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지원, 상급학교 진학 및 주류사회 진출 등이었다.

표 1 재외동포 청소년 공통의 현재 이슈

항목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차세대 민족자원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지원	4.60	0.57	96
상급학교 진학 및 주류사회 진출	4.24	0.72	84
재외동포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4.20	0.57	92
민족교육 지원	4.16	0.68	84
한민족 정체성 유지	4.16	0.74	80
차세대 단체의 육성	4.16	0.8	76

국가별로는 미주 재외동포청소년의 최대의 현재 이슈는 주류사회 진출이었고, 중국 재외동포청소년은 민족정체성 유지, 일본 재외동포청소년은 협한류 등 재일외국인 배외주의 극복, 그리고 독립국가연합 재외동포청소년은 한국 유학 및 연수 기회로 나타났다. 또한 재외동포청소년의 미래 이슈는 공통적으로 한민족교육의 확대, 한민족 정체성 강화, 모국과의 네트워크 구축, 주류사회 진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 재외동포 청소년 공통의 미래 이슈

항목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한국어·문화·역사 교육의 확대	4.48	0.65	92
상급학교 진학 및 주류사회 진출	4.28	0.73	84
모국과의 네트워크 유지	4.28	0.54	96
한민족 정체성 강화	4.24	0.66	88
차세대 지역 커뮤니티 조직 및 지원	4.20	0.70	84

국가별로는 미주 재외동포청소년의 경우에 모국과 거주국에서의 조화로운 역할과 가치관 정립이 최대 이슈이고, 중국과 일본 재외동포청소년의 경우에는 한민족 정체성 유지가, 그리고 독립국가연합 재외동포청소년의 경우에는 한국과의 교류기회 확대가 가장 큰 미래 이슈가 될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청소년의 미래의 인재상은 세계시민의식과 글로벌 경쟁력, 갈등해결과 의사소통능력, 사회적 책임의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민족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인재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표 3 재외동포 청소년의 미래 인재상

항목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세계시민의식을 가진 인재	4.48	0.65	92
글로벌 경쟁력 있는 인재	4.44	0.65	92
한민족 정체성을 가진 인재	4.40	0.64	92
갈등해결 및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인재	4.40	0.64	92
사회적 책임의식이 강한 인재	4.29	0.62	91.6
융합적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인재	4.24	0.72	84
창의성을 갖춘 인재	4.24	0.72	84
국제 간 및 남북 간 통합능력이 있는 인재	4.04	0.67	80
네트워크 구축능력이 있는 인재	3.62	0.57	80
정치 참여 수용성이 높은 인재**	3.60	0.70	48

하지만 거주국에서 적응하면서 겪는 문화적 소외감과 정체성 문제, 한민족교육 인프라의 부족,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비전 부재 등이 재외동포청소년을 미래 인재로 성장하게 하는데 장애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외동포청소년을 미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은 비전과 장기적인 정책의 부족, 정책 수행의 컨트롤타워의 부족, 국가별 차별적인 정책의 부재 등으로 나타났다.

표 4 재외동포 청소년을 미래인재로 개발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문제점

항목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비전과 장기적인 정책의 부족	4.72	0.54	96
컨트롤타워의 부재	4.40	0.70	88
외국적 재외동포 청소년의 지원 방안 부재	4.40	0.64	92
예산 및 인력 부족	4.28	0.84	76
국가 간 차별적 정책 부재	4.24	0.77	80
병역, 이중 국적, 노동과 거주 비자문제 등 법적 문제 해결	3.92	0.75	76
재외동포 청소년을 격려하는 정책 부재	3.84	0.85	64

향후 재외동포청소년을 미래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청소년 육성에 대한 비전과 중장기 정책의 수립, 동포사회 국가별 특성에 적합한 정책의 수립, 정부정책 시행을 위한 컨트롤타워와 국내·외 지원 조직 및 시설의 구축, 관련 법·제도 개선,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재외동포 청소년을 미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향후 정책 방안

항목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지역별 맞춤형 지원 방향 설정	4.56	0.50	100
체계적인 정책 방향 및 지원 목표 설정	4.48	0.71	88
모국연수, 교환학생, 유학, 취직 등의 지원 확대	4.44	0.57	96
재외동포 청소년 기초 통계 수집 및 분석(체계적인 조사 연구)	4.40	0.70	88
재외동포 관련 통일적인 정부조직 정비	4.32	0.80	80
재외동포 관련 법 제정**	4.12	0.72	80
거주국의 민족교육 지원 확대	4.08	0.64	84
거주국 단체 및 한국 청소년들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4.04	0.69	79.1
현지 NGO 및 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정책 방향 수립	4.00	0.81	88
통일시대 국제적 감각 함양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 수립	3.88	0.83	76

2) 설문조사 결과

미래 한민족 공동체 발전의 중요한 자원으로 논의되고 있는 재외동포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고·대학생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생활실태와 한민족에 대한 의식, 재외동포 청소년의 동포사회와 한국 사회에서의 역할 기대 등을 조사하였다. 재외동포재단에서 주관하여 2015년 7월 14일에서 8월 4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실시된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한 중·고·대학생 청소년 851여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최종 조사되어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575명에 대한 설문지였다. 지역별로는 중국 동포청소년이 36.2%, 러시아 및 CIS지역 동포청소년이 26.3%, 북미 동포청소년이 14.8%, 기타지역 동포청소년이 9.2%, 남미지역 동포청소년이 7.1%, 유럽지역 동포청소년이 5.6%였다. 성별로는 남자가 37.4%, 여자가 62.6%로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으며,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15.5%, 고등학생이 47.7%, 대학생이 36.0%으로 고등학생이 가장 많았다.

표 6 **응답 대상자의 특성**

		빈도(N)	비율(%)
전체		575	100
출신 지역 국가	중국	208	36.2
	북미	86	14.8
	남미	40	7.1
	유럽	33	5.6
	러시아 및 CIS	149	26.3
	기타	54	9.2
	무응답	5	0.9
	성별	남자	215
	여자	360	62.6
학교급	중학생	89	15.5
	고등학생	274	47.7
	대학생	207	36.0
	무응답	5	0.9

분석결과, 한국과 관련한 부모와의 가정생활은 한국음식 만들기(4.12), 뉴스시청 및 노래 청취(3.58), 한국어사용(3.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럽지역과 북미지역 동포청소년들이 가정에서

한국어 사용을 가장 많이 하였고, 한국 드라마, 뉴스 시청 및 노래 청취는 중국지역 동포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관련된 직업과 한국 사람과의 결혼에 대한 희망도는 러시아 및 CIS지역 부모들이 가장 높았으나 북미지역 부모들은 한국 관련된 직업에 대한 희망도가 가장 낮았고, 중국지역 부모들의 경우에는 한국 사람과의 결혼에 대한 희망도가 가장 낮았다.

표 7 한국과 관련한 부모와의 가정생활 (지역별)

(단위: 평균(표준편차))

구분	전체	중국	북미	남미	유럽	러시아 및 CIS	기타	F값
부모님과 대화할 때 한국어를 사용한다.	3.26 (1.44)	3.49 (1.22)	4.04 (1.16)	2.66 (1.84)	4.19 (1.36)	2.07 (.89)	2.80 (.99)	46.22***
나와 부모님은 한국 음식을 즐겨 만들어 먹는다.	4.12 (1.03)	4.11 (1.01)	4.32 (.93)	3.49 (1.68)	4.25 (1.11)	4.07 (.79)	4.53 (.85)	5.28***
나와 부모님은 한국 드라마나 뉴스를 자주보거나 한국 노래를 자주 듣는다.	3.58 (1.33)	4.04 (1.10)	3.41 (1.42)	3.22 (1.65)	3.81 (1.28)	2.88 (1.15)	4.25 (1.21)	16.83***
부모님은 한국과 관련된 직업을 갖기를 원하신다.	2.93 (1.20)	2.89 (1.14)	2.12 (1.05)	3.34 (1.41)	2.53 (1.27)	3.40 (1.08)	3.04 (1.18)	13.38***
부모님은 한국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신다.	3.20 (1.32)	2.72 (1.27)	3.36 (1.36)	3.02 (1.56)	3.28 (1.58)	3.84 (.97)	3.04 (1.17)	12.32***

재외동포청소년들의 거주국에서의 생활만족도는 5점 만점에 3.82점으로 비교적 만족도가 높았다. 지역별로는 북미(4.38), 유럽(4.19), 기타 지역(4.08), 중국(3.88), 남미(3.46), 러시아 및 CIS(3.3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8 거주국에서의 생활 만족도(지역별)

(단위: 평균(표준편차))

구분	전체	중국	북미	남미	유럽	러시아 및 CIS	기타	F값
거주국에서의 생활 만족도	3.82 (.91)	3.88 (.81)	4.38 (.72)	3.46 (1.09)	4.19 (.78)	3.36 (.88)	4.08 (.80)	16.97***

이민세대별로는 1.5세대, 2세대, 3세대 이상의 순으로 세대가 진행될수록 거주국에서의 생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하기, 듣기 및 이해하기, 읽기 및 쓰기 등의 한국어능력은 지역별로는 중국지역의 재외동포청소년들이, 교급별로는 중학생들이, 그리고 이민세대별로는 1.5세대들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청소년들의 장래 희망직업으로는 사업가(9.0%), 의사(8.9%), 디자이너(8.0%), 교사(7.0%), 연구원(5.1%), 법조인(4.9%)과 회사원(4.9%), 엔지니어(4.5%), 외교관(4.2%) 등으로 나타나, 한국 중·고등학생들의 경우에 교사, 연예인 등에 대한 희망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

표 9 장래 희망 직업

구분	사업가	의사	디자이너	없음	교사	박사, 과학자 등 연구원	법조인	회사원	엔지니어	외교관
빈도(N)	52	51	46	42	40	29	28	28	26	24
비율(%)	9	8.9	8	7.3	7	5.1	4.9	4.9	4.5	4.2

구분	컴퓨터 프로그래머	연예인	음악가	회계사	공무원	요리사	번역가	기타	무응답	전체
빈도(N)	21	19	19	16	14	12	10	93	5	575
비율(%)	3.7	3.3	3.3	2.8	2.4	2.1	1.7	16.1	0.9	100

재외동포청소년들이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30.1%),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21.7%), “건강하게 사는 것”(10.4%),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9.7%), “돈을 많이 버는 것”(8.7%),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6.6%) 등으로, 사회 발전과 이웃에 대한 봉사보다는 개인의 발전과 가정을 보다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청소년들이 장래 희망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개인의 능력 부족”(39.7%),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25.9%), “교육기회의 부족”(8.5%), “동포사회의 취약성”(5.6%) 등의 순으로, 사회나 국가보다는 개인의 능력이나 가정의 어려움을 어려운 요인으로 보았다.

표 10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구분	빈도(N)	비율(%)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173	30.1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125	21.7
건강하게 사는 것	60	10.4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	56	9.7
돈을 많이 버는 것	50	8.7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	38	6.6
종교생활을 하는 것	29	5.0
명예를 얻는 것	16	2.8
행복하게 사는 것	8	1.4
모름/무응답	7	1.2
나의가족	3	.5
기타	10	2.0
전체	575	100

한민족 정체성과 관련해서 재외동포청소년들은 한민족의 후손임과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동포사회의 배경에 대한 이해와 한민족 사건이나 문제를 자신의 일로 생각하는 청소년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남미지역 동포청소년들이 한민족 사건이나 문제에 대한 인식 이외의 모든 정체성 영역에서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중국지역 동포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한민족의 후손임과 한민족에 대한 소속감,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한민족 정체성(지역별)

(단위: 평균(표준편차))

구분	전체	중국	북미	남미	유럽	러시아 및 CIS	기타	F값
한민족의 후손임이 자랑스럽다	4.31 (.89)	4.19 (.96)	4.27 (.97)	4.55 (.81)	4.52 (.71)	4.35 (.79)	4.41 (.81)	1.74
한민족에 대한 소속감을 느낀다.	4.07 (.55)	3.89 (1.09)	4.09 (.92)	4.30 (1.02)	4.15 (.87)	4.12 (.81)	4.28 (.88)	2.33*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4.18 (.92)	4.04 (1.03)	4.16 (.90)	4.54 (.71)	4.16 (.85)	4.29 (.80)	4.19 (.98)	2.21*
다른 사람에게 한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한다.	3.69 (1.03)	3.71 (1.15)	3.42 (1.19)	3.98 (1.23)	3.55 (1.12)	3.69 (1.03)	3.87 (1.10)	1.66
나의 동포사회의 배경에 대해 잘 안다.	3.60 (1.06)	3.72 (1.03)	3.82 (1.08)	3.95 (1.30)	3.66 (1.00)	3.16 (.93)	3.74 (1.04)	6.72***
한민족의 사건이나 문제가 나의 일로 느껴진다.	3.62 (1.07)	3.64 (1.02)	3.55 (1.09)	3.73 (1.30)	3.97 (.78)	3.42 (.99)	3.89 (.91)	2.22*

재외동포청소년들이 한민족에 관심을 갖게 하는 요인은 “한류를 통한 드라마나 K-POP” (26.3%),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의 관심과 교육”(18.8%), “개인적인 한국 방문”(15.3%), “주변 친구들의 관심과 대화”(8.7%), “한글학교 등에서의 교육”(8.3%), “한민족 캠프나 축제” (7.8%), “교환학생이나 한국방문 프로그램”(7.1%) 등으로, 한류와 부모의 교육 등이 동포청소년들의 한민족에 대한 관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표 12 **한민족에 관심을 갖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 (단위: 평균(표준편차))

구분	빈도(N)	비율(%)
한류를 통한 드라마나 K-POP	151	26.3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의 관심과 교육	108	18.8
개인적 한국 방문	88	15.3
주변 친구들의 관심과 대화	50	8.7
한글 학교등의 한국어 교육	48	8.3
한민족 캠프나 축제	45	7.8
교환학생이나 한국 방문 프로그램	41	7.1
인터넷 사이트 방문이나 SNS활동	21	3.7
역사와 문화를 알고 있는 것	3	.5
기타	3	.6
무응답	17	3.0
합계	575	100

재외동포청소년들의 교류 경험은 평상시 동포청소년들 간의 만남이나 연락(3.25), 동포청소년 단체 사람들과의 교류(3.06), 한국에서의 동포프로그램 참여 경험(2.87), 거주국에서의 동포청소년 캠프나 연수 참여 경험(2.65)의 순으로 나타나, 친구 등과의 일상적인 만남을 통해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거주국에서의 교류경험은 상대적으로 유럽지역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서 북미지역 청소년들의 교류 경험은 가장 적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표 13

한민족 청소년 간 교류 경험

(단위: 평균(표준편차))

구분	전체	중국	북미	남미	유럽	러시아 및 CIS	기타	F값
평상시 동포청소년들과 자주 만나거나 연락한다.	3.25 (1.31)	3.38 (1.34)	2.85 (1.39)	3.15 (1.62)	3.66 (1.29)	3.11 (1.04)	3.60 (1.52)	3.28**
동포청소년 단체 사람들과 연락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다.	3.06 (1.30)	3.25 (1.29)	2.49 (1.32)	2.88 (1.55)	3.44 (1.13)	3.03 (1.12)	3.21 (1.39)	4.35***
거주국에서 열리는 동포청소년 캠프나 연수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2.65 (1.44)	2.50 (1.45)	2.25 (1.32)	3.12 (1.72)	2.78 (1.52)	3.01 (1.27)	2.42 (1.51)	4.4***
한국에서 열리는 동포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2.87 (1.54)	2.39 (1.49)	2.93 (1.62)	3.20 (1.72)	2.88 (1.72)	3.44 (1.27)	2.64 (1.56)	8.23***

재외동포청소년들은 동포사회에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동포사회의 단합에 대한 역할(3.60), 남북통일에의 기여(3.51), 동포사회 발전에의 기여(3.40)의 순으로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동포사회 발전, 동포사회 단합, 남북통일에의 기여 등에 대한 중국 동포청소년들의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남미지역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남북통일에의 기여에 대한 역할 인식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재외동포 청소년에 기대하는 역할

(단위: 평균(표준편차))

구분	전체	중국	북미	남미	유럽	러시아 및 CIS	기타	F값
현재 살고 있는 나라에서 성공해서 동포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	3.40 (1.14)	3.98 (1.01)	3.73 (1.02)	3.51 (1.36)	3.75 (.65)	3.70 (.80)	3.36 (1.11)	3.76**
현재 살고 있는 나라에 한국문화를 알릴 수 있다.	3.77 (.98)	3.87 (1.05)	3.53 (.98)	4.03 (1.05)	3.85 (1.00)	3.72 (.83)	3.60 (.92)	1.81
다른 동포사회와 교류하여 동포사회를 단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3.60 (1.02)	3.91 (1.05)	3.64 (1.01)	3.73 (1.16)	3.81 (.86)	3.43 (.94)	3.71 (.93)	3.45*
나의 아이디어와 능력을 활용해서 한국경제나 사회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3.66 (1.02)	3.78 (1.05)	3.56 (.98)	3.75 (1.34)	3.55 (.91)	3.54 (.96)	3.67 (.95)	1.14
국제사회에서 가교 역할을 통해 남북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	3.51 (1.02)	3.69 (1.17)	3.24 (1.16)	3.78 (1.19)	3.13 (1.07)	3.49 (.78)	3.38 (1.06)	3.04*

재외동포청소년들이 동포사회나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거주국 주류사회 진출 지원(4.40)과 한국 방문기회 제공(4.40), 재외동포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4.18)과 한국 청소년과의 교류(4.18), 민족교육 지원(4.14), 거주국 동포청소년들과의 정보 교류(4.13) 등의 순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동포사회나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단위: 평균(표준편차))

구분	전체	중국	북미	남미	유럽	러시아 및 CIS	기타	F값
한국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야한다.	4.40 (.90)	4.19 (1.02)	4.09 (.84)	4.35 (.80)	4.06 (1.03)	4.21 (.70)	4.13 (.99)	.59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	4.18 (.86)	4.25 (.99)	4.08 (.84)	4.23 (.83)	4.27 (.80)	4.07 (.65)	4.19 (.89)	.97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동포청소년들과의 정보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4.13 (.91)	4.24 (1.01)	3.99 (.85)	4.38 (.71)	4.09 (.84)	4.01 (.79)	4.17 (1.00)	1.87
한국의 청소년들과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4.18 (.88)	4.31 (.94)	4.09 (.86)	4.25 (.84)	4.21 (.78)	4.07 (.79)	4.06 (.94)	1.68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주류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4.40 (.55)	4.11 (1.04)	3.84 (1.00)	4.03 (1.06)	3.79 (1.10)	3.65 (.92)	4.40 (.55)	3.51**
한민족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도록 민족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4.14 (.90)	4.31 (.92)	3.87 (.98)	4.27 (1.00)	4.06 (1.01)	4.10 (.72)	4.00 (.94)	3.61**

재외동포청소년들의 한국에서의 교육, 문화, 취업활동과 관련한 참여 욕구는 대부분 한국 관련 활동에 대한 참여 욕구가 높았는데, 특히, 한국 연수프로그램에 대한 참여(4.15)와 다양한 한국문화 경험(4.06)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한국 연수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유럽(4.47), 남미(4.39), 러시아 및 CIS(4.27) 등의 청소년들의 참여 욕구가 높았고, 한국에서의 유학, 한국 기업 인턴활동 및 한국 기업 취업에 대해서는 남미와 러시아 및 CIS 지역 청소년들의 참여 욕구가 높았고, 한국 문화 경험 활동의 경우에는 유럽(4.34), 남미(4.24), 중국(4.22) 등의 동포청소년들의 참여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한국에서 교육, 문화, 취업활동 참여 욕구

(단위: 평균(표준편차))

구분	전체	중국	북미	남미	유럽	러시아 및 CIS	기타	F값
한국에서 청소년과 교류하고 싶다.	4.26 (.85)	4.23 (.94)	4.23 (.85)	4.58 (.59)	4.42 (1.03)	4.23 (.69)	4.20 (.90)	1.28
한국에서 연수프로그램 참여하고 싶다.	4.15 (.98)	4.04 (1.11)	3.96 (1.02)	4.39 (.89)	4.47 (.76)	4.27 (.77)	4.11 (.99)	2.35*
한국에서 유학하고 싶다.	3.67 (1.25)	3.52 (1.31)	3.22 (1.31)	4.22 (1.17)	3.53 (1.41)	4.05 (.94)	3.60 (1.21)	6.48***
한국이나 한국 관련 기업에서 인턴활동을 하고 싶다.	3.75 (1.15)	3.57 (1.25)	3.39 (1.25)	4.15 (1.11)	3.78 (1.07)	4.07 (.89)	3.79 (1.07)	5.34*
한국이나 한국관련 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다.	3.60 (1.24)	3.44 (1.30)	2.91 (1.32)	4.15 (1.13)	3.53 (1.22)	4.03 (.92)	3.79 (1.10)	10.61***
한국의 다양한 문화(역사, K-POP 공연 등)를 경험하고 싶다.	4.06 (1.09)	4.22 (1.10)	3.91 (1.19)	4.24 (1.06)	4.34 (.87)	3.79 (1.02)	4.06 (1.06)	3.27**

한민족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한국과 관련한 부모와의 활동, 한국과 관련한 부모의 기대, 교류경험, 교류욕구, 대학생 대비변수가 한민족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수들은 33.3%의 설명력을 보였다. 즉, 가정에서 부모와 한국어 사용, 한국음식 만들기, 한국드라마나 뉴스 보기 등을 많이 할수록, 한국 관련 직업과 한국 사람과의 결혼에 대한 희망 정도가 높을수록 한민족 정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포청소년과의 교류 경험과 연수프로그램 참여, 유학, 인턴, 취업, 문화경험 등 한국 관련 교류 욕구가 높을수록 한민족 정체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청소년들의 한민족 정체성 형성을 위해서 가정에서의 역할과 동포청소년 간, 그리고 한국과의 교류 기회가 확대될 필요성을 보이고 있다.

표 17 **한민족 정체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구분	B	SE	B	T	p
(상수)	19.956	.822		24.263	.000
한국어능력	.036	.063	.027	.572	.568
한국과 관련한 부모와의 활동	1.188	.234	.244	5.074	.000
한국과 관련한 부모의 기대	1.065	.187	.219	5.680	.000
교류경험	.263	.044	.231	6.041	.000
교류욕구	.335	.036	.357	9.182	.000
더미대학생	-1.183	.519	-.117	-2.278	.023
더미고등학생	-.799	.495	-.082	-1.612	.107
N= 575 F=42.942 p=.000 R ² = .333					

재외동포청소년의 한민족 공동체 발전의 기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교류경험, 교류욕구, 한민족 정체성이 한국사회발전 기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수들은 40.7%의 설명력을 보였다. 즉, 동포청소년 및 대한민국 청소년과의 교류 경험이 많을수록, 한국 관련 교류 욕구가 높을수록, 그리고 한민족 정체성이 높을수록 한국사회 발전의 기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청소년들이 한민족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청소년 간, 그리고 한국청소년과의 교류활동과 한민족 정체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함을 보이고 있다.

표 18 **재외동포청소년의 한국사회 발전 기여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구분	B	SE	B	T	p
(상수)	2.976	.814		3.659	.000
한국어능력	.072	.039	.062	1.852	.065
교류경험	.085	.035	.085	2.431	.015
교류욕구	.224	.031	.271	7.261	.000
정체성	.357	.034	.405	10.651	.000
N= 575 F= 97.837 p=.000 R ² = .407					

5. 결론 및 정책제언

1) 비전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의 비전은 향후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청소년들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토대로 설정할 수 있다. 즉, 재외동포청소년들에게 기대하는 미래 인재상이 곧 정책 비전이 될 수 있다. 전문가 조사결과를 통하여 파악된 재외동포청소년들에게 기대하는 미래 인재상은 글로벌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세계시민인 동시에 한민족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한민족의 구성원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갈등을 해결하고 소통해 나가는 능력 등을 갖춘 청소년이었다. 즉,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의 비전은 거주국 사회에의 적응을 넘어서서 한민족 공동체의 발전,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공동체에 기여하는 청소년 육성으로 설정할 수 있다.

비전

**거주 국가와 한민족 공동체의 발전, 더 나아가
글로벌공동체에 기여하는 청소년 육성**

2) 정책대상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의 대상은 연령, 국적, 개인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설정할 수 있다. 연령은 현재 청소년 관련법이나 재외동포청소년 관련 정책이 초, 중, 고, 대학생 연령대를 포괄하고 있고, 청소년기본법과 같이 재외동포청소년들의 보호보다는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적의 경우에도 현재 법률이나 정부부처의 정책이 재외국민 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 외국국적자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책과제에 따라서 재외국민 혹은 외국국적자를 포함하는 대상으로 달리 설정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이를 포괄하는 개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적 특성의 경우에는 거주 국가와 한민족 공동체 발전 및 글로벌 공동체에 기여하는 미래 인재 개발을 위해서는 한민족에 대한 관심이 많고, 정체성이 높은 집단, 그리고 재능이 있는 집단 등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정책대상

한민족에 대한 관심과 정체성이 높고, 재능 있는 9~24세의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청소년

3) 정책목표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거주국에서 재외동포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요구를 반영해야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거주국 사회에서 재외동포청소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이슈를 중심으로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의 목표는 정부의 통합적인 정책 목표 설정을 위해 국간 간 공통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더불어 국가별 특성을 반영해서 차별적으로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재외동포청소년들에게 한민족정체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류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민족교육에 대한 지원과 모국과의 네트워크 형성, 상급학교 진학 및 글로벌 시민의식 역량 개발 지원, 그리고 차세대단체 육성 등이 필요함을 보이고 있다. 미주지역 재외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목표 설정에 있어서는 주류사회의 진출과 정체성 확립, 모국과의 유대 강화가 강조될 필요가 있고, 중국지역 재외동포청소년 대상의 정책 목표 설정에서는 한민족정체성의 유지와 위기 청소년 지원, 그리고 주류사회 진출 지원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본지역 재외동포청소년을 대상의 정책 목표 설정에서는 민족정체성 함양, 반한 감정 및 민족학교 차별에 대한 대응, 주류사회 진출 지원 등이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독립국가연합(CIS) 재외동포청소년 대상의 정책목표 설정에서는 한국과의 연계 및 교류 기회 확대, 한민족정체성 유지, 주류사회 진출 지원 등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그림 2】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목표

4) 정책방향

그동안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은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집행하기 위한 기구가 부재해서 정책이 중복되고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못했으며, 재외동포의 요구에 기초해서 국가별로 처해있는 상황에 적절한 정책 수립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재외동포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부족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한국어나 교육 중심의 지원에 국한하여 재외동포청소년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교류 및 활동 지원을 하는데 소홀하였다. 따라서 향후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은 효과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구축, 거주 국가별 상황과 요구에 기초한 정책의 수립, 법·제도적 기반 조성을 통한 지속적인 정책의 수행, 정부지원의 다변화 및 민간 참여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활동 지원에 방향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림 3】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방향

5) 주요 정책과제

정책과제는 공통의 정책과제를 법·제도 개선 방안, 정책추진체계 마련, 재외동포청소년 관련 전문가 양성 및 지원 확대, 프로그램 개발·운영 확대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정책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이밖에 재미동포청소년, 재중동포청소년, 재일동포청소년, 고려인 동포청소년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특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지역별 정책과제는 본 연구의 2, 3차년도 연구과제에서 개별적으로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제안될 계획이다.

표 19 재외동포청소년 정책과제		기간	관련 부처
구분	정책과제		
법·제도 개선	재외동포기본법(안) 제정을 통한 차세대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인 추진	중장기	외교부
	재외동포교육진흥법 제정 및 관련 정책 수립	중장기	교육부
	재외동포청소년 교류활동 확대를 위한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	중장기	여성가족부
	재외동포청소년 관련 사회단체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중장기	외교부

구분	정책과제	기간	관련 부처
	재외동포청소년의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및 군복무 제도 개선	중장기	법무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한글(한국)학교 등 재외동포교육기관의 제도적 지원 확대	단기	교육부 외교부
	재외동포청소년 현황 조사 정례화	단기	외교부 교육부
정책 추진 체계 마련	정부부처 내 재외동포청소년과 신설	중장기	외교부
	국회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재외동포위원회 설치	중장기	외교부
	재외동포청소년 통합지원센터 및 해외 지역별 거점 지원센터 설치	중장기	외교부 여성가족부
	재외동포청소년시설 건립	중장기	여성가족부 외교부
	재외동포청소년 연수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및 청소년활동시설과의 연계·협력	단기	외교부 지자체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글로벌 시민역량 개발센터 지정·운영	중장기	외교부 여성가족부
	재외동포청소년 맞춤형 정보 시스템 구축	단기	외교부
재외 동포 청소년 관련 전문가 양성 및 지원 확대	재외동포청소년 교사뱅크 구축	단기	교육부 외교부
	한글학교 교사 자격증 제도 신설	중장기	교육부 외교부
	재외동포청소년 교육 양성과정 개발 및 전문가 양성	중장기	교육부 여성가족부
	외국에 교사 및 청소년활동지도자 파견 확대	단기	교육부 여성가족부
	국내와 현지 전문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단기	외교부 교육부
프로 그램 개발· 운영 지원	재외동포청소년 리더십훈련 프로그램 개발	단기	외교부 여성가족부
	거주 지역별 한민족 축제 개발 지원	단기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재외동포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확대	단기	여성가족부
	다양한 한민족체험 프로그램 개발	단기	외교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 연계 ‘뿌리찾기 프로그램’ 개발	단기	외교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한민족청소년 통일캠프 개최	단기	외교부 통일부
	재외동포청소년 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단기	교육부 외교부

구분	정책과제	기간	관련 부처
	부모와 함께 하는 국내·외 프로그램 운영	단기	여성가족부 외교부
재미 동포 청소년 지원	한국어의 제2외국어 학점 인정 제도 지원	중장기	교육부 외교부
	재외동포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외동포 리더 간 네트워크 구축	단기	외교부
	재외동포청소년센터 건립 지원	중장기	외교부
	한글 교재 및 커리큘럼 개발·보급 지원	단기	교육부
	한글학교 연합캠프 개발 지원	단기	외교부 여성가족부
재중 동포 청소년 지원	조선족동포 교육 실태조사 실시	단기	외교부 교육부
	조선족동포에 한국학교의 적극 활용	단기	교육부
	사립학교 법인 등을 통한 조선족 교육 지원 활성화	단기	교육부 외교부
재일 동포 청소년 지원	한국학교 증설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단기	교육부 외교부
	일본 현지에서의 다양한 캠프 활동 지원	단기	외교부 여성가족부
국내· 외 고려인 청소년 지원	고려인 청소년센터 설치 및 교육 자원 지원	단기	외교부 여성가족부
	청소년 민족문화 캠프 실시	단기	외교부 여성가족부
	고려인 청소년의 예술학교 진학 지원	단기	외교부 교육부

(1) 법·제도 개선

① 재외동포기본법(안) 제정을 통한 차세대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인 추진

현재 재외동포 관련 법령은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교육, 현황 파악과 보호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으로 각각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미래 재외동포의 주역이 될 차세대 재외동포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동안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인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재외동포정책의 기본이념과 재외동포의 범위 규정, 기본계획의 수립,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법적 근거 등을 포함하는 재외동포기본법(안) 제정을 위한 논의가 1997년부터 진행되어 왔지만, 재외동포의 규정, 관련 정부부처간의 관계, 법 적용 범위 등의 문제로 아직까지 그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노영돈, 2003: 24~25).

차세대 재외동포를 포함한 재외동포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개별적인 재외동포 관련 법률 이외에 재외동포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재외동포기본법(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정기적인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재외동포정책 추진기구의 설치, 재외동포 연수 및 수련시설의 설치, 한글학교 등 전문가의 양성, 재외동포청소년 등 활동프로그램의 개발, 예산 확보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외동포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② 재외동포교육진흥법 제정 및 관련 정책 수립¹⁴⁾

재외동포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은 교육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교육부 허가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등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재외동포 청소년 교육 지원사업의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여 교육사업 추진 시에 부처 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다양한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재외동포 국내 초청 연수 교육에 사용되는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부재해서 기관별로 상이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재외동포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청소년 교육진흥법(안)을 제정하고, 이에 기초해서 전체 사업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단, 거주국 관련법과의 상충 여부, 국제법 저촉여부 등 관련 사항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재외동포 정책의 구체적인 집행기관인 재외공관 망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법 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거주국, 대상별로 교육정책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외동포 국내 초청 연수 교육을 위해서 연구를 바탕으로 국가 수준의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교육, 모국어해 강좌, 현장학습 등 모국 체험을 통한 한민족정체성 강화 프로그램 등 공통적인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③ 재외동포청소년 교류활동 확대를 위한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6조(교포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교포청소년의 모국방문, 문화체험 및 국내 청소년과의 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며,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시설이 주관하는 교포청소년교류활동의 확대·발전을 위해 국가가 행정적, 재정적

14) 본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한 「재외동포청소년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 6. 26) (pp. 55~57)에서 발표한 윤경남 교육연구사(국립국제교육원)의 토론문 내용을 재구성하였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제58조에서는 이와 같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교류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 이외의 부처나 기관에서 국내에 초청되는 재외동포청소년활동의 경우에 청소년교류센터나 청소년시설과의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전문적인 지도자나 활동프로그램의 활용 부족, 활동시설 이용에 따른 예산 지출 부담 등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외교부 등 타 부처나 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해서 재외동포청소년 교류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청소년활동진흥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④ 재외동포청소년 관련 사회단체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가 간 외교적 민감성을 감안하여 재외동포 거주 국가를 대상으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UN경제사회이사회 등록 단체인 (사)새마을운동중앙회와 (사)한국자유총연맹이 있는데, 두 단체는 1980년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1989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입법을 재정 보조를 받으면서 국제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재외동포 청소년 관련 사회단체 육성 법률을 통한 국내·외 사업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의 경우에 중국해외교류협회, 중국화문교육기금회 등 사회단체육성법을 통해 화교·화인에 대한 글로벌 추진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교육, 문화, 청소년, 국가별 단체 등 특수목적을 실현할 재외동포 대상 국제 협력 사회단체 육성이 필요하다.¹⁵⁾

⑤ 재외동포청소년의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및 군복무 제도 개선

국적법 제12조에 의하면,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또한 “병역법 제8조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18세)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현역,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고 규정되어 있다.

15) 이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된 재외동포 전문가 간담회(2015년 7월 23일)에서 김판준교수(길림사범대)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구성하였음.

하지만 2010년 국적법 개정에 의해서 해외입양인, 65세 이상의 영주귀국동포, 우수 인재 등은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복수국적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병역법 제7조, 제10조). 또한 최근에는 법무부에서 「우수인재 추천 및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공계 분야 우수 인재의 특별귀화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외국인 우수인재의 복수국적 허용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연합뉴스, 2015년 7월 19일자).

재외동포 후세들의 경우에는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쪽이라도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되어 병역이 부과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해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한인 2세들이 유학이나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재외동포신문, 2015년 4월 6일자). 재외동포들이 부당한 병역법으로 인하여 자기도 모르게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글로벌시대에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기회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 복수국적 제도 등 관련법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재외동포 군복무의 경우에 재외동포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초·중등학교에서의 원어민 교사근무, 방위산업체 근무, 정부부처 통역요원 등 다양한 형태의 대체복무 제도를 만들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¹⁶⁾

⑥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한글(한국)학교 등 재외동포교육기관의 제도적 지원 확대

현재 한글학교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외국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에 의해서 한국어, 한국사, 한국문화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또한 제35조(교과서 등의 제작·보급)에 의해서 교과용 도서와 교육용 자료 및 교과용 도서 등을 무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재외동포청소년들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 지원과 격려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즉, 국내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재외동포청소년들이 한국어 관련 교육과정에 국한된 지원에서 넘어서서 수련활동, 문화예술활동, 교류활동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정기간 한글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에게 한국 교육부 발행의 명예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게 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재외동포청소년 격려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16) 이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된 재외동포 전문가 간담회(2015년 7월 23일)에서 강성봉대표(동북아신문)가 제안된 아이디어를 토대로 구성하였음.

⑦ 재외동포청소년 현황 조사 정례화

정부 정책 수립에 있어서 정책 대상의 파악은 필수적인 조건이다. 하지만 재외동포청소년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자료조차도 없는 상황이다. 현재 재외동포 인구에 대한 조사는 각국에서 재외공관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정확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나마 재외동포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되고 있다. 하지만 재외동포청소년의 경우에는 전혀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각국의 재외 공관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 재외동포 조사항목에 연령 등의 항목을 추가하여 재외동포청소년 인구가 파악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국가별로 처해 있는 청소년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재외동포청소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2) 정책 추진체계 마련

① 정부부처 내 재외동포청소년과 신설

현재 정부부처 내에 재외동포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부서는 재외동포영사국 내 재외동포과와 재외국민보호과, 교육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체류관리과 등이 있다. 외교부 재외동포과나 재외국민보호과에서는 전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나 정책과제가 발굴되고 있지 못하고, 교육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에서는 해외교육기관이나 파견공무원 관리에 초점이 있으며, 법무부 체류관리과에서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사항만 다루고 있어서 재외동포청소년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부서가 없다. 국제화 시대 한민족 발전에 차세대 재외동포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다양해지는 재외동포청소년의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들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는 정부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재외동포정책에서 차세대 정책의 비중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향후에도 더욱 확대될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외교부에 재외동포청소년과를 설치하여 선제적으로 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해외 각국의 재외동포청소년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현안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② 국회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재외동포위원회 설치

재외동포의 문제는 미래 한민족 공동체의 발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사안이며, 재외동포기본법 등 법률적으로 검토할 사안이 산적해 있다. 하지만 재외동포 관련 법안이 사안에 따라서 외교통일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으로 분산되어 논의되어 재외동포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사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정책적 관심의 부족으로 법안 처리가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재외동포 문제를 별도로 다룰 수 있는 국회 내 위원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재외동포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재외동포위원회를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 설치함으로써 재외동포 관련 법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재외동포청소년 통합지원센터 및 해외 지역별 거점 지원센터 설치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내와 해외 지역을 연계하는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는 재외동포청소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해외에는 모국과의 연계 및 지역 청소년 연수 및 교류, 정보 제공 등의 다양한 기능을 한 곳에서 수행할 수 있는 지역별 지원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재외동포청소년 통합지원센터는 재외동포청소년의 교육과정 및 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외에 정보를 제공하며, 재외동포청소년들이 국내에서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서 센터 내에 재외동포청소년 연수시설이나 교류센터 등을 새롭게 설치하거나 기존 청소년시설이나 센터를 지정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해외 지역별 지원센터에서는 모국과의 연계 및 다양한 정보 제공, 연수 실시 등의 다양한 기능을 한 곳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 내 개별 시설과의 연계 지원활동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대한민국이 각국에 설치한 문화원, 교육원, 해외홍보원 등의 여러 정부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정부의 해외 거점시설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서 정부의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④ 재외동포청소년시설 건립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들을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제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제18조). 또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서는 전국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와 시·군·구 단위에 청소년수련관, 읍·면·동 단위에서는 청소년문화의집을, 그리고 이 밖에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텔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재외동포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재외 국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거주국에서는 청소년시설의 설치를 지원하여 이들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시설의 설치에는 국내의 사례를 참고로 해서거주국 상황을 반영하여 정부와 거주국에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ODA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시설 건립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의 연계를 통해서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국가의 재외동포청소년 시설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⑤ 재외동포청소년 연수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및 청소년활동시설과의 연계·협력

재외동포청소년들의 민족정체성 함양과 글로벌 차세대지도자 육성을 위해 재외동포재단에서는 전 세계 중·고·대학생 청소년이 참가하여 모국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는 모국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재외동포재단, 2014a: 27). 하지만 세계한인 청소년 모국 연수프로그램은 문화체험 수준에 머물러 청소년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연수를 대행하는 국내 교육기관의 경우에도 단순히 협력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세계 한인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 연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연수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설 지정이 필요하며, 세계 한인 청소년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지역 내 각종 시설과 자원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수 프로그램을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⑥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글로벌 시민역량 개발센터 지정·운영

재외동포청소년을 미래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한민족 정체성 교육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재외동포청소년들이 거주국에서 잘 적응하고 성공적인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민주시민역량의 개발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이나 공공청소년시설 등 기존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단체 및 시설을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글로벌 민주시민역량개발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한민족 정체성 교육과 함께 글로벌 민주시민으로서의 다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서 균형있고 조화로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수련시설과 각종 단체 및 기관 간에 재외동포청소년 지원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글로벌 민주시민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¹⁷⁾

⑦ 재외동포청소년 맞춤형 정보 시스템 구축

재외동포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활동, 교육, 연수, 취업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이 각 부처나 단체 및 기관별로 제공되고 있어서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재외동포청소년들이 적절한 시기에 자신에게 적합한 정보의 이용이나 프로그램에 참가하기가 쉽지 않다. 재외동포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손쉽게 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정보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스템 구축 후 재외동포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리안넷(www.korean.net)과의 연동을 통해서 이용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3) 재외동포청소년 관련 전문가 양성 및 지원 확대

① 재외동포청소년 교사뱅크 구축

거주국에서 재외동포청소년 교사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소년 교사뱅크제를 운영한다. 한국에서 초·중등학교 교사나 청소년활동 지도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거주국에서 한글학교·한국학교 교사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지도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재외동포청소년 교육 및 활동 지도를 위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한다. 교사뱅크제를 통해서 한글학교에서 필요한 인력에 대한 안내와 충원을 실시한다. 교사뱅크제는 먼저 지역별 구축을 기본으로 하고, 점차적으로 지역 간 교사뱅크제 연계를 모색한다.

17) 이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된 재외동포 전문가 간담회(2015년 7월 23일)에서 박옥식대표(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가 제안된 아이디어를 재구성하였음.

② 한글학교 교사 자격증 제도 신설

한글학교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한글학교 교사 자격증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한글학교 교사 자격은 1, 2, 3급 등으로 단계적으로 할 수 있으며, 일정한 기간 이상의 한글학교 교사의 경력과 대한민국 교육부가 인정한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에게 한국에서 실시하는 문화프로그램 및 연수 기회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격려할 필요가 있다.

③ 재외동포청소년 교육 양성과정 개발 및 전문가 양성

재외동포청소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주국에서의 재외동포청소년 교육 및 국내·외 연수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재외동포청소년 전문가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재외동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국제교육원이나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등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현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 교육과정 중에 재외동포청소년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지도사들에게 재외동포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활동지도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하게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국내에 초청되는 재외동포청소년에 대한 체험활동 지도가 가능하며, 더 나아가서는 해외에 파견되어 거주국에서의 활동기회를 갖게 할 수 있다.

④ 외국에 교사 및 청소년활동지도자 파견 확대

교육부에서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 한글학교, 한국교육원 등의 재외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운영 지원을 위하여 교원 및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한글학교에 대한 교원 파견은 없고, 한국학교에는 학교별로 1명씩을 파견하고 있으나 구주·대양주지역의 경우에는 조금 적게 파견하고 있고, 한국교육원의 경우에도 북미지역을 제외하고 1명씩을 파견하고 있다. 주재관(교육관)의 경우에는 1명 이상을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교육기관에서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1인 또는 그 이하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사 파견은 부족하며 이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외동포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활동지도자의 파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재외동포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은 교육 지원 이외에 특별한 것이 없다. 따라서 재외동포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활동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서 한국 내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것과 같은 균형적인 성장 기회가 부족하다. 특히, 방학 중에는 재외동포청소년들의 상당수가 여가 시간에 비해서 다양한 활동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육성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 등에게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교사 파견과 같이 현재 청소년시설 등에서 재직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 중에서 선발할 수도 있고, 신규 모집하여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방학 중에 이루어지는 단기적인 파견에서부터 1년, 2년, 3년 등으로 다양하게 실시할 수 있다. 거주국 재외동포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요구를 파악하고 단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⑤ 국내와 현지 전문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재외동포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맞는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국내 전문가와 해외 현지 전문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가령 국내에서 만들어 재외동포청소년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교재의 경우에 거주국 상황에 적합하지 않아서 현지에서 교재를 새롭게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지만 현지에서 사용하지 않게 되면 예산이 낭비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재개발 등을 비롯해서 다양한 활동 등을 위한 재외동포청소년 관련 정책 자문위원회, 추진위원회 구성 등에 국내 전문가뿐만 아니라 해외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과제의 경우에 오히려 현지 전문가들이 주도하고 국내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현지 전문가에게 보다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의 전환도 필요하다.

(4)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① 재외동포청소년 리더십훈련 프로그램 개발

차세대 지도자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리더십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미주, 유럽 등의 지역 재외동포청소

년 혹은 전 세계 재외동포청소년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재외동포청소년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한다. 문화예술분야, IT분야, 경제분야 등의 주제별로 리더십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제안된 우수한 아이디어의 경우에 멘토와의 연계를 통해서 프로젝트화 해서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멘토는 국내 및 거주국을 포함하여 관련 산업 및 학문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청소년들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로 하여금 관련 기업에의 취업이나 학문기회 등에 대한 도움을 제공한다. 특히, 현재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재외동포 및 차세대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통하여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② 거주 지역별 한민족 축제 개발 지원

한민족축제는 한민족 관련 문화공연, 전시회, 강연, 놀이, 음식 등을 통해서 한민족들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장으로 재외동포청소년들에게 한민족문화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국내에서도 각 지역축제를 개발하여 그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 경제 발전과도 연계하고 있다. 재외동포들의 경우에도 거주 지역별로 이주의 역사가 다르고 문화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지역별 특색에 맞는 한민족축제를 개발하고 지역 동포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주배경과 한민족문화에 대한 자연스러운 체험기회를 갖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지역축제에 관한 전문가로 하여금 적절한 자문 기회를 제공하게 하고, 필요하면 현지에서의 축제전문가 파견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③ 재외동포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확대

현재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은 국가 간 청소년교류 프로그램, 대한민국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청소년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국가 간 청소년 교류프로그램은 각국 청소년 담당 부처와의 약정 등에 의해 매년 정기적으로 청소년 관련 정보와 경험 등을 교환하고 각국의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2014년도에 22개국에 파견 302명, 초청 316명 등 총 618명의 교류를 시행하였고(여성가족부, 2014: 118), 대한민국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은 청소년들의 자아실현과 글로벌 역량강화 및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방학을 이용해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2014년에는 아시아 8개국에 16개팀 311명의 봉사단을 파견하였다(여성가족부, 2014: 123). 또한 청소년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아시아 청소년들에게

한국문화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국제청소년축제, 국제잼버리, 아시아 청소년초청연수, 국제청소년포럼 등의 행사에 8,600여명의 청소년이 참가하였다(여성가족부, 2014: 124). 외국 청소년들과의 다양한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들 프로그램에는 재외동포청소년을 포함하는 경우는 드물다. 재외동포청소년의 경우에는 외교부에서만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이 여성가족부 프로그램에서는 재외동포청소년들이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본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재외동포청소년들을 미래 한민족 발전을 위한 동반자로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부처 간의 협력을 통하여 재외동포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④ 다양한 한민족 체험 프로그램 개발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 청소년들로 하여금 유대민족에 대한 이해를 위해 매년 1억 달러를 투자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참가 대상에 있어서 일반청소년뿐만 아니라 의대생, 음악가, 금융전문가 등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적지 탐방, 하이킹, 생태탐방, 역사탐방, 자원봉사 등의 다양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기간별로는 10일 이내의 단기간 프로그램에서부터 몇 달 간에 걸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연령별, 대상별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재외동포청소년들로 하여금 한민족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 연계 ‘뿌리찾기 프로그램’ 개발

재외동포청소년들에게 한국에서의 체험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한국 내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고등학교와의 결연 등을 통한 교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부 한글학교 등에서 한국 내 지역 학교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가 실시되고 있지만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외동포청소년들과 국내 지역 청소년들 간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특성화된 다양한 한국문화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경우에 1999년부터 지역별, 주제별로 특성화된 다양한 캠프를 운영하는 ‘뿌리찾기여행’을 통하여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지역 문화체험과 재외동포와 지역청소년간의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관련 단체, 그리고 기업의 참여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외동포청소년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자체 부담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항공료 등 교류 비용의 일부를 기업이 후원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⑥ 한민족청소년 통일캠프 개최

한민족공동체 발전에서 재외동포들에게 기대하는 역할 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반도 통일에의 기여라 할 수 있다.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거주국 및 국제사회에서의 유리한 여론의 형성과 통일을 위한 비용 지원 등이 요청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재외동포들의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다. 특히, 미래 통일사회 주역으로서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과 교류는 향후 한반도 통일사회 형성과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들과 탈북청소년 등이 함께 참여하는 캠프를 운영함으로써 한국어교육 이외에 민주시민교육 등 청소년들 간에 통일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사전에 통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정기적으로 국내와 해외에서 캠프를 실시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청소년 및 국민들의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단순히 상호 방문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에 그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서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다. 통일캠프 등과 같이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뿐만 아니라 한반도 미래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⑦ 재외동포청소년 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본 연구 조사 결과를 통해서 가정에서의 부모의 한국에 대한 생각이나 한국어 사용, 한국 뉴스 시청 등 부모의 역할은 재외동포청소년들의 한민족 정체성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재외동포청소년들의 한민족 정체성 형성을 위해서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모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와 가정에서의 생활 등에 대하여 안내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이들 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가정에서 재외동포청소년들이 한국에 대해서 보다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⑧ 부모와 함께 하는 국내·외 프로그램 운영

현재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재외동포청소년에게만 초점을 두고 있는데, 재외동포청소년들의 생각이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모에 대한 정책 개발도 필요하다. 특히, 재외동포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자신의 정체성이나 한민족에 대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에 초청되는 청소년프로그램이나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수나 캠프 등에 재외동포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 재외동포재단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에 가족프로그램을 추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족 대상이나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를 보다 확대하여 재외동포청소년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김경준, 김태기(2015). **외국의 재외동포 청소년정책 비교 연구(15-R15)**.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정숙, 임채완, 김경근, 서범중 (2008). **재외한인 민족교육 모형개발과 네트워크 구축**. 서울: 북코리아.
- 노영돈(2003). **재외동포법개정,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서울: 다해.
- 여성가족부(2014). **2014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윤인진(2013). 미래지향적 재외동포정책의 방향: 재외동포정책의 목표와 추진체계의 재정립, **민족연구 54권 0호**, 4~22.
- 이진영, 박우(2013). 미래지향적 재외동포정책의 방향: 한국의 차세대 재외동포 정책, **민족연구 54권 0호**, 22~24.
- 이진영, 장안리, 김판준, 임영언, 정호원, 성광일(2015). **외국의 재외동포 청소년정책 비교 연구 (15-R15-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임영상, 윤인진, 이진영, 박우, 한준태, 예동근, 이병조(2012). **미래지향적 재외동포정책 방향-초국가적 환경에서의 재외동포정책과 민족공동체**. 서울: 외교통상부.
- 재외동포재단(2013a). **2013 재외동포 현황**. 서울: 재외동포재단.
- 재외동포재단(2013b). **2013 재외동포재단 연차보고서**. 서울: 재외동포재단.
- 재외동포재단(2014a). **2014 재외동포재단 연차보고서**. 서울: 재외동포재단.
- 교육부(2015). 교육부 조직 소개. http://www.moe.go.kr/web/100034/site/contents/ko/ko_0371.jsp에서 2015년 2월 10일 인출.
- 연합뉴스(2012. 8. 14일자). '재외동포 통계 부실... 정책효율성 저하 우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8/10/0200000000AKR20120810170400371.HTML?did=1179m>에서 2015년 2월 9일 인출.
- 연합뉴스(2015. 7. 19일자). '외국인 이공계 인재 한국국적 따기 쉬워진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19/0200000000AKR20150719000800004.HTML?input=1179m>에서 2015년 8월 26일 인출.
- 월드코리안뉴스(2012. 9. 3일자). 2012 세계한민족축전 서울, 인천, 전북에서 7일간 열려
<http://www.worldkorean.net/news/articleView.html?idxno=8071> 에서 2015년 2월 10일 인출.

재외동포신문(2015. 4. 6일자). '선천적 복수국적 예외규정 설정해야'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8526>에서 2015년 7월 8일 인출.
청소년기본법(2015. 6. 22). 법률 제13370호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SRCH_IN_RESULT=false&LAW_SRCH_TYPE=LAW_NM&SUB_NM=청소년기본법&BEF_SUB_NM=청소년기본법&LAW_CHECK=true&ORD_CHECK=true®L_CHECK=true&srchinresult=false&lawsrcdtype=LAW_NM&subnm=청소년기본법&befsubnm=청소년기본법&lawchk=true&ordchk=true®lchk=true&LAW_ID=A0728&PROM_NO=13370&PROM_DT=20150622에서 2015년 3월 10일 인출.

청소년활동진흥법(2015.2.3.) 법률 제13182호.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SRCH_IN_RESULT=false&LAW_SRCH_TYPE=LAW_NM&SUB_NM=청소년활동진흥법&BEF_SUB_NM=청소년활동진흥법&LAW_CHECK=true&ORD_CHECK=true®L_CHECK=true&srchinresult=false&lawsrcdtype=LAW_NM&subnm=청소년활동진흥법&befsubnm=청소년활동진흥법&lawchk=true&ordchk=true®lchk=true&LAW_ID=A1840&PROM_NO=13182&PROM_DT=20150203에서 2015년 8월 28일 인출.

청소년 활동 강화와 복지 지원

인 쇄 2016년 3월 30일

발 행 2016년 4월 4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휘문인쇄 전화 1661-7576 대표 김점순

※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에 무단 전재·복제를 금함